

충남발전연구원 개원 10주년 특별 기념호

열린충남



통권 31호 2005

THE CHUNGNAM REVIEW

충남의 미래비전과 전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

충남 노인인적자원 개발의 방향과 과제

6

열린충남

www.cdi.re.kr 통권 31호 2005. 여름

2005년 6월 7일 발행 | 발행인 김용웅 | 편집위원장 김정연 | 편집위원 송두범, 성태규, 이상진, 이인배, 이충훈, 최병학 |
편집 간사 이길구 | 발행처 충남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138-42 | 전화 042-820-1123 |
FAX 042-824-7817 | 디자인·인쇄 아름다운디자인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83-51(042-672-2161)



권두언 충남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 김용웅

특집 충남의 미래비전과 전략

- 4 충남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 이규방
- 23 충남의 지역혁신과 산업발전 전략 / 김선배
- 47 충남 농업·농촌개발의 방향과 전략 / 김정호
- 68 21세기 지속가능 충남발전을 위한 환경비전과 전략 연구 / 정희성, 박창석, 엄상근

충남논단

- 92 도시마케팅을 위한 도시브랜드 추진전략 / 이충훈
- 105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조성 전략에 관한 연구 / 박철희

지상포럼

- 12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
- 128 충남 노인인적자원 개발의 방향과 과제



충남의 도시

- 152 서해안시대의 중심, "해양 웰빙시티" - 태안 / 조봉운

생태영농 탐방

- 161 지역순환형 생태농업을 향해 가는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연합회 / 유병연

오피니언

- 168 기업도시의 성공조건 / 김용웅
170 지역경쟁력과 장소마케팅 / 김용웅

충남소식

- 172 도정 소식
176 연구원 소식
179 RHRD 소식
180 RIS 소식



충남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발전연구원이 개원된 지 어언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싱크 탱크가 되고자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개원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은 우리에게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화시대가 전개되어, 시장논리에 따른 경쟁력만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결정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외환위기를 통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이 국정기조로 정착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차원에서의 지난 10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의 개통도 있었지만, 신행정수도건설 문제는 조선 개국 당시 계룡천도 논란 이후 지역 차원에서의 최고 대사이었습니다.

위헌 판결 이후 비록 신행정수도의 중간단계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었지만, 충남은 향후 국가혁신을 주도하는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봅니다.

그러나 충남발전연구원은 연륜이나 조직, 연구원 규모 등을 볼 때 아직 '열살 먹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며 충남 개혁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아직도 솔직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이 요구하는 고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할 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봅니다.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인 충청남도가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연구원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이규병 | 국토연구원장

I. 충남의 여건과 발전 잠재력

1. 충남의 경제사회 여건과 문제점

1) 인구 및 지역경제

- 충남의 인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1998-2003년 기간 동안 총 1.1만명 증가에 그침
 -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은 신산업지대 형성,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가 지속
- ※ 서천·청양·태안·금산군 등은 인구 7만 이하의 과소지역
- 산업구조는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운수·통신 등의 SOC 및 기타산업의 비중은 낮음
 - 산업별 총생산은 1차산업이 13.7%로 전국평균의 3배이며, 취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40.3%로 전국보다 3배 이상 높음

2) 지역간 불균형 발전

-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가 지역발전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심거점의 발달이 미약

- 대전, 청주 등 전통적인 중심도시와 단절되어 자체의 혁신역량 및 고급서비스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
- 산업인프라가 집적된 북부지역과 농어촌 지역인 중부 및 서해안 지역과의 발전 격차가 심화

3) 인프라의 부족과 물류유통 기반의 쇠퇴

- 교통망의 편중 발달과 교통수단간 연계가 미흡하며, 특히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부족
 - 서북부지역-대전간, 서부해안-중부내륙간 기간교통망이 미흡
- 항만시설이 부족하여 국제물류 기반이 취약
 - 국제무역을 위한 컨테이너 전용부두 계획이 미흡하며 무역항은 산업단지 및 발전소 전용항만 위주로 개발되어 일반화물 처리가 곤란
- 지역상권은 광역교통망의 발달로 대도시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의 경쟁으로 재래시장과 수퍼마켓의 상권을 잠식

4) 연안 및 하천 수질의 악화

- 수자원 부존량은 108억톤/년으로 단위면적 기준 환산시 전국의 1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풍부함
- 충남지역의 단일유역인 삼교천은 북부지역의 산업 및 인구 집중으로 수질오염이 심화
- 서해연안의 수질은 연안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자정작용 능력이 감소하여 악화가 진행되고 있음

2. 충남발전의 새로운 기회

1) 충남의 입지잠재력 부각

- 연기·공주지역에 행충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전국에서 2-3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면 충남의 국토중심지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
- 환황해 경제권의 부상과 서해안 시대의 전개에 따라 충남의 입지잠재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고속철도,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교통인프라의 확충으로 충남의 산업입지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증대될 전망
- 도청이 충남의 중심부로 이전할 경우 공간구조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

2) 지역혁신의 핵심자원인 고급인력 및 산업기반의 집적

- 도내에 34개 대학이 입지하며, 교수 3,890명, 대학생 144,473명, 대학원생 10,325명을 수용
 - 천안 반경 10km 이내에 12개 대학에 10만명이 재학하여 국내 최대의 대학촌을 형성
- 대덕연구단지가 인접하여 첨단 신기술 이전·보급 여건에 유리하며, 계룡대 입지로 군·산·학 연계체제 구축이 가능
- IT, 문화산업, 인삼·약초, 농업바이오 클러스터 등 새로운 성장산업의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

3) 거시적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 초고속 정보망 및 교통망의 확충에 따라 경제·사회 활동이 광역화되고 지역간 경쟁이 격화될 전망
-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전개에 따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할 전망

4) SWOT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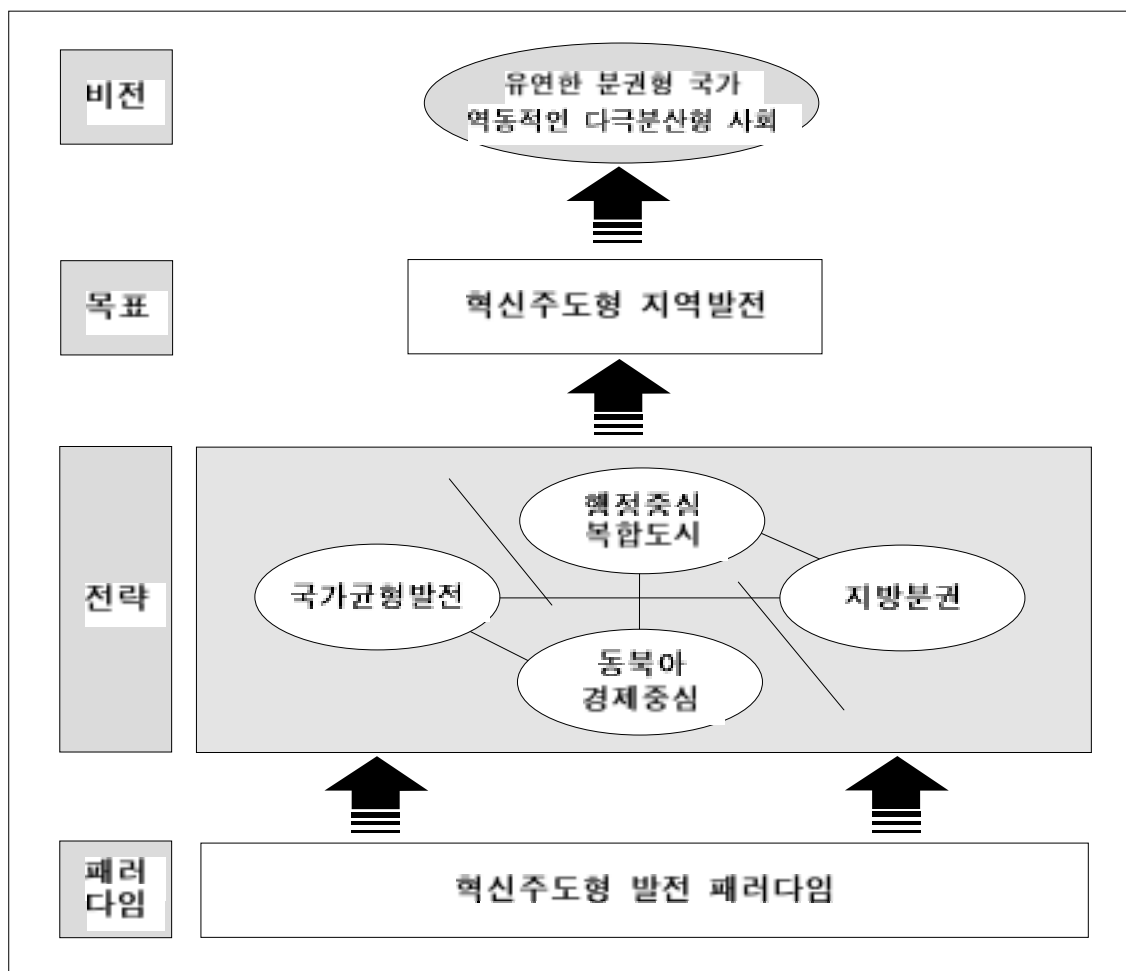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중심지로서의 입지잠재력 ■ 풍부한 문화·역사·관광자원 ■ 대학 및 고급인력의 집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추관리 및 전문서비스의 취약 ■ 지역중심지 발달의 미약 ■ 도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
기 회 (Opportunity)	위 험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중추행정기능의 역내이전 ■ 환황해 경제권의 급성장 ■ 서해안지역의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 고착화 ■ 북부지역의 난개발 가능성 ■ 지역개발 성과의 외부 유출

II. 국가정책의 방향과 도정 기초

1. 국가재도약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1) 국가발전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유연한 분권형 국가 및 역동적인 다극분산형 사회의 건설을 통해 국가재도약 실현
- 목표 :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에 의한 자립형 지방화 추진



[그림 1]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

2) 주요전략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충남 연기군·공주시 일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국무총리 및 재정부 등 12부 4처 2청과 그 소속기관을 이전
- 개발규모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며, 인구밀도는 ha당 300~350명 수준으로 설정
 - 예정지역: 충남 연기군·공주시의 5개면 33개리의 73km²(2,210만평)
 - 주변지역: 충남 연기군·공주시, 충북 청원군의 9개면 74개리의 224km²(6,780만평)

(2)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 지자체, 지방대학, 연구소, 기업, 시민단체 등 혁신주체들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학습과 혁신을 통해 자립적 지역발전을 추진
 - 생산과 연구개발기능이 단절된 기존의 연구단지와 국가공단을 두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 핵심선도기술 개발, 공공연구센터 유치, 전문인력 양성 추진
 -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
 - 지역의 비교우위와 산업기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육성
- ※ 충남의 전략산업: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산업

□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역의 발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양질의 교육 및 주거여건을 구비한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으로 육성
 -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와 연계된 혁신도시(농업바이오도시, 정보IT도시 등)를 주요 거점별로 건설
- 혁신도시의 개발유형은 기능과 입지, 개발규모 등에 따라 재개발 방식, 신시가지 개발방식, 신도시형 등 3가지로 구분

□ 신활력지역의 발전 촉진

-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간 매년 2천억원 지원
- 지역 내부인사, 출향인사, 인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잠재력 강화
 -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혁신 System 구축, Actor/Innovator의 혁신 역량 강화, 비교우위에 입각한 선도 Project/Program 개발
- 주5일 근무제를 활용하여 5都2村사업(영농체험, 관광휴양, 전원주택 등)을 활성화하고, 1·2·3차 산업간 융합을 시도

(3)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추진

☐ 금융허브 육성

○ 우리나라를 자산운용업에 특화된 금융허브로 육성

- 연기금 및 외환보유고 등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자산운용업을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며, 구조조정, 개발금융 등 특화금융도 적극 발전
-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금융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을 개선

☐ 물류허브 육성

○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 3대 물류거점인 인천, 부산, 광양의 인천공항 2단계 확장사업 및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건설하며 배후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을 육성
-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인력 양성, 공항·항만의 생산성 향상, 효율적인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외국기업 물류센터 유치 등 추진

☐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

○ 첨단산업 육성, 물류허브, 금융허브, 관광허브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

- 투자유치 대상선정, 유치활동, 투자인센티브와 제도 개선, 투자 성과 모니터링 등을 일관된 체제하에서 추진

(4) 지방분권의 강화

☐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및 원칙

○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책임하에 집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

- 지역의 자율과 주민참여의 원칙
 -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 국가사무의 이양, 기관위임사무의 정비, 사무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및 교육자치의 개선
 -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제고와 지역의 재정 자율성 강화
 - 지자체의 조례제정, 인력관리 등 자치행정역량 강화
 - 국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제 구축

2. 충남의 도정 기조와 성과

1) 관선기(1990-1995)

- 대중국 교류 확대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서해안개발사업」을 능동적으로 수용
- 지역 차원에서는 백제문화권개발계획('94), 금강종합개발계획,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94) 등을 추진
- 막대한 투자재원 소요와 복잡한 선행절차 요구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였음

2) 민선 1, 2기(1995-2002년)

-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이 장소발전(development for place) 중심에서 주민의 번영(development for people) 중심으로 변화

- “경쟁력을 갖춘 개성있는 충남”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강조하는 한편, 행정혁신을 통한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 실현에 역점
- “푸른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 충남 환경장기비전 수립 등 환경마스터 플랜을 구체화

3) 민선 3기(2003년-현재)

- 「인간·지식·문화」로 집약되는 21세기 시대조류의 변화에 부응하여 「人本복지」와 「知識경영」을 도정의 2대 기조로 설정
 - ※ 3대 도정목표: 지역경쟁력 제고, 미래인재 양성, 자치역량 강화
-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Heart of Korea)로 도약하기 위해 일류경쟁력 배양과 국가발전의 성장동력 창출을 선도
 - ※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권역별·테마별 관광산업 육성,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국가행정의 중심지로 발전

4) 평가

- 선택과 집중의 결여로 도가 보유하는 잠재력의 극대화에 실패
- 지역의 인적, 물적 특성에 대한 세밀한 연구조사의 결여로 특성화된 only one 상품 개발에 실패하고 모방품의 범람을 초래



새로운 트렌드인 자립적 지방화, 고속화, 경쟁심화 등에 대응하여
충청의 attractiveness 경쟁에서의 승리가 생존의 필수조건

Ⅲ. 충남발전의 비전·목표와 전략

1. 비전 및 목표

1) 비전

새로운 국토중심으로서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유하는 충남

2) 목표

- ① 신성장 동력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 ② 전통산업의 개성화와 현대화
- ③ 특색있는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
- ④ 풍요롭고 여유로운 도·농 공동체 형성

2. 추진전략

추진전략	정책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간구조 재편과 지역균형발전 ② 기간 인프라의 확충 ③ 신성장동력 전략산업의 육성 ④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문화관광 육성 ⑤ 삶의 질 제고 ⑥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Hardware 개선 ② Soft Power 고도화 ③ Institutional 기반구축

IV.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1. 공간구조 재편과 지역균형발전

신산업벨트, 서해안권, 중부권으로 특성화된 공간개발 전략을 통하여 지역별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 촉진

1) 3대 권역 설정

(1) 신산업벨트

- 연기-천안-아산-당진-서산을 연결하는 지역을 광역 아산만권 개발을 선도하는 첨단 지식기반산업과 해양물류산업벨트로 육성
 - 바이오, IT, 철강신소재, 정밀화학, 자동차, 전자산업의 육성
 - 대산-당진-평택항의 통합운영체계 구축
- 신산업벨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인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
 - 신산업벨트와 수도권의 평택, 충북의 오창과 연계 발전체계를 구축하여 중부권의 광역산업지대를 형성

(2) 서해안권

- 태안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와 수도권 및 충청권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해양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 수도권 및 호남권의 서해안 지역과 연계 발전체계를 구축
 - 서천과 군산지역의 산업 및 물류기능의 연계발전 도모

(3) 중부권

- 북동부의 신산업벨트와 서해안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 대도시권의 배후 지원 및 휴양기능을 중점 육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 대덕과 연계 발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전통산업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역사·문화·환경·향토산업의 융합을 도모



[그림 2] 공간구조 구상

2)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광역 대도시권의 형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광역도시권, 신산업벨트권, 주요 거점 지역간의 상호 기능분담 및 연계를 통한 도시네트워크 형성
- 지자체간 협력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도시권의 체계적인 성장관리를 유도
 - 도시간 광역시설의 분담배치 및 공동이용,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 내륙 및 서해안지역에 대한 행정중심도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특화산업을 육성

2. 기간 인프라의 확충

1) 환황해권 교류거점 항만의 개발

- 환황해권 시대의 진전에 대응하는 항만 건설
 - 서해안 신산업지대의 물류수송을 지원하는 대산항, 당진항을 건설하고 평택항과 연계하여 서해안의 관문항으로 육성
- 항만연계 교통망의 확충
 - 대산항-당진항-평택항 연결 도로 등 항만연계 교통망을 개설하여 항만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

2) 철도 및 간선도로망의 확충

- 철도망 확충
 - 아산만권과 북부해안 지역의 대량 수송수요에 대응하여 동서산업선(천안-당진-대산) 건설을 추진
 - 서해안 지역의 물동량 및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장항선 개량화 및 경부선·호남선 복선전철화사업의 본격 추진
 -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통하여 수도권과 호남권을 연계하는 교통결절지로서의 위상을 강화
- 간선도로망 확충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및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을 조기건설하여 도내 1시간 생활권 시대를 달성
 - 지역중심도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개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

- 충남서해안 지역의 산업·관광벨트 도로망을 구축하여 금강변 산업관광도로와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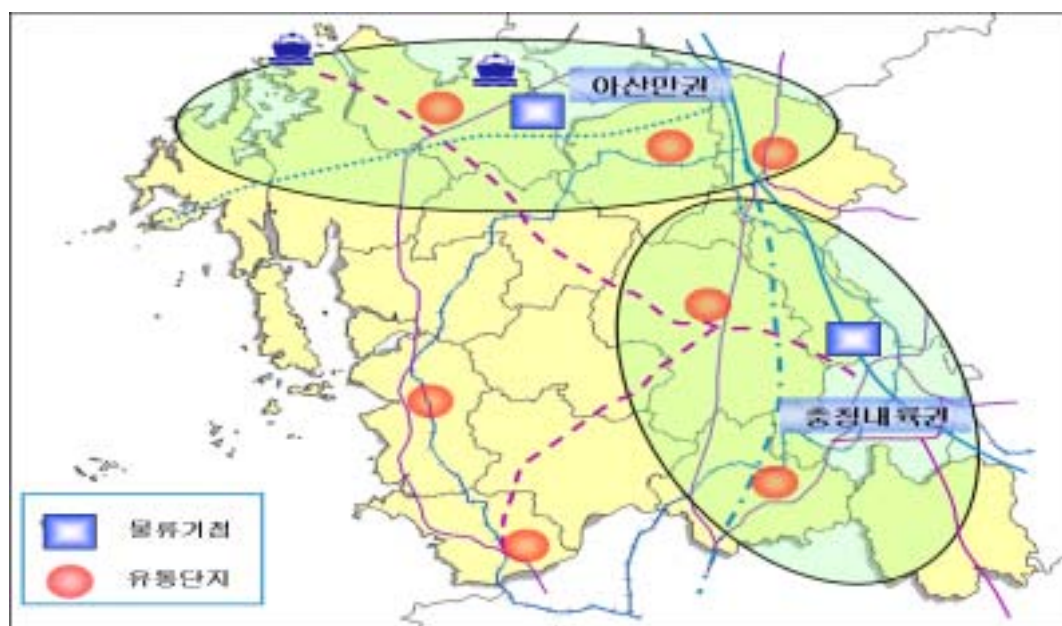
[그림 3] 인프라 개발 구상

3) 신교통체계 구축 및 정보화의 추진

- 친환경적 교통체계 실현을 위해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추진
 - 천안-아산, 행정중심복합도시-계룡-대전, 금산-대전 구간 등 도시광역화에 대응하여 경전철 건설을 추진
- 기존교통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첨단교통체계의 구축
 - 도시의 연담화 및 교류증대에 대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종합교통정보센터를 설립
- 시공자재(Ubiquitous) 정보화의 추진
 - 의료, 사회복지, 생활정보 등의 생활정보서비스와 전자정부 및 민원행정, 지역커뮤니티, 공공서비스를 통합하는 디지털 충남의 실현

4) 물류·유통기반의 강화

- 광역물류권의 설정 및 물류거점 육성
 - 아산만권 : 충남 북부지역의 산업단지 지원 및 농축산물 처리를 위한 물류거점 기능 수행 및 수도권 물류의 흡수
 - 충청내륙권 : 대전, 청주 등 충청권 중심부의 물류유통 거점기능을 담당하여 전국의 내륙물류거점으로 육성
- 지역별 물류시설의 확충
 - 천안, 아산, 당진, 공주, 논산, 보령, 서천 등에 유통단지를 건설하여 지역별 물류를 종합 처리
 - 서산(수산물), 금산(인삼·약초), 예산(과수·채소), 홍성(축산물), 청양(구기자·고추·임산물) 등에 지역특산물 유통단지를 건설



[그림 4] 물류거점 개발 구상

- 농산물유통의 혁신과 마케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농산물 산지유통거점 조직에 대한 지원과 품질인증 및 브랜드화, 마케팅 지원체제를 구축

3. 신성장동력 전략산업의 육성

1)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4대 전략산업의 육성

○ 전자·정보기기산업

- 천안, 아산지역을 디스플레이 기술혁신의 핵심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 아산의 전자·정보기기 집적화단지 조성과 성거지방산업단지의 Display산업 육성,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육성

○ 자동차·자동차 부품산업

-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화를 추진하여 첨단부품 R&D 집적화센터를 건립하며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특화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

○ 첨단문화산업

- 충남의 전통문화와 첨단정보기술을 결합하여 게임, 문화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지털영상, 모바일콘텐츠 등 첨단문화산업을 육성

※ 충남 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콘텐츠 개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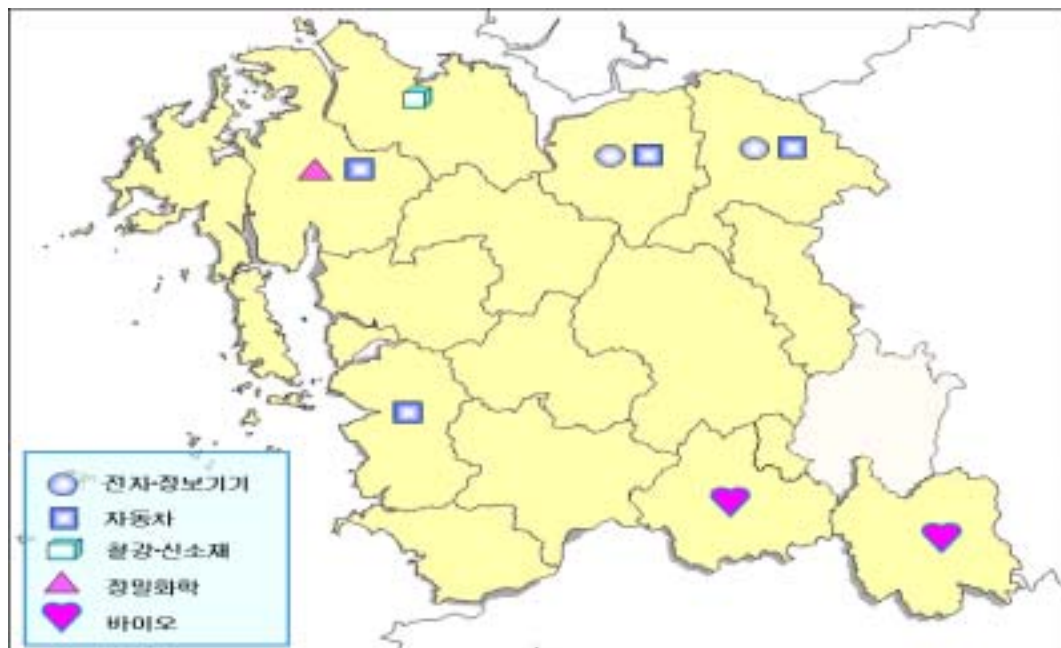
○ 농·축산 바이오 및 정밀화학

- 생명공업(기능성 식품), 인삼·약초바이오, 축산바이오 분야에 특화하여 농축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

- 정밀화학산업을 육성하여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고부가가치화

2)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육성

- 지역별, 산업단지별로 전문업종을 육성하고, 배후지역에 연관산업 집적지를 형성
 - 천안, 아산, 보령 : 자동차, 반도체, 전자·정보기기
 - 당진, 서산 : 철강·신소재, 정밀화학
 - 논산, 금산 : 바이오



[그림 5] 전략산업 클러스터 개발 구상

3) 전략산업 지원기관의 육성

- 전략산업별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기관을 조성하고 운용기반을 확립
- 기업지원서비스의 산업인 컨설팅, 정보지원, 협력중개 등의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소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

-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및 창업기업 및 성장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용, 충청권 벤처 프라자 운영 사업 등 추진

4)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충남의 only one 향토산업 육성
 - 충남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되고 충남에서만 가능한 향토산업을 개발, 육성
- 향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자연환경 등 지역 고유 부존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추구
 - 금산의 실버산업, 보령의 머드산업, 계룡의 軍문화 엑스포, 논산의 신선딸기, 홍천의 광천토굴새우젓, 서천의 민속주, 서산의 육쪽마늘 등 지역별 향토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 ※ 프랑스 와인, 치즈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리적표시제, 원산지증명 등을 적극 활용

4.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문화관광 육성

1) 테마형 문화관광벨트의 설정 및 육성

○ 백제고도권

- 공주·부여의 백제 역사문화 자원과 금강의 생태축을 연계하여 문화·역사·생태관광에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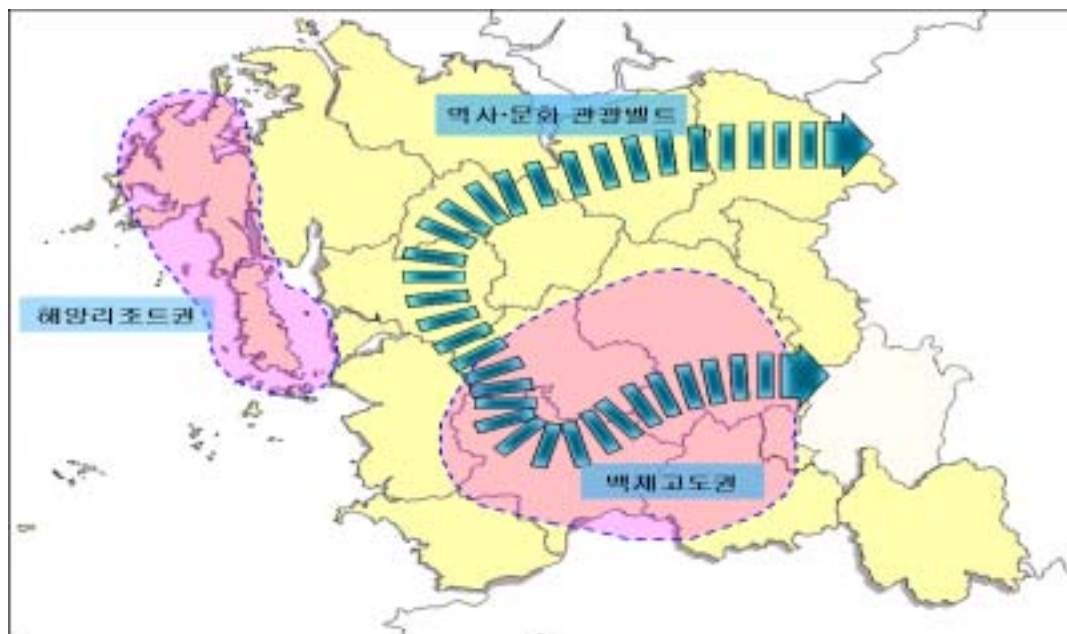
○ 해양리조트권

- 안면도 국제관광지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양자원을 연계하여 서해안 관광벨트의 생태·휴양·위락관광 거점으로 육성

※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의 재정비 추진

○ 역사·문화 관광벨트

- 천안-아산-예산-홍성-청양-부여-공주를 연결하여 내포문화 및 백제문화와 온천자원을 연계한 역사체험 휴양지대를 형성



[그림 6] 문화관광권 개발 구상

2)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

- 복지, 의료, 여가, 레저, 관광, 레크리에이션 등을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
- 세계인삼 엑스포 개최
 - 인삼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세계일류의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인삼 엑스포를 개최
 - ※ 「고려인삼」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국가적 행사로 개최
-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를 통한 문화관광 도시 개발
 - 공주, 부여, 강경, 해미, 홍성 등 고도의 역사, 문화, 유적, 환경 등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 시범도시로 개발
 - ※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중심으로 「백제트리엔날레」 개최
- 농촌의 경관, 관광, 문화 등을 활용하는 그린투어리즘의 확대와 경제 기능의 다원화를 통한 복합산업 공간화 촉진

5. 삶의 질 제고

1) 주거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살기 좋은 우리동네 정책을 통해 공동체 단위의 주거단지를 개발
 - 공동체 의식과 지역성을 강조하는 주거단지 조성을 장려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
- 커뮤니티 시설의 확충
 - 광장, 보도망, 공원녹지공간, 어린이 놀이터, 근린시설 등 커뮤니티 단위의 주거시설을 확충

- 따뜻한 정과 이웃사랑이 있는 살기 좋은 우리동네 실현
 - 더불어 사는 이웃을 만들어 가고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2)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충남의 실현

-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태풍, 홍수, 화재 등 재해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의 정보화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119 종합안전정보화센터」를 설치 운영
- 재해의 예방, 구조, 복구, 구호물자보급 등을 체계화하는 지역방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방재체계 구축을 지원
- 습지, 철새도래지 등 주요 생태자원의 보전
 - 안면도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안면도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 천수만 주변 간척지의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를 추진하여 철새 생태공원, 철새학습관 등을 건립
- 도심하천의 생태기능 회복사업 추진
 - 하천수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또는 하천수를 상류지점에 이송하고 하상정비 및 생태습지공원 조성, 조명·분수 설치

6.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효율성 제고

1)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도정체계 구축

-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충남에 애정을 갖는 외부의 전문인사를 활용
 - 개방적인 의식을 고양하고 신지식 및 경험 습득의 기회로 활용하여 우물안 개구리에서 탈피
- 민·산·학·연·관의 협력지향적 도정운영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협력·조정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외적 개방과 내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적으로 공유
 - 모든 지역이 주체로서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는 지역간 제휴와 협력을 활성화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성 제고

-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효율의 제고
 -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분산 추진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조하여 도정의 목표달성도를 제고
- 주민동의를 토대로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확립하여 사업추진상의 갈등 등 부작용을 최소화

3) 충청권 공동발전체제의 구축

- 충남, 대전, 충북의 연계발전
 - 충남의 전자·정보산업, 충북의 바이오산업, 대전의 과학기술도시 등 3개 시도의 전략산업의 연계발전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충청권 공동발전체제의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고속철도 건설 등을 계기로 충청권 공동발전체계를 구축
- 충남과 인접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해안 포럼」의 결성과 활성화

V. 결 론

1. 급변하는 거시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

-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립형 지방화, 고속화, 혁신 등 새로운 시대조류에 대응하여 충남의 매력을 upgrade할 중요한 시기

2.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성의 강조

- 충남이 보유하는 유형, 무형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
 -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신산업벨트를 적극 개발

3. 「충남 only」 상품의 개발

- 충남의 인적, 물적, 지리적 특성에 기반을 둔 창조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극대화
 - 문화, 산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충남의 전통적인 자산을 현대적인 기술, 트렌드와 접목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



새로운 국토중심으로서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유하는
충남 건설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

충남의 지역혁신과 산업발전 전략

김선배 |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

I.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기술변화가 극심하고,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보다는 ‘경쟁우위’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orter, 1998).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생산요소로서 지식과 혁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의 단위로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즉,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가 지역경제 단위의 혁신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생산성 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성 도모라는 양대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환경에서는 형평과 효율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충청권은 중국 황해 연안의 성장과 함께 동북아 경제권이 급부상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새로운 중심지인 동시에 동북아 시대 경제·문화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 여건이 양호한 충청권이 자율적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충청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실험 무대

가 되고 있다. 즉, 충청권의 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을 연결하는 가교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제2의 국가도약’이란 국가발전 비전 달성에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충청권의 핵심지역인 충청남도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입각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경제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지역혁신 및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효율과 형평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인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관점에서 동북아 시대의 행정 및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충남의 지역혁신과 산업발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혁신주도형 경제와 지역발전 전략

1. 외부경제 효과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대

자본의 수확체감이 나타나는 지식기반경제 환경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 전반의 경제성장률을 현저히 둔화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1970~80년대에 이어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특정 산업의 선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시현하였고 이는 솔로우의 성장동학에서 성장경로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world bank: 1996, 정건화: 2003).

<그림 1> 솔로우(Solow)의 성장 동학(Growth Dynamics)

자료: World Bank(1996)

그러나 새로운 성장경로 2에서는 기술진보율, 즉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발전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우리나라는 1990~2001년간 연평균 5.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서 79.8%가 자본투입에 의한 것이고, 연구개발 및 혁신 등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제성장은 9.6%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혁신 인프라 구축, 효율적 거버넌스 형성 등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표 1> 각국의 GDP 성장률의 요소별 기여도(%)

자료: World Bank(1996)

<표 2> 생산요소별 GDP 성장기여율(1990-2001)

	기간	GDP 성장률	자본의 기여율	노동의 기여율	기술진보 (총요소생산성)
한국	1960-90	8.6	67	19	14
대만	1953-90	8.7	72	13	15
싱가포르	1964-90	8.9	55	23	23
홍콩	1966-90	7.8	48	17	35
일본	1957-90	6.7	49	6	46
미국	1948-90	3.1	24	28	49
영국	1957-90	2.5	35	4	61
프랑스	1957-90	3.7	33	-1	69
독일	1960-90	3.2	36	-7	71

	GDP	자본투입	노동투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5.86	9.02	1.29	0.56
성장 기여율(%)	100	79.8	10.6	9.6

자료: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 2003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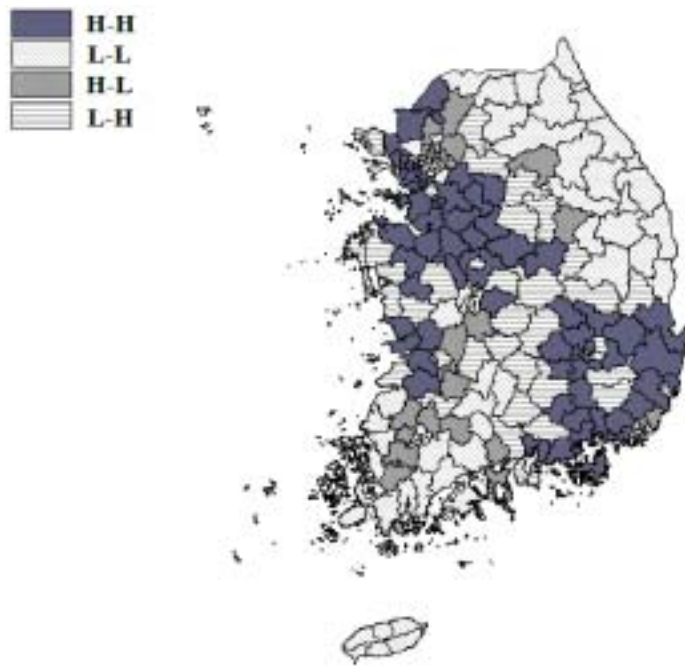
2. 산업집적과 혁신환경의 공간적 불일치 조정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에 의해 집적경제 효과의 공간적 범위를 측정하는 Moran I 통계량을 사용하여 산업집적과 혁신환경 공간구조에 대한 분석을 참조할 수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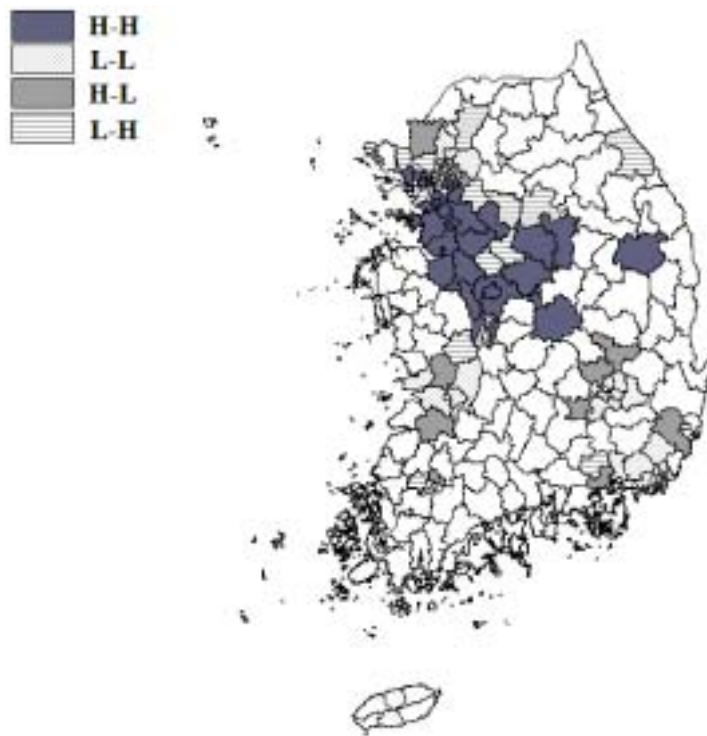
$$I_i = \frac{(x_i - \bar{x})}{\sum_j (x_j - \bar{x})^2 / n} \sum_j w_{ij} (x_j - \bar{x})$$

<그림 2> 제조업 취업자수(LQ) Moran 산점도의 공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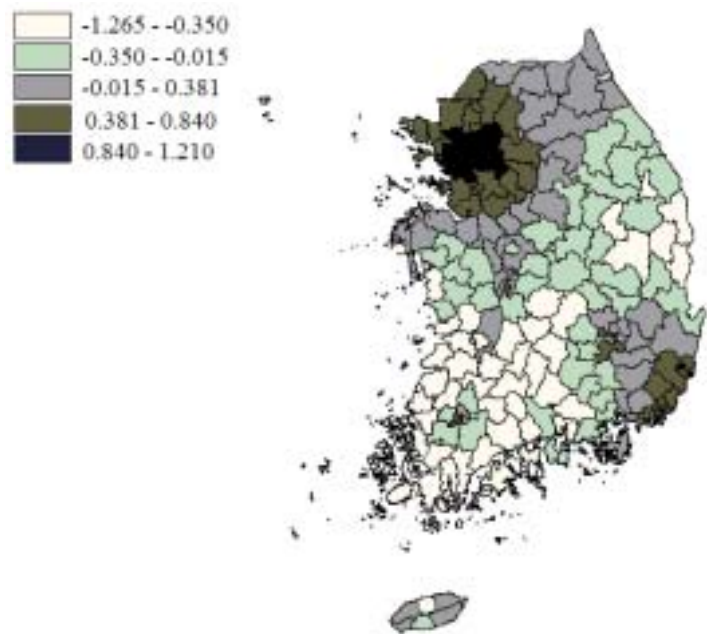
1) 본 분석결과는 정준호·김선배·변창욱(2004)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분석 자료는 전국 232개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제조업의 부가가치, 자본스톡, 종사자수와 혁신환경 변수(고등교육인구, 인구, 민간연구소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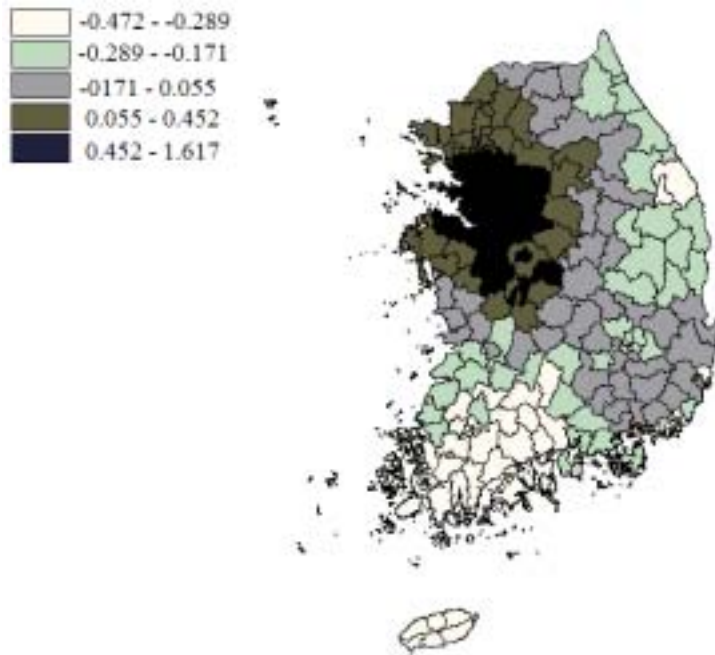
<그림 3> ICT산업의 Moran 산점도 공간분포(종사자 LQ)



<그림 4> 고등교육수준 공차(Spatial Lag)값의 공간분포



<그림 5> 민간기업 연구개발 공차(Spatial Lag)값의 공간분포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혁신환경 변수들 모두가 일관되게 수도권 중심의 단핵형 공간패턴을 보여주는 반면에, 산업집적은 수도권과 동남권이 주축을 이루는 다핵형 공간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산업집적과 혁신환경의 공간적 괴리 또는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산업집적과 혁신환경의 공간적 불일치라는 경제 공간구조의 조정이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일부 산업집적지가 광역단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집적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집적효과가 광역단위의 행정구역을 가로질러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산업집적지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접한 광역 시·도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Ⅲ. 충남 산업의 대내외 여건과 발전비전

1. 충남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발전 잠재력

충남의 대외적 여건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동북아 경제권의 부각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NIE's)의 대두로 한·중·일의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중·일 동북아 경제권은 유럽과 대륙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미국 등 북미대륙과도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등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더욱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의 진전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의 추세에 따라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되면서, 충남지역은 지역여건상 우리나라와 중국간 경제교류에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으로 충청권(특히 충남)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04년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천안·아산지역 등 충남 북부지역이 수도권지역과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시·공간적 수렴현상이 발생, 수도권의 광역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충남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는 충남산업의 발전 잠재력 및 위상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충청권 특히, 충남도가 동북아 경제권의 경제·문화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둘째, 향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IT, BT, NT, CT 등 新성장동력산업의 지역혁신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충남의 강점요인은 유리한 외생적 환경변화 및 건실한 잠재적 혁신역량에서 유발되고 있으며, 약점요인은 임계규모 미달에 따른 혁신 인프라 취약과 충남지역내에서의 불균형에서 유발되고 있다. 한편, 기회요인은 동북아 경제권 부각 및 참여정부의 균형발

전정책이며, 위협요인은 정책기조(국가적 효율성 강조) 변화 및 지역의 응집력 약화에 관련된다.

2. 충남의 지역혁신 비전 및 전략

충남은 수도권외 과밀억제 정책 등에 의해 수도권 산업기능 수용의 최적의 대안지역이며, 향후 행정도시의 충청권 입지와 공공기관의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가경제 및 행정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 내부적으로는 서북부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여타 지역은 아직 농림어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 사회간접시설의 미흡,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해 지역 내의 불균형성장이 심화될 위험성도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충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내 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의 지역혁신 발전 비전과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충남의 지역혁신발전 비전은 對 중국 등 동북아 경제권 교역의 교두보로서 「Dynamic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동북아 경제권의 신성장산업 중심지 건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전비전은 동북아 경제권의 경제·문화의 중심지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할 충남의 변화된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충남산업의 발전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권역별 특성에 따른 산업클러스터 기반한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으로 충남도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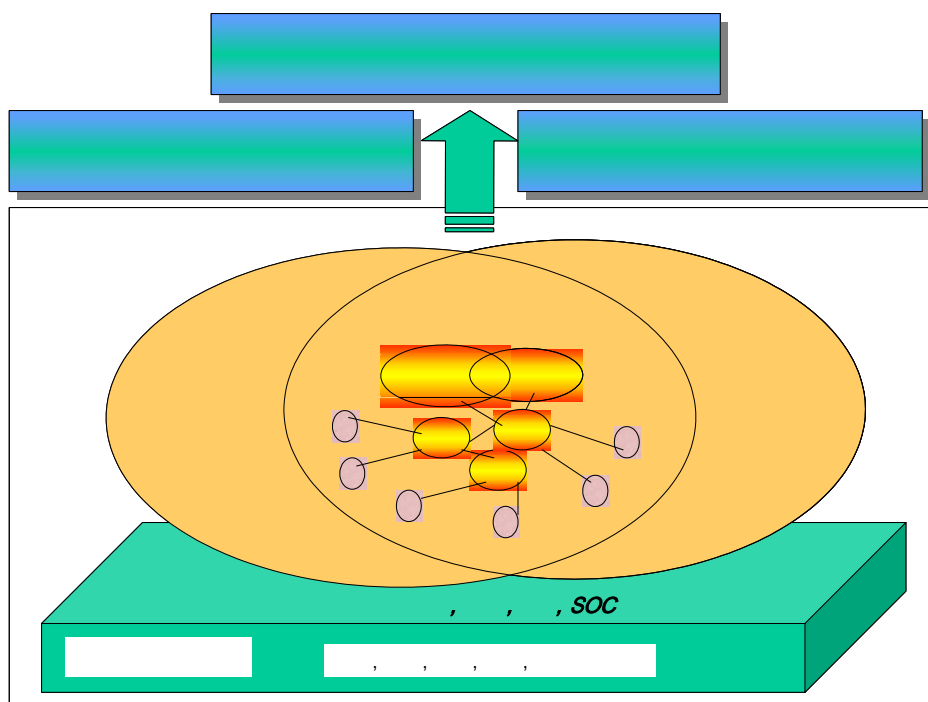
첫째,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 형성으로 충남 산업발전의 효율성과 지역내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도록 한다.

둘째,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경제권역을 포괄하는 혁신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미시경제적 차원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충남도, 충청권 지자체간 협력,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역 거버넌스 확립이 요구된다.

<그림 6> 충남의 산업발전 비전



Ⅳ. 충남산업의 클러스터 활성화방안

1. 기본 방향: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 형성

충남의 전략산업²⁾을 효율적인 육성하기 위해서는 충남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거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거점 클러스터의 파급효과가 여타 지역으로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는 중소규모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IT산업(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된 행정·첨단문화 산업으로 허브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한다. 거점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신규단지 조성, 지식기반집적지구(산업집적활성화법)와 삼성전자의 탕정지구(LCD) 투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문화콘텐츠, 바이오(동물, 축산, 농업, 인삼·약초 등), 관광산업의 중소 클러스터와 각 시·군의 향토산업 클러스터를 허브와 연계하도록 한다(스포크 형성).

셋째, 권역내 허브 클러스터(오창, 대덕)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및 해외 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충남 거점 클러스터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과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세부 육성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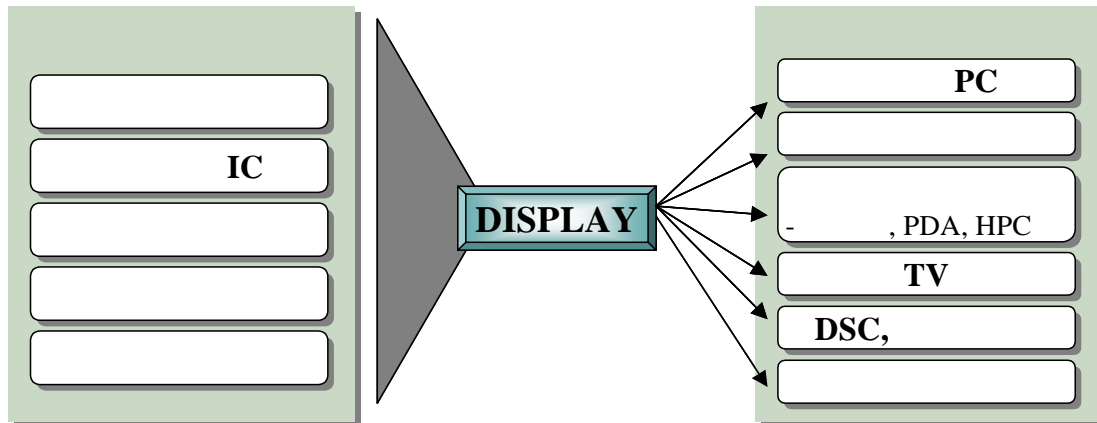
2.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방안

디스플레이산업은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가공, 조립하는 시스템산

2) 본고에서는 '충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2004)'에서 제시된 5대 전략산업(전자·정보기기, 자동차·자동차부품,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세부 특성화 분야 및 주요 사업계획을 검토하였다.

업인 동시에 컴퓨터, 모니터, TV, 휴대폰 등 전방산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산업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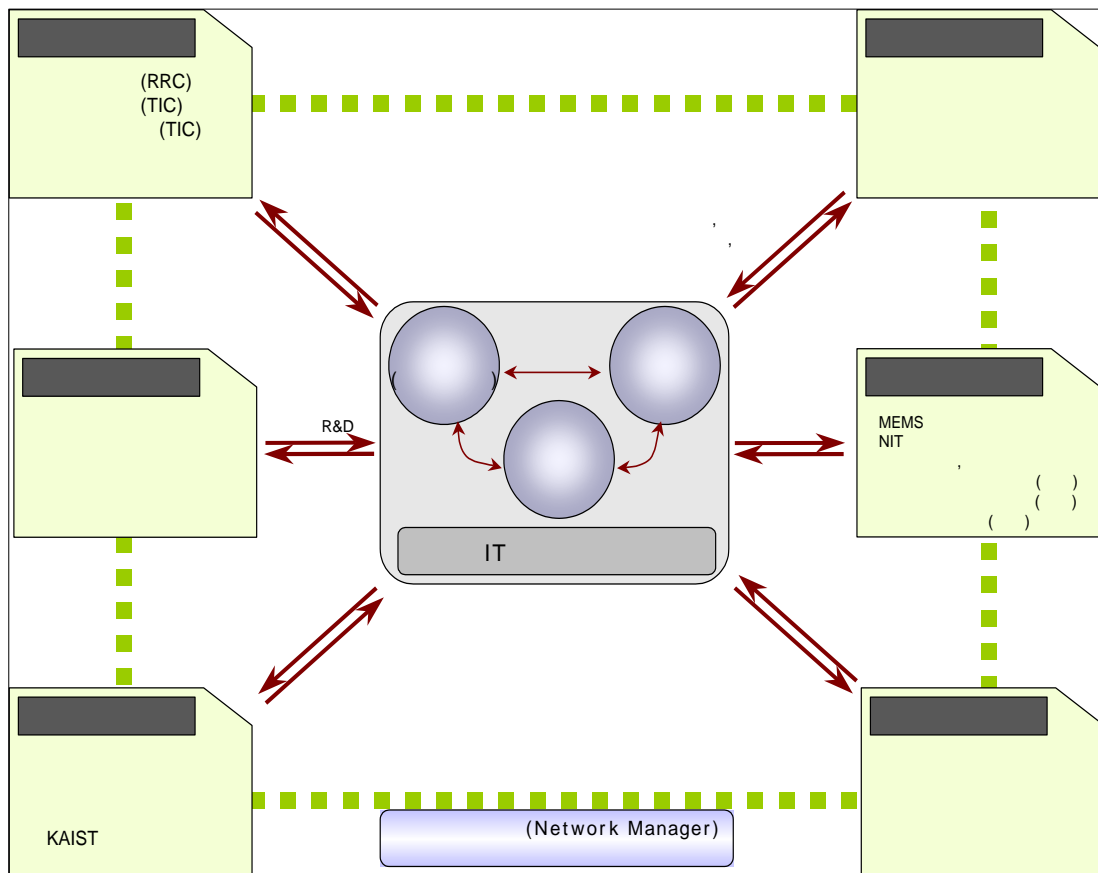
<그림 7> 디스플레이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 현황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하는데 있어 충남의 강점은 클러스터 형성의 핵심요소인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충남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전을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개발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첨단산업 기반 및 인력이 풍부하다. 또한 디스플레이 특성화대학인 호서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반을 구비하고 있는 고려대(서창), 단국대(천안), 선문대, 순천향대 및 한국기술교육대 등 5개 대학들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 비하여 국제화, 마케팅, 자원조달 기능이 취약하여 “지역 완결적” 산업지원체제가 미흡한 점이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신설되는 대규모 LCD 산업단지가 충남 아산(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경기도 파주(LG필립스)에도 조성되고 있어, 디스플레이산업의 육성을 둘러싸고 국내외 타 지역과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림 8>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 체계도



자료: 충남전략산업기획단 · 산업연구원(2004)

따라서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 비전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학·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충남디스플레이협력단」을 구성하여 지역내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협력단은 연구조합 성격의 법인형태로 충남테크노파크(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와 충남 전략산업기획단을 플랫폼으로 하며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의 H/W적인 역할을 보완하는 S/W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효율적인 인력공급, 기술 재창출 능력, 활발한 네트워크 교류, 자유로운 창업문화 조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엔젤·벤처캐피털

등의 모험자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벤처 클러스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충남의 천안, 아산지역을 디스플레이 기술혁신과 창출의 핵심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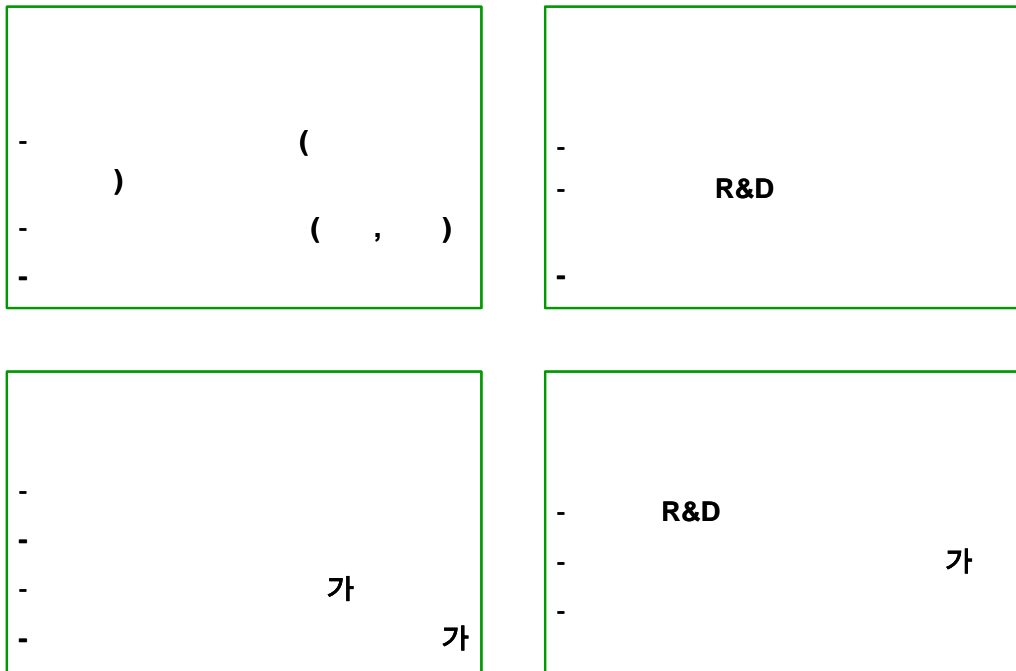
넷째,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구개발, 지식공유 및 우수인력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생산단지와 교육, 문화 및 복리시설 등이 종합된 복합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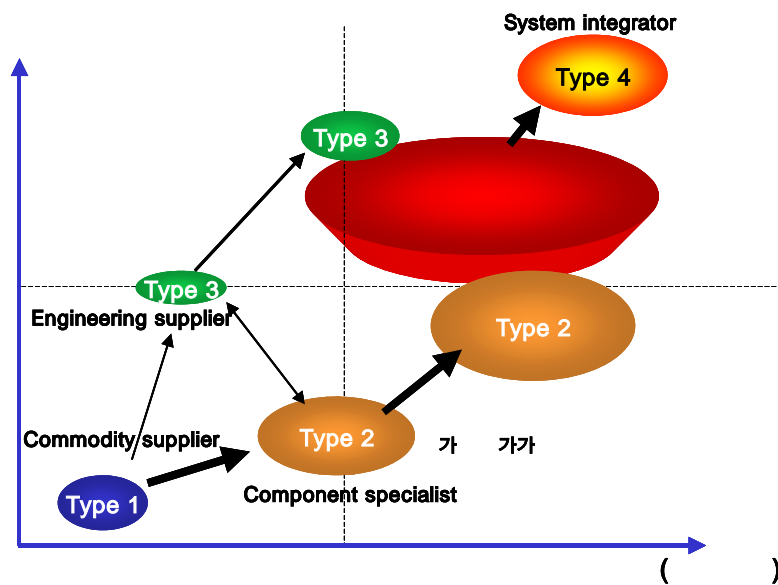
3. 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방안

충남은 서해안 축이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어 연관산업의 발달되어 있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 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현재 국내 부품업체는 경기지역이 24.4%를 차지해 가장 높지만, 최근들어 충남지역으로의 공장 입주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앞마당에 위치한 충남은 자동차 산업의 지리적 요충지로서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세계적인 아웃소싱으로 현대자동차의 의존구조를 탈피하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과제를 안고 있다(현대차 부품업체의 25%가 외국계 협력업체, 납품액 7조원 육박).

<그림 9> 자동차산업의 SWOT 분석



<그림 10>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비전



이러한 여건에서 충남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서는 고가 및 고부가가치 첨단 자동차 부품생산에 중점을 두어

첨단 자동차 부품의 생산기지로 도약하는 발전비전을 정립하고 다음과 같은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장부품 분야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화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 형태의 연계기관(Bridging Institutions)을 통해 중소부품업체의 기업지원 및 산학연계(R&D,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숙련 생산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대자동차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대가 충남 아산지역이 고부가가치 자동차 조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사안정, 수도권 숙련인력 유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부품업체의 숙련도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R&D 집적화 센터 설립, 모듈화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특화 원천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부품연구원의 미래형 자동차 사업단 사업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 첨단부품업체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외환 위기 당시 외국인에게 매각(fire sale)한 부품업체들이 화성, 평택 등 아산 인근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이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입지수요 증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분업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충남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임을 외국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전장부품의 대 중국 생산기기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조성사업(산자부 추진 중)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동차부품의 글로벌 소싱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마케팅 전담 연계기관을 활용하여 지역내 부품업체의 판매망 협력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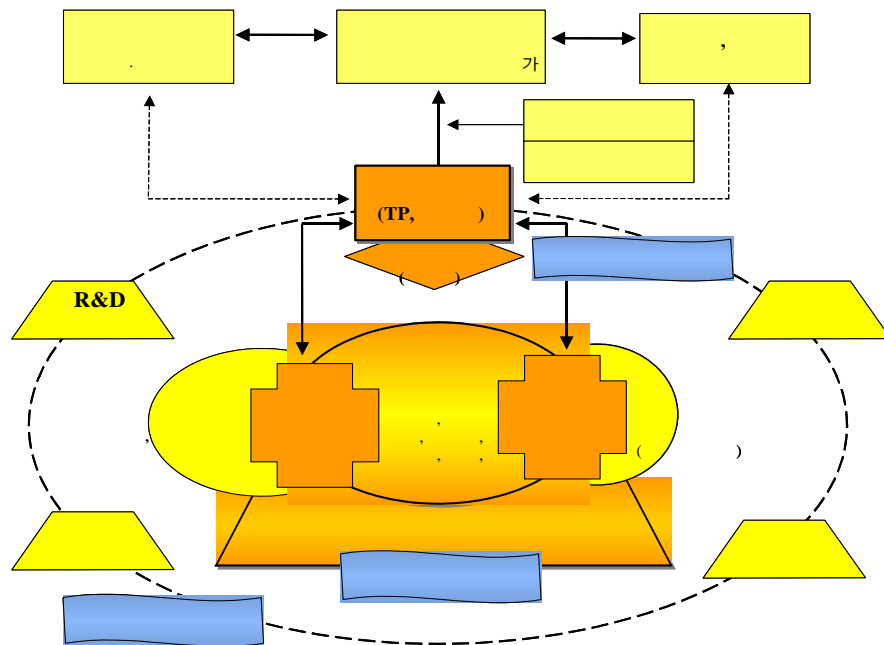
종합상사의 세계적 판매망과 제휴하여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한다.

V. 충남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방안

1. 충남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모형

지역혁신체제는 산업클러스터에 기반하여 지역혁신 주체의 상호 작용과 집단학습(collective learning)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김선배, 2001). 충남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전략은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거점과 중소클러스터 연계, 인접 시·도간 거점클러스터 연계) 형성,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경제권역을 포괄하는 혁신 인프라 확충, 효율적인 지역 거버넌스(관리·운영체계)를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1> 충남의 지역혁신체제의 구축모형



2.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과학기술역량의 확충 및 R&D 활성화

충남의 과학기술역량의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지역 산업에 적합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특화산업 분야에 따라 대학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지역산업에 적합한 인력양성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산업체의 기존 기술인력 및 시험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산·학·연 협력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대학·출연연구소의 인력·기술 및 시설장비 등의 적극적인 활용과 공동연구소 설립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대학 및 연구소의 산·학·연 협력 여건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육성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의 전략·특화기술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선정된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특화기술개발과제를 심층적으로 도출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들 기술개발과제들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가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행정 및 관리 능력 강화해야 한다. 도 차원에서 과학기술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의 확대를 유도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의 과학기술 관련부처와 지자체 간에 과학기술정책 담당관 및 전문가의 상호 교류를 제도화하여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획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2)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기업지

원 플랫폼으로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테크노파크를 기업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전략산업별 협력단을 테크노파크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지원 전담인력 및 중개 컨설턴트의 채용 및 양성이 요구된다. 지원서비스 효과는 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컨설턴트의 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이들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 자격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수준에서 지원프로세스 및 효과의 규칙적인 모니터링과 최종평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가능한 명확한 목적 제시와 함께 평가에 대한 책임이 초기단계에 결정, 프로그램 시행 후 1~2년에 중간단계의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넷째, 지역여건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여건과 전략산업의 혁신인자에 따라 기업지원서비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차별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지원이 중요하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의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다종다양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연구 소그룹' 결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투자펀드 조성 및 벤처기업 투자자금 접근 용이성 제고, 기술지원 시책과 벤처캐피털의 연계 강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효율화, 온라인 판로지원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3) 지역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지역 맞춤형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지역의 산업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한 산업인력의 재교육 및 향상 훈련을 위해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대학의 특성화 및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을 지원하도록 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 특성화를 위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을 유도 및 지원하며, 지역 전략산업 중 신산업의 조기산업화를 위한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산업인력 양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사내대학 및 기업연수원의 기술대학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 공동의 기술대학 설립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테크노파크 및 TIC 등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단위의 중소기업 공동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거점단지를 중심으로 산업기술인력 공급체계 구축하도록 한다. 지역거점 공단 및 단지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역 단위로 노동시장 및 교육훈련 정보망을 구축하고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산업인력 정보인프라를 정비하도록 한다.

4) 산업의 집적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산업의 집적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집적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산업집적지 조성의 기본 취지에 따라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산업의 효율적인 공간집적을 유도할 있는 적합한 개발방안을 채택하도록 한다.

둘째, 집적지 조성방식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 규모에 따라, 혹은 개발주체에 따라 집적지 조성방식을 유연하게 적

용하되 법·제도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집적지 간의 상호 연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집적지는 발전하면서 상호 중첩되거나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별, 지역별 집적지 조성시 상호 연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능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부처 집적지 조성정책의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서 추진 중인 산업별 집적지 조성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과 기존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도록 한다.

5) 충청권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거점 클러스터간 연계를 통해 충청권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전략산업 중심의 거점클러스터 육성과 공간적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권역내 핵심 거점(2~4개)을 선정하여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 육성해야 한다. 충청권의 경우는 IT·BT산업 중심으로 대전—천안, 천안(아산)—청주(오창, 오송), 청주—대전의 3개 축을 연결하는 삼각회랑형(Triangle Corridor)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위 시스템 간의 효율적 접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기관 간의 연계체제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전략산업의 혁신 특성과 규모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 생산 마케팅 분야의 지원기관 특성화 및 우선 순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 운영 중인 산업별·지자체별 지원기관의 기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동 사업에 의한 산업육성인프라의 효율적 정비·확충이

필요하다. 권역내 소비재 시장과 생산재 시장의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내륙 물류·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청권 광역 물류망 구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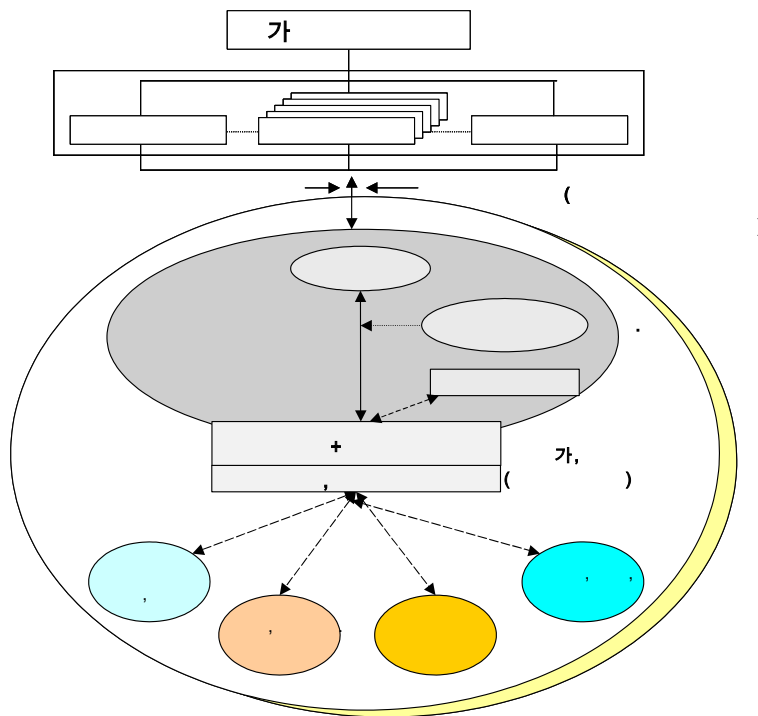
3. 지역혁신 추진체계 개선방안

지역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 방안은 현행 상태를 개선하는 안과 지역개발기구(전략적 집행기구)를 설립하는 안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현행 상태를 개선하는 안은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각 기관 간에 업무협약을 맺어 현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조정자와 모니터로서의 역할 담당하는 것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은 기존의 연구기능과 지역혁신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반면에 TP와 전략산업기획단은 통합된 조직으로 운영하되, TP는 각 산업별 특화센터와 협력단을 연결하고 중개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전략산업기획단은 지역산업발전에 관한 기획기능을 담당한다. 전략산업기획단은 충남발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개발연구와 지역산업발전의 기획기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업 지원서비스기관 또는 여타 사업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략산업의 진흥에 이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2> 현행 체계의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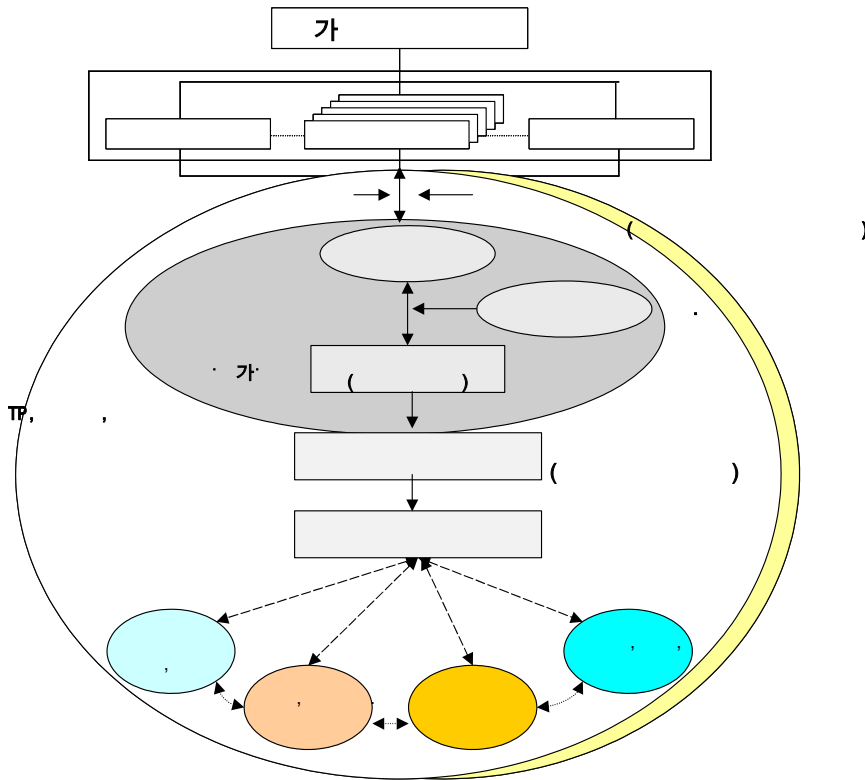


둘째, 지역개발기구(전략적 집행기구)를 설립하는 안은 충청권 단위의 초광역 단위에서 전략적 집행기구, 즉 지역개발기구를 설치하는 안으로 각 광역지자체는 지역개발기구의 지점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이다. 초광역 단위의 전략적 집행기구는 해당 광역 지자체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캐스팅 보트로서 중앙정부가 참여하여 일정한 지분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집행기구는 기획·사업계획 수립, 상담·중개기능, 지역간 교류·협력사업, 평가·모니터링 등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사업수행기구로서 기능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충남의 경우, 충남발전연구원, 전략산업기획단, TP간의 통합이 불가피하고 기획기능과 일부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조직으로 충청권 지역발전기구의 충남지사로 전환하도록 한다.

각 지자체는 산업진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전략적 집행기구의 업무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지자체의 업무 일부(예: 보조금 관리, 투자유치 등)를 전략적 집행기구로 위임하도록 한다.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는 경우 시장이 확대되어 규모의 경제의 향유가 가능하고 초광역 단위의 노사정 협약을 통해 타 지역과 구별되는 사업 환경이 조성되면 매력적인 투자유치의 대상지역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 전략적 집행기구의 설치(안)



Ⅵ. 정책제언

본고는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라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국가 경제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충남의 지역혁신과 산업발전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1.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제언

1) 광역적 관점에서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현재 우리나라는 공간경제구조 측면에서 다핵형 산업집적 구조와 단핵형 혁신환경 구조의 공간적 불일치가 초래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산업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적정 공간규모는 자율적 경제권역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확보가 관건이므로, 전략적 관점에서 인접한 2~3개 시·도를 포괄하는 보다 광역화된 지역적 범위에서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2) 네트워킹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혁신인프라 확충사업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혁신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 지역내 혁신주체를 여하히 연계시켜 기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네트워킹사업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프로그램에 의한 지역혁신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거 지역산업정책의 주요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개별 부처 중심의 단편적 사업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근거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패키지화된 형태의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혁신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4) 시·도간 협력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현재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통해 시·도 단위로 형성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상호 연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도 간의 협력을 유도해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5) 성과협약에 기초한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성과 중심의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모니터링과 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충청남도(지자체)에 대한 정책제언

1) 클러스터형 리더십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정책의 초점이 개별기업 단위의 경쟁력 제고에서 클러스터 단위의 집합적 효율성 제고로 전환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클러스터내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하나의 목표(효율적 기업지원)로 묶어낼 수 있는 제도화된 리더십의 창출이 필요하다. 제도화된 리더십의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이나 관련 지

자체의 조례 등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의 총괄조정 및 평가권한을 사업추진주체에 부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치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2) 클러스터의 연계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공유 및 협력

클러스터는 상호 연계되면서 진화 발전해 가는 특성을 갖고 있고 혁신은 부가가치 제고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므로 기업이 성장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정 클러스터 혹은 행정구역 내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클러스터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적 차원에서 상호 보완성을 갖는 클러스터 간의 연계사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혁신인프라의 권역내 공동 구축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혁신인프라의 구축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특정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 또한 대다수의 혁신 인프라는 일정 규모를 넘어서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보·통신, 물류·유통, 교육·훈련, 금융지원 등과 같은 혁신인프라는 동일 경제권역내의 시·도가 함께 추진하여 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높이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4) 효율적인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구축

충남의 지역혁신 거버넌스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면

서 각 기관에는 기능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각 기관간에 업무협약을 맺어 현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 기조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청권을 포괄하는 전략적 집행기구(지역개발기구)를 설치하고, 각 광역지자체 단위로 충청권 지역개발기구의 지사 형태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선배, 2001,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 모형”, 『지역연구』 제17권 2호, 한국지역학회.
- 산업연구원, 2004, 『지역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과제 연구』, 산업자원부 용역보고서.
-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 2003,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 정건화, 2003, “동북아 시대 참여정부 산업정책의 방향과 쟁점,” 『참여정부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 정준호·김선배·변창욱, 2004, 『산업집적의 공간구조와 지역혁신 거버넌스』,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 2004, 『충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 충남전략산업기획단·산업연구원, 2004, 『21세기 충남산업의 발전전략과 과제』.
- OECD, 1999a, *Managing National Innovation Systems*, Paris: OECD.
- OECD, 1999b, *Boosting Innovation: the Cluster Approach*, Paris: OECD.
- Pezzini, M., 2003, "Cultivating regional development: main trends and policy challenges in OECD Regions", *mimeo*, OECD.
- Porter, M., 1998, *On Competiti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World Bank, 1996,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Institute Forum.

충남발전연구원 심포지움 자료(2005. 4. 27)

충남농업·농촌 개발의 방향과 전략

— < 목 차 > —

- I. 한국 농업의 현실과 좌표
- II. 지역농업 분화와 충청남도의 위상
- III.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패러다임
- IV. 충남 농업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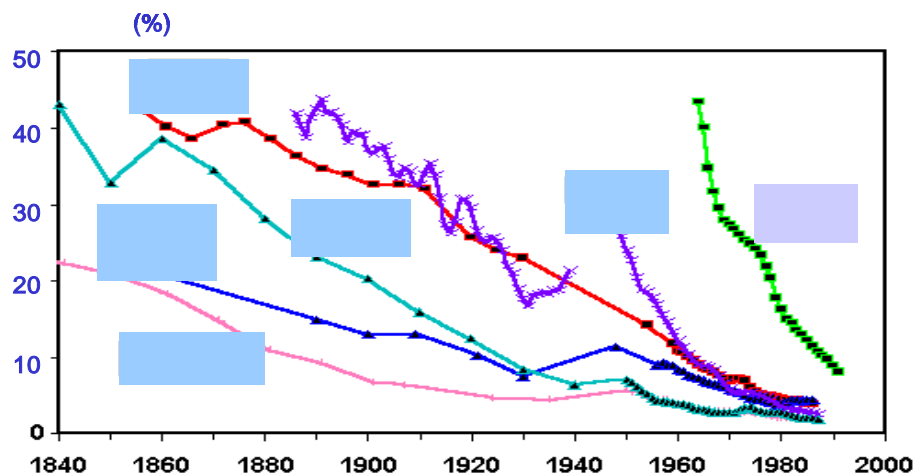
선임연구위원 김 정 호

I. 한국 농업의 현실과 좌표

1. 산업구조 전환과 농업 문제

- 경제 발전에 따른 농업 비중의 감소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급속하게 산업구조 전환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응이 늦은 농업 부문과 농촌 지역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표출되었다.
- 우리나라 총생산의 농업 비중은 1960년의 45%에서 2002년에는 3.7%로 줄었으며, 총고용의 농업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에 65%에서 9.0%로 줄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일본 등도 경제성장에 따라 농업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변화 속도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국가별 농업 비중의 변화 추이



- 선진국들의 산업구조 전환에서 밝혀진 경험에 의하면, 생산구조 변

화와 고용구조 변화는 대략 12~13년의 시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생산구조의 변화 시점을 보면, 1965년까지 농업 > 서비스 > 제조업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나, 1973년 이후에는 서비스 > 제조업 > 농업의 순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소요된 기간이 대략 8년에 해당한다. 또한 고용구조의 변화 시점을 보면 1978년까지 농업 > 서비스 > 제조업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나, 1985년부터 서비스 > 제조업 > 농업의 순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소요된 기간이 대략 7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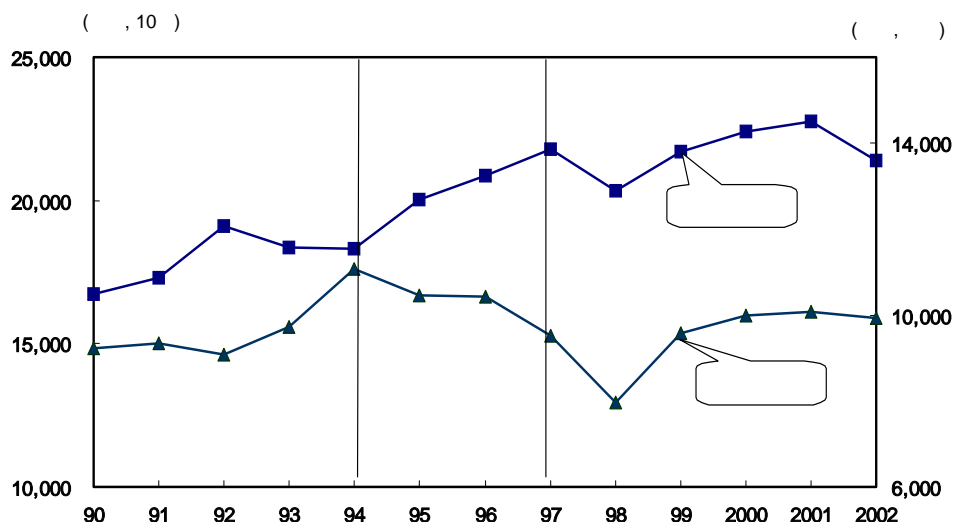
- 특히 우리나라 농업은 고용구조 조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농업구조의 변화에 소요된 기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2~5배 정도 짧았다. 예를 들어 생산구조 변화를 보면, 농업생산 비중이 40%에서 7% 수준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유럽 5개국 평균이 117년, 미국이 92년, 일본이 73년 등이지만,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또한 고용구조의 변화로서 농업취업자 비중이 40%에서 16%로 낮아지는데 소요된 기간은 유럽 5개국 평균이 63년, 미국이 42년, 일본이 31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4년에 불과하다.
- 이렇게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업부문에는 전직이 곤란한 고령자가 퇴적되었다. 선진국에서도 농업과 비농업간의 직업 전환이 매우 제한적이며, 농업으로부터 비농업부문으로의 순전직률은 대략 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 분포를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노령화가 계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 실패로 농업취업자의 노령화 가속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의 한계라는 산업적 측면의 문제와 아울러 농촌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2. 농업구조와 경쟁력의 실상

2.1. 성장과 소득의 괴리

- 최근의 농업경제 동향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형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착수한 농업구조개선사업 등 투융자 확충에 힘입어 농업 고정자본은 1994~2002년 동안에 연평균 9%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농업생산은 동기간 중에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였다.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농산물 실질가격은 1994~2002년 동안에 연평균 1% 하락하였고, 특히 1995년 이후 농산물 실질가격은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반면에, 농업용품 실질가격은 환율 상승으로 1994~2002년간 연평균 1% 상승하였다. 즉,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 이익은 증가하였으나, 농가의 실질 농업소득은 1994~2002년간 연평균 1.7%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림 2> 농업생산과 농업소득 추이



- 농업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농가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농가

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다. 1994~2002년간 호당 농업소득(명목) 변화를 보면, 경지규모 0.5ha 이하 농가의 소득은 5% 감소한 반면에 3~5ha 농가의 소득은 11% 증가하였고, 5ha 이상 농가의 소득은 44% 증가하는 등 영세농 계층의 소득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에 대농 계층의 소득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그 결과 1994~2002년 사이에 농가의 최상위·최하위 소득 20% 계층의 1인당 소득격차가 5.5배에서 7.1배로 확대되었는데, 동기간 중에 도시가구의 최상·최하위 소득격차가 4.4배에서 5.4배로 확대된 것에 비하면 농가간 소득격차가 훨씬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파생되는 소득 문제가 농정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2.2. 농가 계층분화와 영세농 퇴적

- 농가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대농층으로 농지와 가족 등 생산자원이 집중되는 농업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총조사 통계를 보면, 1990년에는 논 3ha 이상 농가의 호수 비중이 1.2%이고 면적 비중이 6.2%였으나, 2000년에는 호수 비중이 3.8%이고 면적 비중이 20.0%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대농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2000년 현재 시설원에 2천평 이상 농가는 전체의 10.5%이지만 이들이 시설면적의 47%를 점하고 있으며, 한우 20두 이상 농가 8.1%가 55%를 사육하고 있다.
- 반면, 대부분 농가가 영세농층으로 퇴적되어 2003년 현재 0.5ha 이하 농가가 총농가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영세농은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영주의 94%가 40세 이상이기 때문에 전직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영세농이나 겸업농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경영비가 어느 정도 보상되므로 앞으로도 영세고령농의 퇴적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고령농가가 은퇴하기까지 노후생활을 보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지유통화를 도모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1> 경영규모별 농가수 및 면적(두수) 누적분포

단위: %

연도 경영규모	1990		1995		2000	
	호수 비율	면적 비율	호수 비율	면적 비율	호수 비율	면적 비율
논 3ha 이상	1.2	6.2	2.8	14.8	3.8	20.0
밭 2ha 이상	1.6	12.6	2.5	18.0	3.2	24.0
과수원 1ha 이상	10.5	38.2	13.6	42.9	14.1	44.3
시설 2천평 이상	6.1	25.5	12.4	38.3	10.5	47.1
연도 경영규모	1990		1995		2000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한우 20두 이상	1.1	14.1	4.4	28.6	6.5	49.9
젖소 50두 이상	1.7	8.7	6.0	18.9	26.4	54.1
돼지 1천두 이상	0.2	13.3	2.2	27.7	9.8	62.1
닭 1만수 이상	1.8	59.2	3.1	76.8	2.7	94.1

자료: 농업총조사에서 작성.

2.3. 시장개방과 경쟁력의 실상

-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DDA) 농업협상이 진전되면서 시장개방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나, 농산물 국내외 가격차는 크고 (고관세 품목) 품질차가 적은 쌀, 고추, 마늘에서 소득 감소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쌀, 고추, 마늘은 관세인하로 30~40%의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하여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개방 시나리오에 의하면 2010년까지 쌀 소득은 1.3~4.1조원, 고추 소득이 3.2~4.5천억원, 마늘 소득이 1.2~5.6백억원(선진국 조건의 경우)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반면에 관세가 낮고 품질별 가격차가 큰 농산물은 시장개방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과와 배는 수입금지 해제로 10~30%의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하지만, 등급간 가격 차이가 200% 이상이므로 품질 고급화를 통해 외국산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축산물은 관세인하로 10~15%의 가격하락 요인이 있으나, 품질간 가격 차이가 50%(쇠고기) 이상이므로 품질 고급화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 2> 쌀 시장개방 영향과 전망

		재배면적 (천ha)	농판가격 (천원/80kg)	쌀 소득 (10억 원)	10a당 소득 (천원)
2002		1,053	153.7	7,225	686.0
2005		980	153.3	6,944	713.5
2010	개도국	836 (△2.8)	145.7 (△0.7)	5,894 (△2.5)	705.2 (0.3)
	선진국	776 (△3.7)	96.9 (△5.6)	3,175 (△9.8)	409.1 (△6.3)

주: ()안은 2002년 대비 연평균 증감률(%)

- 농산물의 경쟁력은 품질, 안전성, 마케팅에 따라 결정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쌀의 소비자 가격을 보면 2003년 현재 일반쌀(2,300원/kg), 친환경쌀(3,000원), 무세미(4,000원), 완전미(4,500원), 기능성쌀(6,000원) 등으로 가격차별화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품질경쟁력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일의 경우에도 등급간 가격 차이가 1993~2002년 동안에 사과는 2.3배에서 3.1배로, 배는 2.6배에서 3.5배로 나타나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가 급격히 확대되고, 안전성이 소비자의 선택 기준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소비지 유통이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상품 경쟁력보다 적품·적기·적소·적량공급 등 마케팅 경쟁력이 중시되는 경향이 며, 농산물 수출도 마케팅 능력이 좌우하고 있다.

2.4 농촌지역의 환경부하와 활력 저하

- 그 동안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치중함으로써 본래 환경산업인 농업이 환경오염산업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등을 통한 비료성분(NPK) 투입량은 2002년에 연간 약 99만톤으로, 질소는 86%, 인은 106%, 칼리는 64%가 초과 공급되고 있으며, 따라서 연간 약 35~45만톤의 비료성분이 하천과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환경백서에서는 총환경부하 중 축산부문의 수질오염 기여율(BOD 기준)이 한강 48%, 낙동강 43%, 금강·만경강 50%, 영산강·섬진강 57%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중심의 환경농업 정책은 환경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별·수계별로 물질순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농업생산 규모와 농법을 조정하는 정책추진이 요청되고 있다.

- 무질서한 토지 이용으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훼손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시확산 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갖추지 않는 소규모 개발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순농촌지역에서는 소규모 공장이나 건물의 무질서한 입지가 증가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소규모로 무질서하게 농지가 전용되면 토지 이용이 무란해지고 농촌경관을 훼손하게 되며, 농촌관광(green tourism)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나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 중산간지역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지역공동체로서의 자생력을 상실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읍·면 인구 비중은 1985년 43%에서 2000년 20%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2천명 미만 면이 같은 기간 중에 9개에서 170개로 증가하고 1천명 이하인 면도 17개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 경에는 인구 1천 명 미만의 면이 100개소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순농촌지역에서는 농업 이외의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농업의 쇠퇴는 바로 농촌인구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인구가 감소하면 초등학교나 보건소 등 공공시설들도 축소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

다. 따라서 지역농업의 절대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농촌사회 유지에도 기여하는 것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 3> 농촌의 인구 과소화지역 추이

		단위: 개					
읍·면 개수	연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 2천 명 미만	9	30	97	170	333	470
	인구 1천 명 미만	2	3	10	17	46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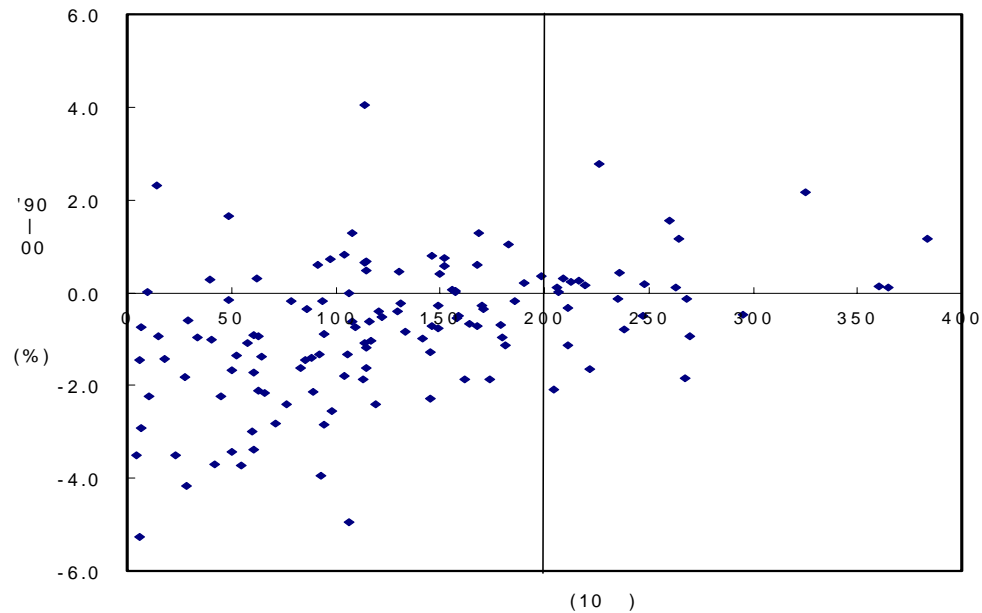
주: 2005년 및 2010년의 수치는 현재의 읍·면별 인구 증감 추세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임.

II. 지역농업 분화와 충청남도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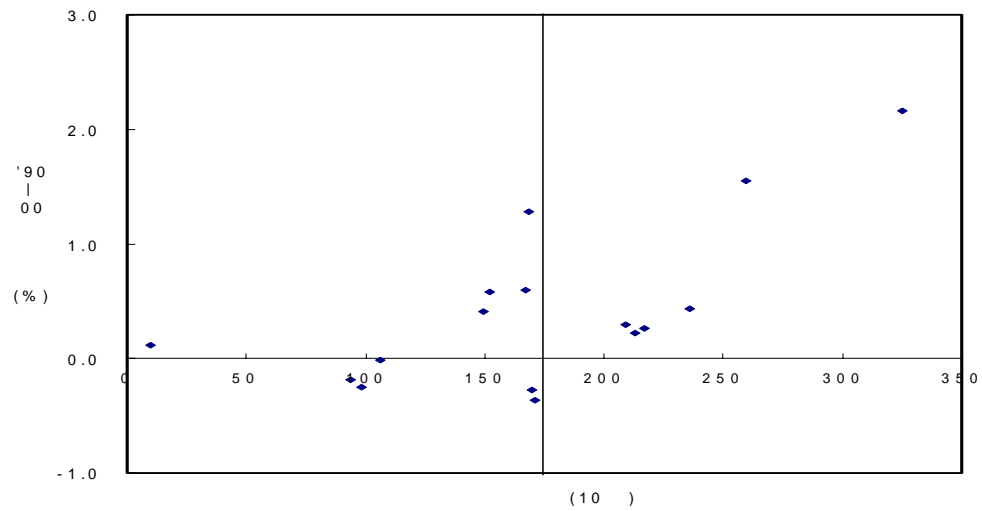
1. 농업생산액의 변화; 시·군별 분석

- 그렇다면 전국적인 농업구조 변화가 지역농업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군별 농업총생산액의 동향을 보기로 한다. 다만, 시·군별 농업통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통계청의 시·도별 농업총생산액(GRDP)을 시·군의 경지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농업총생산액을 추정하였다.
- <그림 3>과 <그림 4>는 2000년 기준으로 시·군별 농업총생산액의 규모와 1990~2000년간 변화율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3>에서 해남, 북제주, 남제주, 당진, 김제, 나주, 예산 등은 총생산액도 많고 성장하는 지역이며, 화성, 상주, 무안, 평택 등은 총생산액은 크지만 쇠퇴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농업총생산액은 적으나 성장률이 높은 지역은 장수, 김제, 공주, 예천, 가평, 장흥, 파주 등이다.

<그림 3> 농업총생산액과 변화율의 시군 분포(전국)



<그림 4> 농업총생산액과 변화율의 시군 분포(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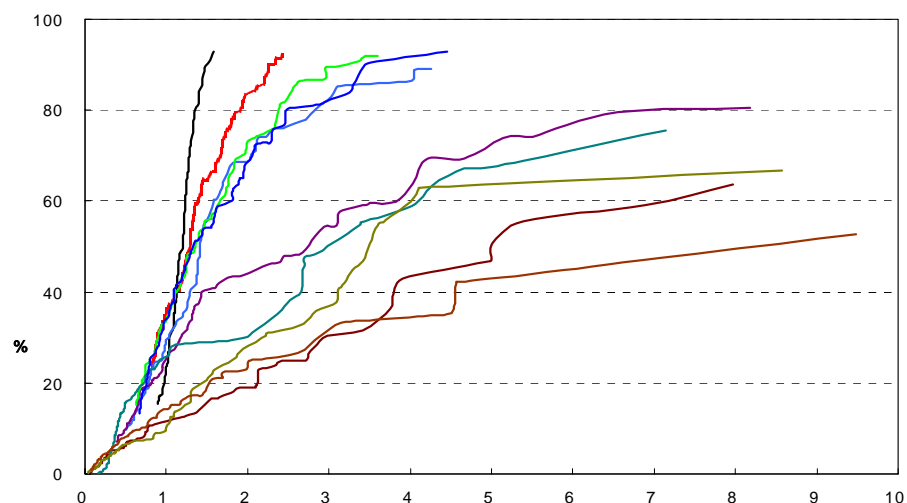


2. 지역농업의 특화와 주산지 형성

- 지역농업의 생산력 격차는 산지 이동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산지

형성과 산지 이동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화계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화계수란 어떤 품목에 대한 특정 지역의 생산 비중을 해당 작목의 전국 구성비로 나눈 값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품목의 특화계수가 1이면 전국 분포와 동일하다는 의미이며, 1보다 클수록 해당 품목이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시·군별로 농업총생산액에 대한 품목별 특화계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농업총조사에서 조사한 시·군별 작물 재배면적과 가축 사육두수를 토대로 농촌진흥청의 표준소득자료를 적용하여 품목별 생산액을 추정하였다. <그림 5>에서 품목별 특화계수를 보면, 포도, 사과, 수박, 마늘, 배 등은 지역적인 특화가 많이 진행된 품목이며, 반면에 논벼, 한우, 배추, 고추, 돼지 등은 일정 지역에 특화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주요 품목의 특화계수와 시군별 누적분포(2000년)



자료: 통계청 KOSIS 자료와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추정.

- <표 4>는 충남지역의 주요 품목에 대한 주산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화계수의 상위 순위대로 시군을 나열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 기준으로 보면, 논벼는 서천군, 당진군, 보령시 등이, 배

추는 홍성군, 당진군, 아산시 등이, 마늘은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 등이 사과는 예산군, 당진군, 아산시 등이, 돼지는 홍성군, 연기군, 천안시 등이 특화계수가 높은 지역에 해당된다.

<표 4> 충남지역 주요 품목의 주산지 변화(특화계수 상위 순위)

구 분	1990년	2000년
논 벼	대천시, 부여군, 서천군, 논산군, 당진군, 보령군, 아산군, 공주군, 청양군, 공주시, 서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온양시, 서산군, 홍성군, 천안군, 태안군, 금산군	서천군,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논산시, 청양군, 공주시, 아산시, 계룡출장소, 연기군, 예산군,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천안시, 금산군
배 추	홍성군, 온양시, 아산군, 당진군, 공주시, 예산군, 보령군, 서산군, 천안시, 연기군, 서산시, 천안군, 대천시, 태안군, 청양군, 부여군, 공주군, 서천군, 금산군, 논산군	홍성군, 당진군,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연기군, 계룡출장소, 공주시, 금산군, 청양군, 천안시, 부여군, 서천군, 논산시
마 늘	태안군, 서산군,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보령군, 당진군, 공주시, 금산군, 공주군, 아산군, 예산군, 청양군, 대천시, 논산군, 온양시, 부여군, 천안시, 천안군, 연기군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 계룡출장소, 당진군, 서천군, 보령시, 예산군, 공주시, 아산시, 청양군, 금산군, 부여군, 논산시, 천안시, 연기군
사 과	예산군, 온양시, 천안시, 아산군, 홍성군, 당진군, 천안군, 논산군, 공주시, 공주군, 서산군, 금산군, 서산시, 연기군, 부여군, 보령군, 청양군, 서천군, 태안군, 대천시	예산군, 당진군, 아산시, 홍성군, 공주시, 천안시, 금산군, 논산시, 서산시, 태안군, 계룡출장소,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연기군
돼 지	홍성군, 당진군, 천안시, 논산군, 연기군, 아산군, 천안군, 공주시, 예산군, 온양시, 청양군, 공주군, 보령군, 서산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서산시, 태안군, 대천시	홍성군, 연기군, 천안시, 당진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아산시, 청양군, 예산군,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태안군, 계룡출장소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3. 농가 분화와 영농조직화

- 지역농업의 생산력 변화는 지역농업을 구성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활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생산력의 쇠퇴는 농경지나 농가 또는 농업종사자의 감소로 나타나는 반면, 생산력의 향상은 경영규모 확대, 농업경영의 전문화, 상업농 진전과 농산물 판매액 증가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 농업경영의 규모화·전문화는 전국 통계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으로, 특히 1990년 중반 이후부터 대농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충남에서 3ha 이상 계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진, 서산, 아산, 논산, 예산, 부여, 서천, 태안, 천안, 보령 등이 10위 권에 속한다. 또한 농산물 판매액 5천만원 이상의 부농이 많은 시군은 당진, 논산, 천안, 아산, 부여, 홍성, 예산, 서산, 서천 등이다.

<표 5> 충남지역 대농 농가수 시군 분포(2000년)

단위: 호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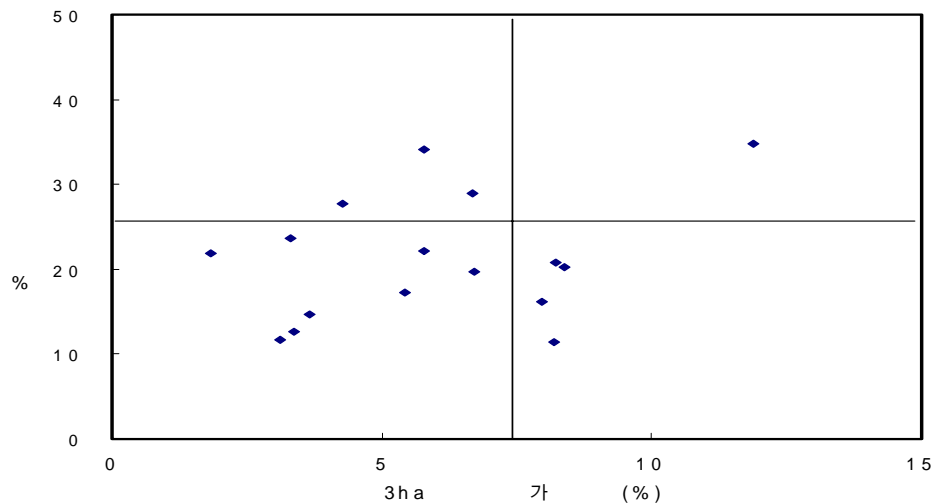
순위	경지 3ha 이상 농가			농산물 판매액 5천만원 이상 농가		
	시군명	농가수	농가 비율	시군명	농가수	농가 비율
1	당진군	1,887	11.88	당진군	782	4.92
2	서산시	1,211	8.38	논산시	482	3.19
3	아산시	1,008	7.97	천안시	436	3.73
4	논산시	1,008	6.67	아산시	374	2.96
5	예산군	918	6.72	부여군	335	2.38
6	부여군	814	5.78	홍성군	330	2.62
7	서천군	808	8.18	예산군	245	1.79
8	태안군	807	8.22	서산시	239	1.65
9	천안시	675	5.77	서천군	193	1.95
10	보령시	590	5.41	공주시	157	1.17
11	홍성군	462	3.66	연기군	153	2.06
12	공주시	446	3.31	금산군	110	1.14
13	연기군	316	4.26	보령시	110	1.01
14	청양군	259	3.37	청양군	108	1.41
15	금산군	177	1.84	태안군	86	0.88
16	계룡출장소	19	3.13	계룡출장소	3	0.49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 한편, 개별적인 규모화를 추구하는 농가와 아울러 농가의 조직화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형태로 작목반 조직과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이 존재한다. 2000년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영농조직 참여농가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그림 6>과 같이 영농조직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대농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서, 중소농

이 영농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충남지역 영농조직 참여농가 비율의 시군 분포(2000년)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Ⅲ.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패러다임

1. 농업·농촌의 비전

- 비전이란 국가가 요구하는 가야할 방향, 국내외 여건상 갈 수밖에 없는 방향, 노력하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업·농촌의 비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농업인·소비자·도시민의 이익이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는 비전이다. 소득 증가로 식품 수요가 고급화·다양화되면

서 품질과 안전성에 따른 가격차별이 확대되고, 이러한 소비자 요구가 충족됨으로써 농가의 소득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여가와 문화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관·환경·자연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어 농가와 농촌주민의 소득기회가 증가하고 도시민의 후생이 증대될 것이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가 증진되어 농가와 농촌을 위한 납세부담이 수용되고 농가소득과 농촌지역개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둘째, 시장경쟁을 통해 다양한 경영체가 공존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다. 시장개방 충격의 일정 부분은 정부 지원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생산자의 자구 노력으로 극복하는 역할분담 체계가 확립되며, 기술진보와 경영혁신으로 농가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선진농가 중심의 농업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영세농·결업농이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여 전업농과 공존하면서 농촌경제사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소농은 소량다품목의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농교류 기능을 담당하고, 중요한 노동력 공급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셋째, 신수요 개발과 유통혁신으로 경쟁력과 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비전이다. 현재의 개별판매에서 전업농 작목회 중심의 공동선별·공동계산·공동브랜드가 점차 확대되고 주변 농가를 흡수하여 조합단위 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여기서 지역농협의 (공동)출자와 지자체, 중앙회, 기업 등의 우선출자로 산지유통전문회사가 발전하여 산지유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고부가가치 수출농업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도매시장은 저온저장 및 선별포장 시설을 갖춘 물류센터로 개편되어 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물류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다.
- 주거·휴양·산업공간으로서의 농촌가치가 재발견될 것이라는 비

전이다. 전국이 격자형 고속도로로 연결되고 마을과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모든 농촌의 공간적 불리성이 크게 해소되며, 도시민의 의식, 가치, 생활의 변화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지역의 자연, 문화, 농업과 연관된 산업이 발달하게 되지만, 지역의 자연·경제적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전할 것이다. 또한 주거는 마을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중심도시에서 향유하는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마을-중심도시」 직결형 체제가 늘어나는 등 정주체계가 다양화될 것이다. 나아가 농촌에도 엄격한 토지이용계획 제도가 도입되고, 주민참여형 관리체계가 발달됨에 따라 농촌이 아름답고 깨끗한 주거·휴양공간으로 정착될 것이다.

- 농촌형 사회복지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비전이다. 농촌은 인구밀도가 낮고 노인 인구비중이 높으며, 대체로 문화·보건·복지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불리성을 보완하는 농촌형 복지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에서 일상의료서비스, 중심도시에서 전문의료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며, 농촌지역의 공간적·경제적 불리성을 보완하는 사회보험·보건혜택과 보육·교육서비스가 보장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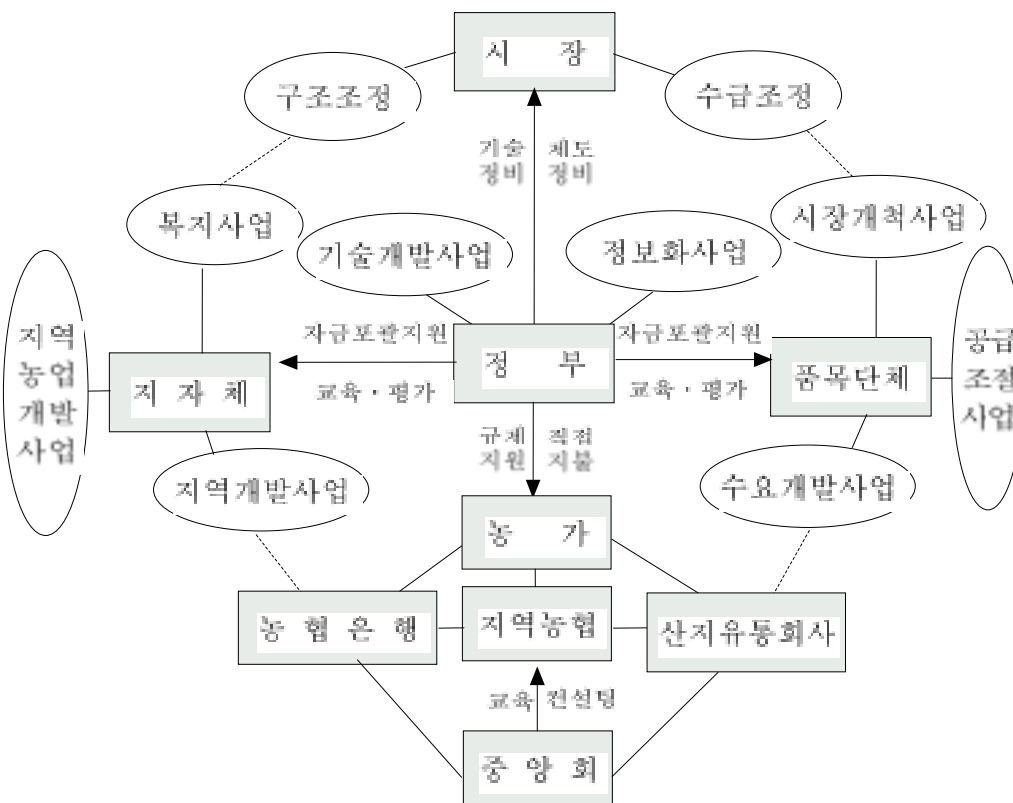
2. 농정의 기조와 방향

- 첫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의 발전은 생산자의 창의와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정책은 이들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선진농가 육성보다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장기능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농가를 위한 최소소득 보전과 복지 지원, 소비자를 위한 식품 안전성, 국민을 위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둘째, 시장주도의 구조조정과 수급조정을 견지해야 한다. 모든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농업의 구조조정이 시장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다. 분야별·품목별 대책은 정부 주도의 사업을 양산시켜 설계주의 농정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으며, 개방시대에 인위적 생산조정은 농산물 수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적 손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특정 농가와 조직에 이익이 귀속되는 보조를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선택과 탈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셋째, 소득보전과 복지지원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장 개방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개방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가경제의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주요 농산물에 대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미달 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것이다.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일관된 목표 소득지지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른바 ‘소비자부담형 농정’에서 ‘재정부담형 농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지불 지급규모는 시장개방 폭에 따라 결정되며, 그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이 변화하게 된다. 또한 농업인과 농촌주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다.
- 넷째, 지자체 및 품목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의 개발자’ 및 ‘재원의 관리자’를 통한 사업추진 역할에 충실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품목별 단체가 결정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규모 결정, 모니터링 및 평가, 교육 및 컨설팅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며, 사업 추진은 시범사업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업 대상지역, 투자 내용, 사업 추진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품목별 단체 또는 지역 주민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지자체에 대한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 및 지역별 차등보조 방식의 도입을 통해 지방농정을 강화하고, 품목별단체에 대해서는 신시장

개척과 신수요 개발비를 포괄 지원함으로써 자율농정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림 6> 새로운 농정 시스템과 농정 주체의 역할 분담



IV. 충남 농업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1. 지역농업의 특화 및 조직화

- 최근 지역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전국적인 주제는 점점 식상해지는 반면에 지역의 사례가 세간의 흥미를 끌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역농업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농업은 산업적 특성에 비추어 지역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역농업은 글자 그대로 '지역의 농업'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역농업의 의미는 지역적으로 농업을 구분하는 측면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지역농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 첫째는 지방농정을 위한 지역농업으로서 '지방농정의 단위'라는 측면이다.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면서 지역의 역사·문화·전통 등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농업 전략이 모색되는 추세이다. 예컨대 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강원도 농업이 경상도나 전라도와 다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중앙정부의 평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농업을 위한 지방농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농정 기구를 구성하고 지역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지방농정은 중앙정부의 농업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시험장과 같은 역할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농림부 차원에서는 농업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원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나, 지자체는 관계부처 정책사업을 적절히 연계시킴으로써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종합농정'을 펼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을 한정할수록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의 선택 폭이 넓으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는 '농업경영의 단위'로서의 지역농업이며, 지역농업을 하나의 경영체 혹은 조직체로 보는 인식이다. 그 동안 영세농 구조를 개선

하기 위하여 개별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와 더불어 영농 조직화가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의 영농 조직은 공동생산과 협업경영에 바탕을 둔 생산공동체의 성격이 점차 약해지면서 농산물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조직 또는 품목 조직으로 확장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유통조직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의 유리성을 추구하면서 주산지 형성을 견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지역농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을 조직화하는 것은 전통적인 농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단계에서 농산물의 생산만으로는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저장·가공·유통을 연계한 농산물의 부가가치의 창출은 미래 농업의 방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농산업화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가족농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러한 부가가치를 내부화하기 위하여 개별농가의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2. 지역농업의 4대 혁신 방향

- 지역농업의 구조 변화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품목별로 또는 지대별로 다양한 농업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주산지가 뚜렷해지고 그 안의 개별경영체가 규모화되는 동시에 조직적인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통한 혁신의 다양한 사례가 발견되며, 이러한 혁신의 유형을 코스트 혁신, 상품 혁신, 마케팅 혁신, 서비스 혁신 등 4대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는 코스트 혁신으로, 개별경영의 노력과 조직적 대응이 존재한다. 즉, 개별경영에서는 기계화와 시설자동화 등 생력화 기술을 도입하여 노력비 절감과 고정비용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총소득 증대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나아가, 작목반과 농업법인 및 협동조합 사

업연합 등 조직화를 통하여 규모경제와 범위경제를 추구할 수 있다. 최근에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통한 코스트 혁신의 사례로 협동조합 사업연합이 부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안성 사업연합」이 성공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 둘째는 상품 혁신이다. 새로운 품종과 기술을 채용하여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전공학(BT)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식품을 개발하며, 동일한 농산물이라도 가공·예냉·저장·포장 등 수확후 관리기술을 채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나아가 특정한 소비자를 겨냥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개척하고 점차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체작목으로 보급된 참다래, 복분자, 파프리카 등이 성공한 사례로 꼽히며, 친환경농산물도 재배방법을 차별화한 상품 혁신의 사례이다. 또한 쌀의 수확후처리를 차별화한 무세미 또는 기능성 코팅쌀 등도 신상품을 개발한 사례이다.
- 셋째는 마케팅 혁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거래를 추진하여 수취가격을 높이며, 계열주체 중심의 계약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상품을 브랜드화하고 유통업체에 안정 공급함으로써 대량거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농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마케팅을 주도하면서 농가는 고품질 상품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최근 들어 품목별로 산지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출하·공동계산제를 확립함으로써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수출도 늘려나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넷째는 서비스 혁신이다. 예를 들어 우리 농산물에는 농촌의 전통과 문화가 배어 있으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도 지역농업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서비스 활동이다. 또, 도시민에게 농촌 현장을 체험하게 하고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농림부가 지원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이 지원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 농협이 지원하는 팜스테이마을 등이 도농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협과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참여한 '1사1촌 자매결연운동'은 도농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농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농업 발전 전략

3.1.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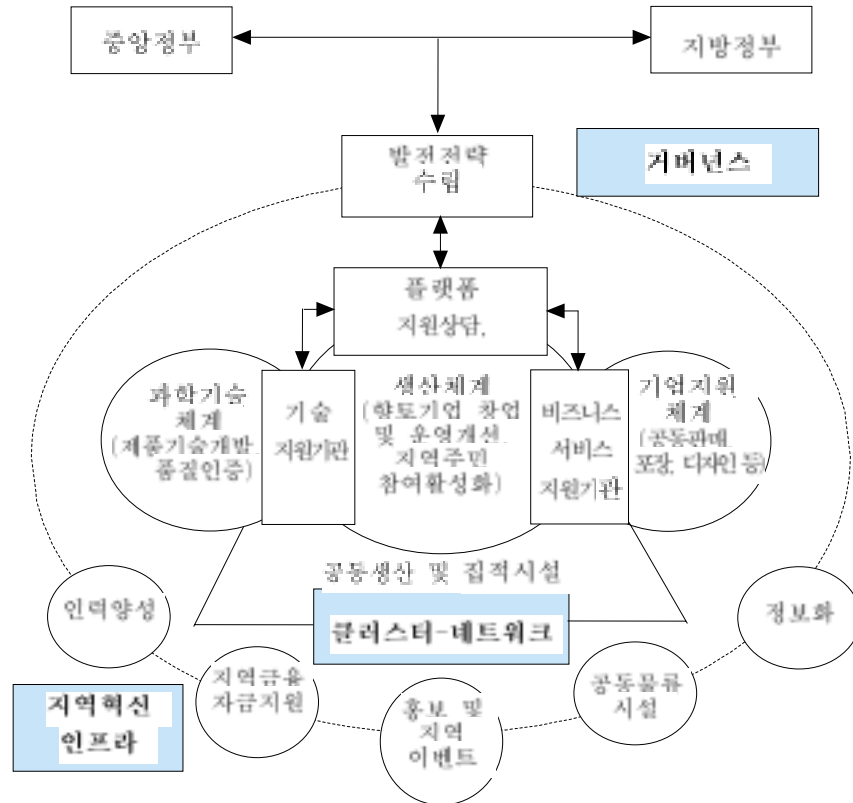
-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2004.2)을 통해 지역농업 조직화와 지방농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농업 클러스터정책'을 수립하였다. 비록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지역농업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연구·행정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혁신 주체로 재편성한다는 기본 골격은 그간의 농업정책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오늘날 클러스터 정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기존의 영세농 구조를 전제로 농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농업 클러스터라는 개념 하에 농업 관련주체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보자는 데 의의가 크다.
-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정책적인 의미는 지역농업의 추진 주체라는 점이다. 오늘날 개별농가의 경영 형태는 전문화 또는 단일화의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발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농업 단위로 다수의 경영군을 조직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농업 부문에서도 오래 전부터 산업군집 또는 클러스터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작목반을

비롯한 생산조직 그리고 품목별 주산지와 특산단지 등은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로 보면 초보적인 형태의 산업 집적지로 볼 수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몇몇은 산업 클러스터의 변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농업인과 농기업체 그리고 학계와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등이 서로 긴밀히 연계된 조직체로서, 지역농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2.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

- 농산업 클러스터란 “일정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농업경영체와 농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행정기관·단체 등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이루어가는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농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인 생산시스템에는 원료 농산물의 공급체로서 전업농가, 작목반, 농업법인, 산지유통센터 등을 기본으로 원료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저장·가공업체(농기업)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연계하여 생산시스템을 구성한다. 생산시스템을 지원하는 기구로 연구개발시스템과 산업지원시스템을 구성요소로 포함할 수 있다. 연구개발시스템에는 농과대학 및 연구소, 농업기술원, 특화시험장, 농업기술센터 등이 있으며, 산업지원시스템에는 전방산업인 농자재업체와 농작업 서비스업체, 그리고 후방산업으로 포장이나 디자인을 포함한 유통업체가 해당된다. 농가나 가공업체에 기술을 전파하는 기술지원기관으로 산학 컨소시엄, 기술이전기관, 현장애로기술 연구기관 등이 있으며, 농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기관으로는 농협, 경영 컨설팅업체, 수출알선 무역상사, 농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이 존재한다.

<그림 7>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과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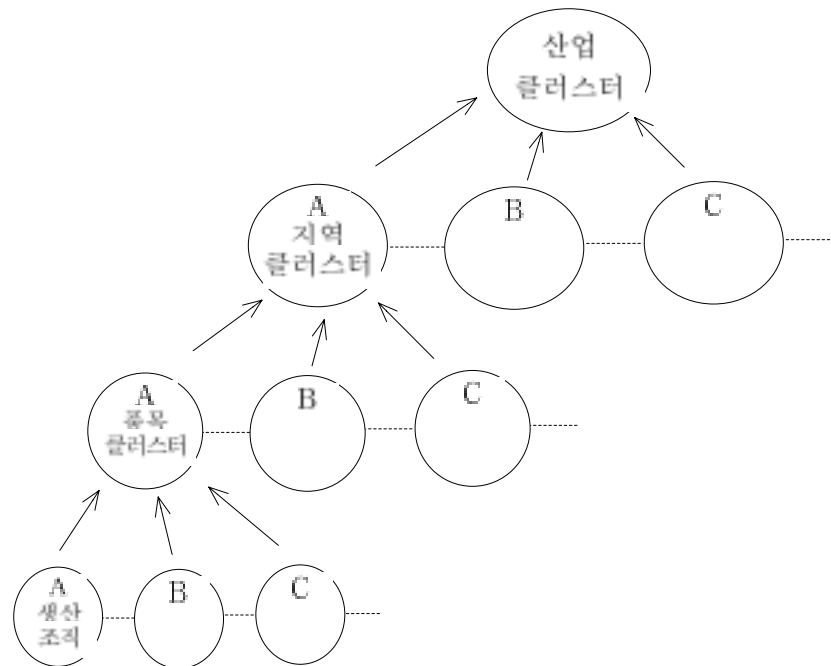


- 농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지역의 인프라로서 교육 훈련, 홍보, 금융, 물류·유통, 정보·통신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산업적 SOC 뿐만 아니라 주거 여건, 환경, 지역문화, 사회적 분위기 등도 농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반적인 기획·조정을 담당하며 나아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담당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거버넌스 개념에 입각한 자율농정의 측면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지역농업혁신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3. 농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 농산업 클러스터는 <그림 8>과 같이 몇몇 농가가 작목반이나 생산조직을 형성한 초보적인 생산단지로 시작하여 기능적 결합체의 성격을 가진 품목 클러스터 또는 지역 클러스터를 거쳐 보다 광역화된 산업 클러스터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농산업 클러스터의 발전모형



- 먼저, 생산조직 단계에서는 전업농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집단적인 생산단지가 형성될 수 있는 농업기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생산조직이 품목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능만이 아닌 유통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품목조직 단위로 공동판매나 가공사업 등의 공동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로 품목 클러스터가 지역 단위의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는 물류센터나 정보화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산업 클러스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와 상품 및 지식 정보를 클러스터 구성원 모두가 공

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새로운 산업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특산지를 발전 내지 보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클러스터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출발점은 클러스터의 범위를 설정하고 참여 주체들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 클러스터는 기존에 산업적으로 성숙된 특산단지 중에서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밖에 기존의 산업 집적지 가운데 혁신 가능성이 있는 클러스터도 발굴해야 한다.
- 둘째,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클러스터의 핵심주체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생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당해 지역의 농업 발전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하고 농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추진기구로서 ‘지역농업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지역농업 클러스터가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의 확립과 역할 정립이 중요하며, 나아가 개별주체간 연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가와 농기업은 농업생산 및 관련산업 경제활동에 충실하고, 대학과 연구소는 생산자와 농기업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며, 정부는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호, “지역농업의 현실과 비전”, 『농업전망 20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김정호,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가능성과 과제”, 『농업경영·정책연구』, 한국농업정책학회, 2004.12.
- 김정호 외,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김정호 외,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 농림부,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 2004.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2002.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2010 정책 비전』, 200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2003.

21세기 지속가능 충남발전을 위한 환경비전과 전략 연구

정희성 · 박창석 · 엄상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책임연구원 ·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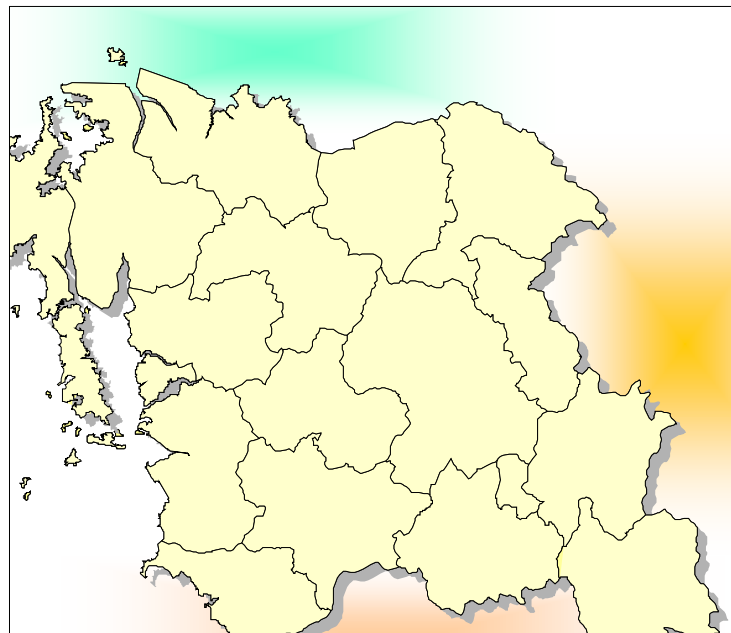
I. 서론	1
II. 환경실상과 과제	3
1. 자연환경 측면	3
2. 경제·사회적 발달 측면	5
3. 환경오염 실태 측면	8
III. 환경문제의 향후 전망과 방향	12
1. 환경관리여건의 변화전망	12
2. 향후 환경여건에 대한 종합평가	14
3. 비전과 기본방향	16
IV.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19
1. 녹지생태축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 추진	19
2. 도시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계획·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20
3.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강화	21
4.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제도의 정착	24
V. 결 론	25
참고문헌	27

I. 서론

충청남도는 국토의 중심부로 주요 간선교통망이 통과하는 교통의 결절지이며, 지역간 교류·협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수도권과 동남부(영남권), 서남부(호남권)를 연결하는 관문이고, 경부·호남선과 고속철도, 경부·호남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통과하는 교통요충지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15개 시·군, 8,584km²으로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의 6개 시지역과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군의 9개 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형적인 특징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표고 100m 이하의 구릉성 평야지대이어서 개발 잠재력과 보전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서해연안은 양호한 해양환경, 가로림만·천수만 등 광범위한 간석지,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금강, 서산의 간월호, 부남호, 삼교호, 대호방조제, 보령호, 예당저수지 등 수자원 공급원이 풍부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잠재력이 높다.



(그림 1) 충청남도의 위치와 행정구역

또한 지역에 따라 산업발달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북부지역의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연기군 등은 인구나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양, 태안, 금산군 등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과소지역으로 분류된다.

환경적으로 대규모 간척사업, 금강 하구언 건설, 아산만 일대의 산업단지 조성 및 축산업 증가 등은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 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중국과의 교역 증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연안개발은 연안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북부지역은 비계획적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 대규모 산업시설과 화력발전소 등에 의한 환경오염은 향후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양호한 생태환경자원 등을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적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지역경쟁력을 지닌 지속가능한 충남으로 발전하기 위한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환경정책과제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충청남도의 환경실상과 과제

1. 자연환경 측면

토지피복도 분석결과, 시가화 건조지역은 0.3%에 불과하고, 산림지역이 48.3%, 농업지역이 41.0%로 비교적 산림 및 농업환경이 양호하다. 수역이 2.4%로 시가화 건조지역 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금강유역 하천 및 호소가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생태·자연도 분석결과 1등급지역이 412km²(4.8%), 2등급이 3,118km²(36.0%) 등으로 나타나 양호한 생태적 기반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국가생태계보전지역은 신두리 사구해역(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일원 0.639km², 02. 10. 9 해양수산부 지정)이 유일하고, 시·도생태계 보전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웅습지(0.065km²)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져 있으며, 이외에도 조수보호구역 63개소, 9,403ha이 지정되어 있다. 해안사구는 133개

소가 분포하지만, 양호 19개소, 보통 63개소, 파괴 51개소로 조사되어 해안사구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표 1> 토지피복도 현황

구분	토지피복(대분류)							
	계	시가화 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
면적(km ²)	8,347.57	24.34	3,422.49	4,033.99	449.92	32.99	183.47	200.37
비율(%)	100.0	0.3	41.0	48.3	5.4	0.4	2.2	2.4

자료 : 환경부, 2005,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표 2> 생태·자연도 현황

구분		등 급				
		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충남	면적(km ²)	8,670	412	3,118	4,752	388
	비율(%)	100.0	4.8	36.0	54.8	4.5
전국	비율(%)	100,144	9,436	39,261	460	51
	비율(%)	100.0	9.4	39.2	44.7	6.7

주 : 생태·자연도의 등급수정이나 GIS 보정 등에 따라 수치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환경부, 2005, 생태·자연도 작성추진 현황 보고

임야면적은 1990년에 4,552.6km²에서 2003년에 4,489.8km²으로 62.8km²가 감소한 반면, 농지는 해당 기간동안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동안에 전국적으로 임야면적은 1% 내외가 감소하였으나, 충청남도는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임야에 대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농지는 대전, 충북 등 타 충청권 지역과 대조적으로 1990년에 2,722.8km²에서 2003년에 2,756.6km²으로 33.8km²가 증가하였다.

<표 3> 산림·농지면적의 변화

(단위: km²)

구분	1990		1995		2000		2003		변화량(90-03)	
	농지	임야	농지	임야	농지	임야	농지	임야	농지	임야
대전	110.3	299.8	94.2	297.3	88.2	293.9	83.4	290.8	-26.9	-9
충남	2,722.8	4,552.6	2,829.4	4,561.5	2,787.6	4,519.1	2,756.6	4,489.8	33.8	-62.8

자료 : 통계청(www.nso.go.kr)

자연공원은 충청남도 전체 면적의 2.16%로 계룡산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의 2개의 국립공원(육지: 99.84km², 해상: 290.30km²), 덕산, 칠갑산, 대둔산 도립공원, 고북저수지군립공원이 지정(도립·군립공원의 면적: 80.40km²)되어 있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계룡산국립공원과 덕산, 칠갑산 도립공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어 자연공원 관리와 서식지 보전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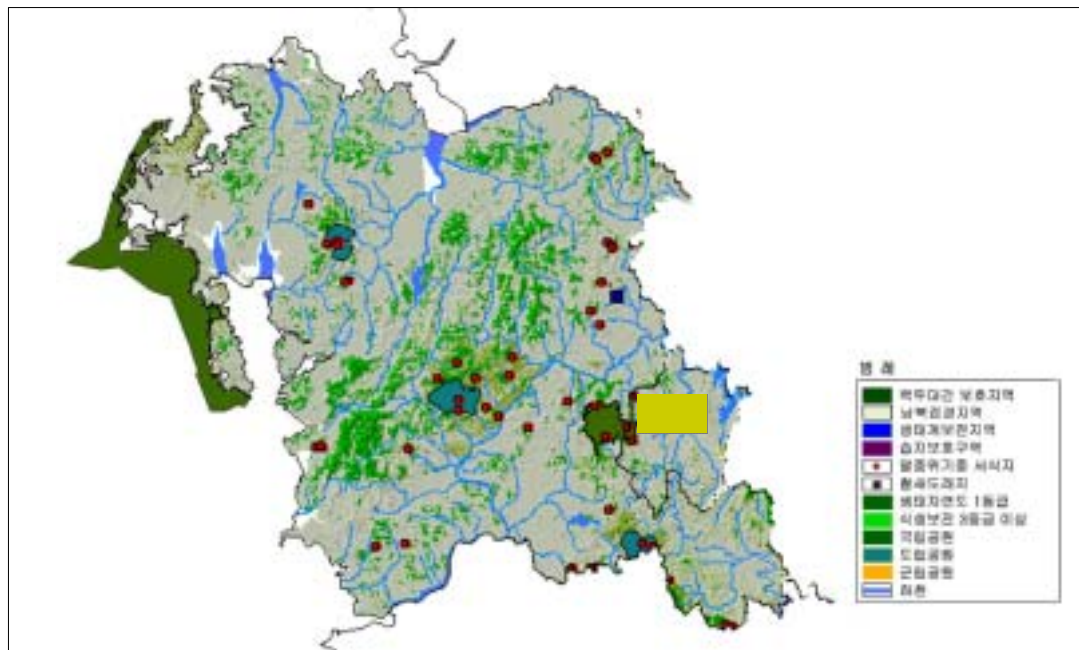
도시공원은 총 694개소, 53.7km²이 분포하며,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28.1m²로 나타나 도시공원법상 기준인 6m²/인, 제4차국토종합계획의 계획목표인 6.4m²/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인당 도시공원에 대한 전국평균(21.0m²/인)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표 4> 전국 및 충청권의 도시공원 현황

구분	도시공원(02)		인구(03) (천인)	1인당 도시공원면적 (m ² /인)
	개소	면적(km ²)		
전국	10,722	1,014.9	48,386.8	21.0
충남	694	53.7	1,912.8	28.1
대전	318	40.7	1,432.3	28.4
충북	487	72.1	1,489.6	48.4

주 : 도시공원의 경우 묘지공원을 제외한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생활권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 환경부, 2003, 환경통계연감



(그림 2) 자연환경 현황분석도

2. 경제·사회적 발달 측면

1) 인구규모와 도시화

인구는 1999년 1,819천인에서, 2004년 1,972천인으로 2.76% 증가하여 전국 대비 인구비중이 1999년의 3.84%에서 2004년 4.04%로 증가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연령층이 1995년 176,857명에서 2004년 261,433명으로 1.48배 증가하여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도시화율(행정구역상 읍지역 이상)은 63.0%로서 전국 평균 도시화율 88.3%에 비해 매우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산업의 유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의 건설,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등에 의해 도시화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또한, 충청남도 전체 인구밀도는 229.4인/km²으로 2003년 기준 전국 평균 (490.2인/km²)의 46.8% 수준이다. 지자체별 인구밀도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 (801.5인/km²), 계룡시(512.6인/km²)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청양군은 74.6인/km²으로 가장 낮은 인구밀도를 보였다.

<표 5> 인구규모 변화

(단위 : 천인, %)

구 분	1999년	2000년	2004년
전 국	47,336	47,275	48,785
충 남	1,819	1,922	1,973
구성비	3.84	4.06	4.04

주 : 전국인구는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이용
자료 : 충청남도(www.chungnam.net)

<표 6> 시·군별 인구 현황

구 분	인구(인)	면적(km ²)	인구밀도(인/km ²)
충청남도	1,972,553	8,598	229.4
천안시	509,744	636	801.5
공주시	131,140	941	139.4
보령시	109,401	568	192.6
아산시	205,057	542	378.3
서산시	150,890	739	204.2
논산시	136,503	555	246.0
계룡시	31,270	61	512.6
금산군	60,620	576	105.2
연기군	85,578	361	237.1
부여군	83,673	625	133.9
서천군	65,960	358	184.2
청양군	35,828	480	74.6
홍성군	91,699	444	206.5
예산군	92,487	543	170.3
태안군	63,939	505	126.6
당진군	118,764	664	178.9

자료 : 충청남도(www.chungnam.net)

지역별로 인구변화 특성을 살펴보면, 천안·아산권과 대전시 주변권,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개발압력에 따른 인구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청양, 부여, 공주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의 배후지역으로 교통발달과 정보화 등에 의해 전원형 타운 또는 실버타운 수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 주요 산업활동과 산업단지

2000년 12월 현재 충청남도에는 국가산업단지 6개(17,748천m²), 지방산업단지 21개(26,436천m²), 농공단지 58개(10,676천m²)가 분포하고 있다. 이는 전국

산업단지 면적의 4.8%이며, 산업체 개수로는 전국 국가산업단지의 16.7%, 지방산업단지 13.0%, 농공단지 9.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가산업단지는 총 6개소로 천안외국인전용공단, 고정국가산업단지, 아산 국가산업단지, 대죽자원비축단지, 장군국가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등이 조성되어 가동 중이거나 계획에 있다.

<표 7> 산업단지 현황

(단위 : 천㎡)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소계		
	국가	지방	농공	국가	지방	농공	국가	지방	농공	국가	지방	농공	국가	지방	농공	국가	지방	농공
대전	-	479	-	-	777	-	27,781	-	-	-	7,410	-	-	-	-	27,781	8,666	-
충북	-	3,994	-	-	-	-	3,943	1,286	3,457	4,633	14,544	1,279	-	2,377	121	8,576	22,201	4857
충남	-	-	-	4,749	359	-	-	950	4,905	12,999	23,615	4,311	-	1,512	1,462	17,748	26,436	10,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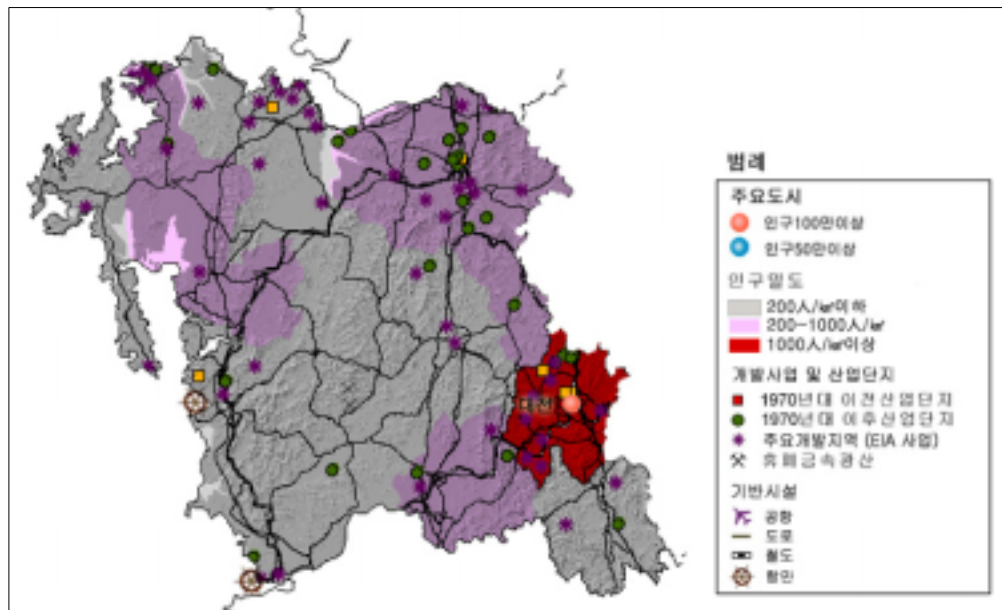
주 : 조성일 기준, 농공동단지는 지정일 기준, 미착수단지는 제외

자료 : 최정석, 2004,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 적용전략, KEI 발표자료

3) 주요 개발사업의 입지실태

충청남도는 수도권과의 연결성과 고속도로·철도 등의 연계 및 확충 등에 따라 천안, 아산, 당진 등에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등의 입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등 북부지역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위락시설의 증가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당진-상주고속도로, 서천-공주간고속도로, 대전-안면도 교량건설, 안면도 꽃박람회 등 대규모 개발행위에 따른 광역생태축 등의 훼손과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림 3) 경제·사회적 환경 현황분석도

3. 환경오염 실태 측면

1) 대기오염

충청남도는 2002년 기준으로 CO의 대기오염부하가 4,798(kg/km²), NOx가 11,726(kg/km²), PM₁₀은 521(kg/km²), VOCs는 4,853(kg/km²)으로 전국 평균부하보다 낮아 비교적 양호한 대기오염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에 전체 대기오염배출업체 5,800개 중 42%가 집중되어 대기환경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2004년에 오존주의보가 대전은 4회, 충북은 1회가 발령된 바 있어, 해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충남의 경우, 오존주의보 발령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서해연안에 화력발전소 6개소(기력: 당진, 보령, 태안, 서천, 복합화력: 당진, 보령)가 위치하고 있어 대기오염 광역화가 우려된다. PM₁₀오염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지역이 3~4월에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봄철의 황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8> 충청권 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

구분		CO	Nox	Sox	PM ₁₀	VOC	NH ₃
대전	오염부하(kg/km ²)	37,601	40,741	4,802	1,855	31,108	2,026
	오염량(kg)	20,298,106	21,993,247	2,592,306	1,001,533	16,792,909	1,093,889
충북	오염부하(kg/km ²)	4,796	7,658	2,462	617	3,494	1,576
	오염량(kg)	35,645,014	56,909,934	18,300,301	4,588,200	25,968,822	11,714,835
충남	오염부하(kg/km ²)	4,798	11,726	4,994	521	4,853	3,494
	오염량(kg)	41,196,912	100,685,312	42,884,366	4,473,918	41,673,471	29,997,482
전국평균		39,345	36,334	11,340	2,259	28,413	3,709

자료 : 환경부, 200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4차년도 자료)

2) 수자원과 수질오염

충청남도 하천유역은 금강유역 4,506.7km²(52.5%), 삽교호유역 1,619.2km²(18.9%), 안성천유역 356.0km²(4.1%), 보령호(댐)유역 163.6km²(1.9%)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지역에서 서해안으로 각각 유출되는 작은 하천이 분포하는데, 이들의 유역면적은 충청남도 전체 면적의 22.6%인 1,941.7km²에 해당된다.

현재, 금강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 금강수질오염총량계획이 수립되어져 각 지자체별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특히, 연기 및 공주(금강교, 분강리), 부여(백제교, 사산리), 강경의 수질은 2002년 BOD 기준으로 연평균 3.1~4.5ppm으로 3등급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연기 및 공주는 수질오염부하가 높아 효율적 수질부하관리가 필요한 반면, 괴산군은 수질오염부하가 1.34kg/일/km²로 낮아 청정지역으로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하다.

상수원보호구역은 119.235km²(24개소)가 지정되어져 있고,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충북지역 일부에만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금강수계 수변구역으로는 금산군 일부에 26.61km²이 지정되어 있다.

<표 9> 충청권 수변구역 지정 현황

구분	시도	시군구	수변구역 지정면적(km ²)
전국		32개소	1,014.52
금강수계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일부	183.75
	충남	금산군 일부	26.61

자료 : 환경부, 2003, 환경통계연감

3) 폐기물 환경

폐기물발생량은 일반폐기물이 1995년 9,493(톤/일)에서 2002년 17,124(톤/일)로서 1995년 대비 1.8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1년 기준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은 307천톤/연(43%)이며, 매립 308천톤(44%), 소각 93천톤(13%)으로 아직까지 매립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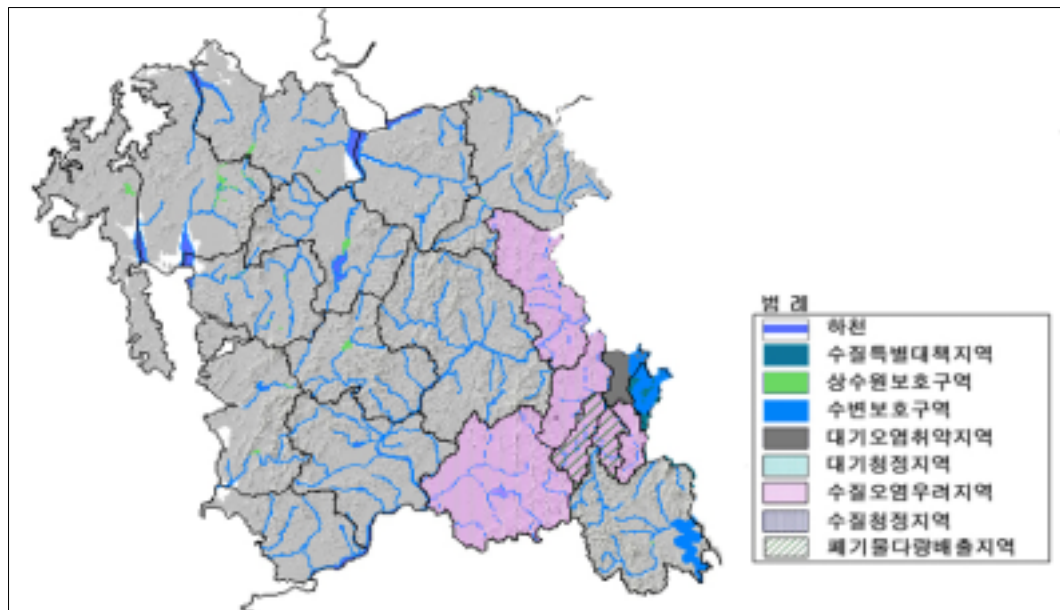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은 연기월산지방산단(20톤), 아산국가산단(17톤), 천안제3지방산업단지(13톤), 조치원1,2,3산단(16톤)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표 10> 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 톤/일)

구분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소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1995년	9,493	1,616	7,877	123
1997년	9,729	1,904	7,825	2,527
1999년	12,638	1,990	10,648	315
2001년	17,372	1,939	15,433	433
2002년	17,124	2,047	15,077	337

자료 : 환경부, 2003, 환경통계연감



(그림 4) 환경오염 실태 현황분석도

주 : 대기오염취약지역, 수질오염우려지역, 폐기물다량배출지역 등은 전국 기초지자체에 대한 CAPSS자료(4차년도), 수질오염총량계획의 수질오염부하, 폐기물발생량 등을 토대로 작성

4) 연안환경오염

충청남도에 위치한 서해연안은 953.3km로 전국 연안의 8.3%이며,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가로림만, 천수만, 비인만 등이 분포한다. 안면도, 원산도 등을 비롯해 260여개의 도서와 갯벌이 발달하였다. 특히, 갯벌은 304.2km²로서 전국 갯벌면적(2,393.0km²)의 12.7%에 해당되며, 당진 28.4km², 서산 67.9km², 태안 102.1km², 홍성 9.8km², 보령 32.7km², 서천군 63.3km²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연안 수질은 연안지역의 개발 및 이용 확대에 따라 자연정화능력이 감소되고 있다. 태안반도 인근 해역이 COD기준 1등급으로 수도권 및 서해안에서 가장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2등급 지역이다.

III. 충청남도의 환경문제의 향후 전망과 방향

1. 환경관리여건의 변화전망

1) 환경질과 관리여건의 지역간 격차

지역 및 시·군별로 사회·경제, 환경적 여건이 다르며, 이에 따라 환경질 및 관리여건의 지역적 차이가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천안, 아산, 당진 군 등 북부권은 고속도로, 고속전철 등 교통망 확충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유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환경오염 심화가 우려된다. 특히, 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오염시설에 의한 각종 VOCs 및 악취물질이 대기 및 수질환경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여, 논산, 금산군 등 남부권은 금강유역권으로 수질오염원의 규제와 금강수질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홍성, 보령, 서천군 등 서부권은 중국에서 유출하는 오염물질이 반폐쇄성 해역인 서해에 유입되면서 해양오염이 점차적 심화되고 있다. 연기, 공주, 계룡시 등 동부권은 대전, 청주시 등 광역도시 및 거점도시와 인접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의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2) 소규모 오염원의 산재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

국내적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 광역교통망의 발달,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국외적으로 대중국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산업입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접지역과 고속도로 IC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발생 증가가 우려된다. 2001년에 천안시(120개), 아산시(122개), 연기군(71개), 논산시(63개)를 중심으로 제조업체 입주가 강화되어 이들 제조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하다.

3) 행정도시 등 개발시대의 제도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신도시, 산업단지, 도로 등 개발활동의 증가에 따른 난개발 및 환경오염 부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주·연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도청 이전 등 개발예정지의 연담화 및 광역화 등 개발압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토지이용의 환경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항만 등 편리해진 교통체계와 연안관광 수요증대 등으로 인해 연안개발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해양 및 연안수요의 관리와 사구, 습지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4) IT, BT 등 새로운 산업활동지로서의 발전가능성

IT, BT 등 첨단산업의 양호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산업환경의 패러다임에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전자·정보기기, 자동차·자동차 부품, 문화콘텐츠, 농·축산바이오, 관광 등 분야에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적 우위에 있는 양호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산업연구원·충남전략산업기획단, 2004). 특히, 2000년 기준 PC보급대수 42,412대(23.6%), 인터넷사용농가 4,630호(2.6%) 등 정보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충청남도, 2001).

그 뿐만 아니라 산지, 평야, 해양에서의 생산물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금산군 등은 약초생산이 활발하여 BT산업 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5) 자원부족과 환경적인 위협의 증가

향후 우수한 환경자원 및 훼손자원에 대한 보전 및 복원방안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금강하구 및 연안지역, 생태녹지축 등에 대한 생태적 건강성 관리와 훼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또한 자연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개발요구에 대응하는 합리적, 체계적인 환경관리 및 지원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서산, 당진 등 서해연안 대기오염의 광역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전시 주변 등 지역 환경부하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될 전망이다. 특히, 보령, 태안, 당진 등에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대기오염 심화 및 광역화가 우려된다.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사업, 대산항·보령항 건설, 안면도~보령연육교 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의 추진으로 인해 연안환경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높다.

2. 향후 환경여건에 대한 종합평가

1) 환경여건 종합평가(SWOT분석)

충청남도의 환경여건에 대한 SWOT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강점(Strength)은 전국적으로 양호한 접근성과 수도권에 인접한 입지적 비교우위성, 비교적 양호한 연안환경 등 자연환경, 금강의 수자원 보유, 지역적으로 다양한 경관자원 등을 들 수 있다. 약점(Weakness)은 수도권의 환경오염 광역화와 더불어 각종 개발압력이 존재, 인구·산업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여 지역간 불균형 발생, 농촌지역의 소규모 개별입지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와 취약한 경제구조 등이다.

기회(Opportunity)는 서해안고속도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전국과의 접근성 향상, 환황해경제권의 성장과 중국의 무역기회의 급격한 성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수도권 기능의 이전에 따른 첨단산업지대로 재편 기회 등이다. 위협(Threat)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유입에 의한 개발압력증가로 환경오염 위협, 수도권과 시·공간적으로 밀접해지면서 지역의 경제적 자족성 약화 우려,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지역정체성)의 소멸의 위협으로 분석된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농지 등 자연환경 · 연안환경 및 자원 풍부 · 다양한 지역 문화 보유 · 금강 등 풍부한 수자원 · 입지적 비교우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환경오염 광역화 · 각종 개발압력에 의한 환경훼손 · 지역간 불균형 심화 · 농촌지역 환경오염 우려 · 소규모 산업단지 광역적 분포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고속도로, 고속철도의 개통 · 환황해경제권의 성장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 첨단산업지대로 전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의 개발압력 가중으로 환경오염 · 지역의 자족성 약화(수도권에 편입) · 지역의 특징적 문화 소멸 위협

<그림 5> 충청남도 환경여건의 SWOT 분석

2) 주요 경제-사회발전 여건에 대한 평가

충청남도는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기능을 분담하는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즉, 고속철도의 개통, 수도권 전철의 연장(서울~천안),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전국과 1~2시간 거리대에 위치하여 수도권 개발압력을 흡수·완충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위치에 있다.

통계청의 인구예측자료(kosis.nso.go.kr)에서 2010년 1,984천인, 2015년 2,047천인, 2020년에는 2,090천인으로 연평균 0.4%가 증가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완료될 경우 실제 인구규모 및 인구증가율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20년 377천인으로 2004년 보다 1.44배 증가하여 인구노령화에 따른 환경관리정책 및 환경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인구추세 전망

(단위 : 천인, %)

구 분	2004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 국(65세 이상)	48,785(4,182)	49,220(5,354)	49,803(6,445)	49,956(7,821)
충 남(65세 이상)	1,973(261)	1,984(307)	2,047(339)	2,090(377)
구성비(65세 이상)	4.04%(6.24%)	4.03%(5.73%)	4.11%(5.26%)	4.18%(4.82%)

주 : 통계청의 시·도 추계인구

자료 : 통계청(kosis.nso.go.kr)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충청도청이전 등 각종 신도시시 등 개발이 집중되고, 대전-당진, 공주-서천 고속도로 등 국가장기교통망 건설에 의한 백두대간 및 광역생태축의 훼손과 환경부하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2011년까지 충청남도에 산업단지 30.7㎢(공장부지는 22.1㎢, 산업단지면적의 72%)를 공급할 계획(제2차산업입지공급계획:2002년~2011년)이므로 산업단지 환경부하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3. 비전과 기본방향

1) 환경비전

환경전략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은 21세기 우리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탈바꿈시키는데 있다. 2005년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금강충청권지역의 비전을 “환경친화적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환경비전을 “환경, 경제, 자원이 조화되는 주민참여형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비전의 달성을 위한 10대 추진전략과 더불어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 산업환경관리(개별입지), 녹지축 등 주요 항목으로 구성된 2015 충남 환경지표를 작성하였다.

<표 12> 2015 충남의 주요 환경지표

주요 지표	현재	미래		비 고
	2003	2008	2015	
· 녹지축 설정	녹지거점 설정	광역생태축 복원 및 구축	생태네트워크 구축	-
· 대기환경 개선(미세먼지)($\mu\text{g}/\text{m}^3$)	54	50('07)"	28(11'06)	1)충청남도 중장기환경정책 방향
· 서해 도서·연안관리	우수도서 관리계획 수립	도서·연안 환경 조사	도서·연안통합관리	-
· 산업환경관리(개별업지)	산업환경 관리계획 수립	개별업지 산업단지 정비	산업단지 환경관리체계 구축	-
· 수질환경 관리(금강 금분K)($\text{BOD}_5(\text{mg}/\ell)$)	3.3(하류기준)	3.0"	2.0	1)환경부(금강수계 목표수질)
· 폐기물 발생량($\text{kg}/\text{인} \cdot \text{일}$)	0.98('00)	0.97"	0.85	1)충청남도 중장기환경정책 방향

자료 : 환경부, 2005,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 기본방향

(1) 생태-경제 공간체계의 구축과 보전

토지자원의 효율적, 계획적 활용으로 토지이용의 생태-효율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지·농지 등의 전용을 통한 토지공급 확대정책을 지양하고 토지의 절약적 이용, 생태순환형 개발 등의 수요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환경성 평가를 통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고, 보전지역은 그 목적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보전한다.

도시적 토지이용은 자연과의 공생,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등을 통해 생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산, 하천, 녹지 등 주요 생태요소를 보전, 복원하고, 이들 상호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생태녹지축 등을 구축하여 생태계에 대한 통합관리를 도모한다. 특히, 주요 개발사업으로 훼손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의 주요 생태축에 대한 보존·복원을 적극 추진한다.

(2)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로 지역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국토는 좁고 부존자원이 부족하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

존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이용과 관리가 비효율적이므로 국토개발 전 분야에 걸쳐서 효율적인 자원 및 에너지 이용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 및 에너지 이용증가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환경오염의 증가 및 지구환경문제에 대응 필요성이 높다.

그리고 대규모 시설 중심의 산발적인 관광자원의 개발보다는 거점개발, 생태관광, 자연환경 중심의 관광개발을 추진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한다. 경제성 위주의 개발보다는 환경성을 포함한 자연과의 조화로운 품격 있는 자연이용행위가 바람직하다.

(3) 환경복지사회로의 발전모델의 정립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는 지역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과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배출된 오염물질을 지역 내에서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물·공기·토양오염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성을 확보하며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해야 한다. 또한 깨끗한 물과 공기 등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환경친화적 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4) 도민과 함께 하는 개발과 환경보전체계의 구축

지역 환경특성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환경관리를 통해 모든 지역이 그 특성과 잠재력에 걸맞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쾌적한 삶의 질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관리 계획과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의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기오염, 수질, 폐기물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공간정보 및 도면을 작성하여 공간정보에 기초한 지역환경관리 체계를 정비·구축한다. 이러한 공간환경지도를 토대로 환경문제지역과 양호지역에 대한 기본구상과 관리방향 등을 제시하여 계획적, 효율적 환경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IV.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1. 생태녹지축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 추진

1) 생태녹지축의 조성

칠장산(경기 안성)-계룡산-대둔산, 칠장산-칠갑산-금강 하구를 잇는 동서-남북 광역생태축을 토대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훼손지역의 복원관리를 강화한다. 도로건설 등에 의한 동서-남북 광역생태축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단절된 생태축이나 훼손지역에 대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러한 동서-남북 광역생태축에 위치한 도시인 천안, 연기, 공주, 논산, 계룡시 등은 생태축의 보전·복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동서-남북 광역생태축과 연계되는 도시(군)생태축을 구성하여 통합적 생태환경관리를 도모한다.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생태적 기능 및 녹지총량의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개발제한구역 녹지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6> 충청남도의 생태녹지축 설정

2) 서해연안의 대기오염 관리방안 수립

서산, 당진, 아산 등 화력발전소, 평택산업단지 등의 확장에 따른 서해연안 대기오염의 광역화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서해연안 대기오염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대기오염 총량관리의 추진의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서북부 서해연안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6개소(당진, 보령, 태안, 서천)는 주요한 대기오염원으로 대기오염부하의 효율적 저감 등의 관리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태안-서산-당진 등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태안-당진 광역완충녹지’를 조성하여 대기오염의 광역화 등에 대비하여 환경정화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림 7) 대기오염 완충녹지 조성

2. 도시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계획 · 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1) 신도시의 환경관리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와 충남도청 이전지역 등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광역환경관리계획의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환경 및 경관, 생태계 기능보전을 위한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보전 및 관리기반을 확보하고, 주변 지역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선도도시로 건설하도록 경관, 공원·녹지, 에너지, 교통, 수질 및 대기 등 친환경적, 생태적 계획·개발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시 환경계획을 기초로 하여 환경용량에 기반한 개발용량을 산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조성을 유도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기능의 유지, 대기 및 폐기물 등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선도할 환경자원·에너지·수질 절약형 등 특성화된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환경생태주거(단)지 등을 적극 조성하고,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를 조성하도록 검토한다.

2) 중·소도시 환경관리의 강화

기존의 중·소도시에 대한 환경정비 및 생태공간 창출 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을 토대로 생태도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한다. 금산군의 1,000개의 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환경용량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례 확산을 유도한다.

그리고 중·소도시의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정보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환경개선과 환경친화적 복지시설 확충하도록 고려한다.

금산, 청양 등은 자연환경과 어메니티에 기반한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도모하고, 주민참여형 생태주거지의 형성을 적극 유도하도록 한다. 서산, 당진, 금산 등의 환경적 여건과 특성,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 환경친화적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추진토록 한다.

3.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강화

1) 생태공단조성을 통한 산업환경관리 개선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 아산 등은 개별입지 산업을 계획적 산업입지로 유도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즉, 개별 산업체가 밀집한 지역을 지역생태형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통합환경관리체계의 도입을 검토하고 에코산업망 등 물질·에너지순환체계 형성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허가제 등을 통한 계획적 입지의 유도와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에 기초한 환경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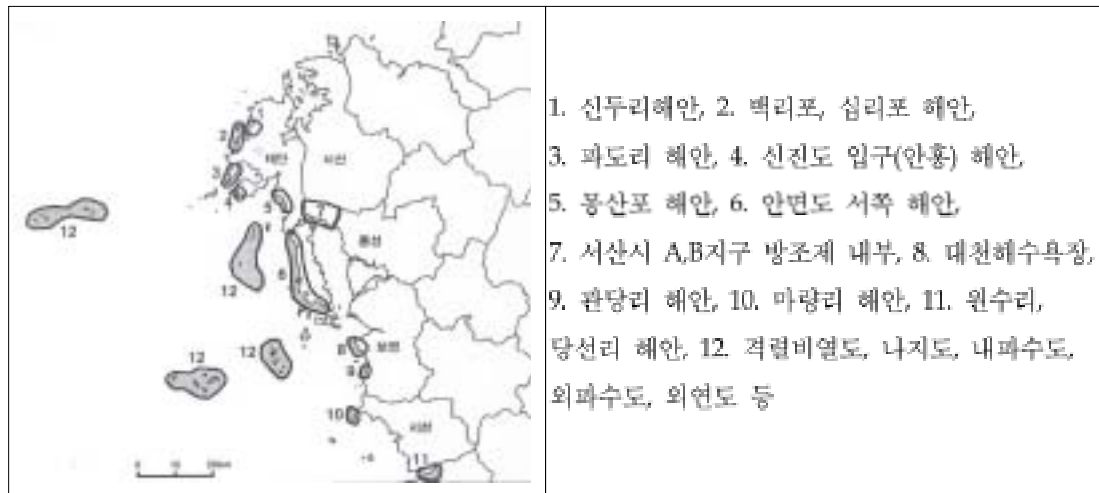
또한 산재한 농공단지에 대해 주변지역의 환경 및 산업 현황, 잠재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토대로 지역환경 및 산업연계 등을 고려한 농촌형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

2) 서해연안 및 금강하구역의 통합관리계획의 수립 추진

태안군 안면읍, 원북면, 소원면 등의 양호한 연안생태자원 및 해양수질(COD 기준 1등급)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도서·연안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자연공원 및 보호구역 지정, 생태체험관광 등을 추진한다. 특히, 태안군 안면읍 등의 훼손해안사구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수생태경관을 지닌 도서·연안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효율적 보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충청남도 서해연안 기지포해안, 남전리-송림리 해안, 신두리해안, 백리포/십리포 해안, 파도리 해안, 신진도 안흥해안, 몽산포해안, 안면도서쪽해안, 대천해수욕장, 관당리 해안 등 해안 습지, 격렬비열도, 나치도, 내파수도, 외파수도, 외연도 등의 도서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금강하구역 환경보전을 위해 전라북도와의 협력적 관리방안 및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9) 서해연안 경관우수지역의 관리
 자료 : 해양수산부, 2003,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서해안 연안실태조사

3) 금강수질관리를 위한 총량관리의 효율적 시행

금강오염총량관리계획에 기초한 시행계획을 조기에 작성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계 강화로 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도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역권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산폐수 등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금강을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변녹지벨트의 조성이나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내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충북 및 해당지 자체와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4) 자연형, 지역소득 창출형 환경관리대안의 모색

환경기초시설의 확장과 함께 수변녹지 조성, 수초단지, 참계 등 치어방류에 따른 주민의 환경관리 의지와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즉, 금강 전체를 참계 등 양식장화하여 수질보전과 함께 관광을 진흥시키고 지역 주민을 조직화하고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노령화 사회 및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여가활동수요를 지역특성별로 친환경적인 관광 또는 친환경 농촌체험 등

의 프로그램으로 수용하여 지역의 소득창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4.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제도의 정착

1) 지역 자율환경관리운동 및 충남지속발전위원회의 구축

충청남도의 사회, 경제,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조례 제정의 활성화와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이 환경관리의 핵심주체가 되도록 유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주민·시민단체·기업·환경전문가 등이 ‘지역사회 환경개선협의회(가칭)’를 결성하여 지역환경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지역사회의 자율환경관리운동을 확산시킨다. 여기에서 지역의 생태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 환경개선 실천계획의 수립, 환경개선사업의 수행, 수행결과 평가와 보고 등의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환경정책과 주요 행정계획과의 조정·연계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 행정·기업·시민간의 3자협의체라는 거버넌스 체계로 주요 지역정책과 계획의 자문과 평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환경정책 정보체계의 강화

환경친화적 지역관리를 위하여 지역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환경매체별 정보와 지리정보체계(GIS)를 연계하여 공간화된 환경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지역환경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시·군지역의 공간환경정보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에 활용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지역개발의 유도한다.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환경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환경정보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산하의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타 서비스시스템과 환경정보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V. 결론

1. 환경여건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충청남도는 계룡산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해양환경, 가로림만·천수만, 철새도래지, 금강, 간월호, 부남호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부·호남선과 고속철도, 경부·호남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등 전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간척사업과 금강 하구언 건설, 아산만 일대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축산업 증가 등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천안·아산·당진 등 북부지역 중심의 비계획적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 대규모 산업시설과 화력발전소 등에 의한 환경오염의 악화될 우려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공주·연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포함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의 거점지역으로서 환경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회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산지, 평야, 해양 등의 양호한 자연자원과 역사문화환경 등 환경적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2. 21세기 환경비전에 근거한 10대 전략의 효율적 추진

21세기 충남의 환경비전을 “환경, 경제, 자원이 조화되는 주민참여형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설정하고,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으로는 생태-경제 공간체계의 구축과 보전,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로 지역경쟁력 강화, 환경복지사회로의 발전모델의 정립, 도민과 함께 하는 개발과 환경보전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환경비전 및 기본방향을 토대로 10대 전략에 대한 합리적, 효율적 추진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10대 추진전략은 생태녹지축의 조성, 서해연안의 대기오염 관리방안 수립, 신도시의 환경관리 강화, 생태공단조성을 통한 산업환경관리 개선, 서해연안 및 금강하구역의 통합관리계획의 수립 추진, 금

강수질관리를 위한 총량관리의 효율적 시행, 자연형, 지역소득 창출형 환경 관리대안의 모색, 지역 자율환경관리운동 및 충남지속발전위원회의 구축 등을 포함한다.

3. 환경선도지역으로서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 창출

국제적 수준의 환경친화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더불어 다양한 생태-경제공간의 발전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환경선도지역으로서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창출하고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한 충남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남아있다.

<참고문헌>

산업연구원·충남전략산업기획단, 2004, 21세기 충남산업의 발전전략과 과제
최정석, 2004,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 적용전략, KEI 발표자료
충청남도, 2001,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2020)
충청남도, 2004, 충청남도 중장기환경정책 방향
해양수산부, 2003,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서해안 연안실태조사
환경부, 200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4차년도 자료)
환경부, 2003,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2005,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환경부, 2005, 생태·자연도 작성추진 현황 보고
국립공원관리공단(<http://www.npa.or.kr>)
충청남도(www.chungnam.net)
통계청(www.nso.go.kr)
한국산업단지공단(<http://www.kicox.or.kr>)
환경부(www.me.go.kr)

도시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브랜드 추진전략

이충훈 (산업디자인팀장 연구위원)

1. 서론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지방화의 국면 속에서 각 지역들의 공간상의 상대적 역학관계는 새롭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지역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유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자구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의 유입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사회, 경제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이른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을 위한 일련의 도시개발 전략들이 구사되기 시작하였고, 각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는 이러한 전략의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각 지역들은 이를 위하여 장소 즉, 고장을 상품화하고, 소비, 홍보, 판매될 수 있는 마케팅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특정장소, 혹은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외지 방문객 유치, 지역투자 유치, 외지로 부터의 인구유입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지역을 마케팅하는 궁극적 목적이 되고 있으며, 도시브랜드가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 도시 및 장소의 퇴락한 이미지를 재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도시문화전략들이 중요한 지역정책으로 부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이라는 장소의 상품화·차별화 전략이다. 도시마케팅 전략을 통한 장소의 상품화는, 지역의 이미지를 재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생활공간을, 지역주체의 창의적인 의지와 노력에 의해 능동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1세기는 ‘문화 상품화’의 시대이다. 따라서 도시마케팅(software development)은 앞으로 지역개발의 주요한 방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삶과 연결된 문화의 상품화를 추구할 때, 진정으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할 수 있는 문화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문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도시브랜드의 역할과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도시마케팅의 개념 및 목표

2.1 도시마케팅의 개념

도시마케팅(City marketing 또는 urban marketing)은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의 일부로서 도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자본, 방문객, 이주민 유치를 위해 도시공간을 판매하고 교환하는 마케팅 활동이자, 도시경영의 하나의 원칙이자 도구이다.(박홍식, 2000, 도시마케팅의 전략과 의미, 한국행정학회) 즉, 도시마케팅 전략은 전통적인 물량 위주의 성장 개념이 아니라, 도시 공간의 환경적 가치를 새롭게 구성하고 창출하며, 도시를 찾는 고객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상업적인 마케팅 이용대신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일종의 기업가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이무용, 2002, 도시마케팅 전략에 대한 문화적 재고찰, 한국공간학회) 도시마케팅 전략은 종종 장소 마케팅 전략과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장소마케팅의 핵심요소	키워드	내 용
지속성(Sustainability)	비전	지역발전의 장기적 비전 공유
명확성(Certainty)	상황	자신, 고객, 경쟁자에 대한 인식
독특성(Uniqueness)	개성	자기 지역만의 독특한 상품 개발
통합성(Unity)	참여	자발적 주민참여와 사회통합
연계성(Networking)	화합	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한 하나의 목소리

표1) 이무용, 장소마케팅의 핵심요소와 내용

한다. 도시 마케팅은 도시정부가 주체가 되어, 경쟁적 시장에서 고객유치에 중심을 둔 도시 경쟁력 향상 전략이다. 따라서 현재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를 보존·향상시키기 보다는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외부 주민과 기업 유치에 보다 초점을 둔다. 반면에 도시마케팅은 민관파트너십 조직이 주체가 되어, 특정 장소가 지니는 문화적 고유성과 정체성을 살림으로써, 도시내부 거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강조점을 두는 도시문화 활성화 전략이다. 엄밀히 보면 도시마케팅을 도시의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과 '삶의 질'을 상대적으로 보다 중시하는 장소 마케팅 전략과는 등치될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도시 이미지의 재창출과 도시 경쟁력의 강화라는 도시마케팅 본연의 목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과 시민 개개인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포괄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대안적인 도시개발전략의 철학이자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마인드가 담긴 개념으로 재 규정되어야 한다.

2.2 도시마케팅의 목표

도시마케팅의 초기의 경쟁은 국내 도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각국 도시의 마케팅에 대한 전략적 관심은 초기에는 정치적 차원의 납세자들의 불만, 이탈에 관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국제 도시간 경쟁이 강조되고 있다.(박홍식, 2000, 도시마케팅의 전략과 의미, 한국행정학회) 기업을 자기의 도시에 유치하거나 방문객, 관광객의 발굴 및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 목표를 두었다.



표2) 이무용, 시장분석 과정

또 경영, 경제적 관점에 바탕을 둔 접근으로 도시민의 불만 해소 보다는 도시성장과 같은 형태로 도시마케팅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한가지는 상품(products)이다. 경쟁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그리고 상품을 통해 구성된다. 도시마케팅에서 그러한 상품은 무엇인가? 도시마케팅의 상품은 도시 전체인가? 도시마케팅에서 상품은 개념구성과 확인이 어렵고 확인할 수 있는 실체도 없다. 이것은 구매와 소비의 방법도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과 다른 것으로 만든다. 도시정부는 경쟁시장에서 고객을 만난다. 누구의 관심을 끌어야 할 것인가? 표적시장의 고객은 투자자나 기업일 수 있고, 방문객과 같은 개인이 될 수도 있다. 도시마케팅 표적시장은 거주자, 기업, 방문객 등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도시마케팅의 상품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공간과 장소들로서 유무형의 제품과 서비스, 가치 등의 복합적 패키지로 구성된다. 도시의 상품화를 행하는 주체란 도시정부 등 공공부문, 기업·시민단체등 민간부문, 공공과 민간이 결합한 형태 등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을 의미한다.(유재음, 2001, 도시문화산업과 도시마케팅, 국토) 한편 주택가격, 교육, 치안, 일자리, 문화시설, 교통 등 도시의 주거조건을 구성하는 '주거환경과 가치', 공장부지 가격, 교육서비스, 인프라 등 기업투자 환경, 그리고 즐거움, 여가 등 방문객 유치환경과 시민, 투자자, 방문객 등이 도시마케팅의 대상에 포함된다. 도시브랜드 비즈니스가 도시를 상품으로 할 경우는 그 도시가 가진 자원, 예를 들어 축제, 전통문화, 문화유산 등을 활용하고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임경수 외, 2001, 주민인식에 기초한 지역브랜드 개발전략에 대한 연구) 또한 도시가 그 지역에 소재 한 대학과 제휴하여 인재육성, 평생학습 및 문화계승을 위해 노력하거나 현존하는 시설이나 거리풍경을 전문문화나 산업등의 발자취가 느껴지도록 보존, 활용, 재건하여 독자적인 경관이나 브랜드 인프라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도시마케팅을 위한 브랜드 전략

3.1 테마의 필요성

테마(theme)는 철학용어로서 1635년 부르제르스다키우스의 논리학에서 처음 쓰였으며, 사상이나 의미의 직접대상을 가리킨다. 그것은 관습이나 지적동향에 의해 직접 대상을 지시하는 기호로서 오늘날 말하는 '상징'과 같은 의미를 뜻한다. (두산세계대백과 사전, 2004, encyber) 디자인에서 테마란 어떤 대상에 대한 디자인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로서 기획단계의 방향설정에서 세부적인 디테일 마감결정까지의 프로세스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진다. (윤일주, 1988, Tim McGinty, 기문당, p129) 테마가 대상에게 주어짐은 보편적이 아닌 특별한 흥미의 요소를 제공하기 용이해지며 독특한 주제의 도입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의외의 즐거움, 상상적, 비일상적인 환경조성이 가능하다는 등, 흥미성과 비일상성으로 인한 특수성이 다른 하나의 특수성이 다른 하나의 특성이 된다.(김일룡, 1999, 일본의 테마파크 주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라벌대) 이러한 특성들은 강한 이미지 동반과 함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특성을 가지게 되며, 주제를 통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달이 가능하므로 테마가 상징하는 지역 및 국가의 문화적 특성 표출에도 매우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역을 상징하는 테마의 존재는 주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확대의 가속화, 홍보, 교육적 효과의 증대에도 기여하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지역 상징적 테마의 도입은 다양한 지역 구성요소간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며, 각 영역에 대한 장, 단기적 미래전략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특성화를 위한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3.2 테마의 표현전략

지역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새롭고 참신한 지역 상징적 테마의 발굴이 필수적임은 물론, 테마의 시각적 표현 방법에도 있어서도 독창적이며 차별화된 이미지창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표현방법이란 지역민들이 공감하는 지역테마의 정책적 확보와 독창적 표현을 통한 형상화일 것이다. (박해경, 2003 김진재, 장소 마케팅을 위한 지역 상징적 테마와 이미지 표현기법 연구, 디자인학 연구) 도시 또는 지역 아이덴티티는 "어 곳은 무엇으로 유명한 고장이다" 라는 인식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인식이 필요하며, "차별화된 고장에 살고 있다"라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욕구를 살려나가고 재창조할 때, 그곳만의 아이덴티티 즉, 지역정체성은 상승될 수 있다. '유명하다'라는 상징이 우선적으로 인식되어 좋은 이미지를 받게 된다. 가치가 높은 것, 즉 심볼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서로 연계시켜 다른 곳에 사는 사람과 차별화를 시키게 되며, 이런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느끼게 하는 매체가 바로 이미지이다. (이충훈, 2002, CI에 의한 도시이미지 차별화전략, 한국디자인학회) 지역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면 외도적이고 전략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으며, 획일화된 지역공간에 표정을 부여하려면 지역 이미지메이킹에 대한 외도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3.3 도시마케팅의 유형

지역의 장기 비전과 정체성 수립을 통한 지역 마케팅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역의 이미지를 제창출하는 것으로, 축제와 이벤트는 도시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자 수단으로 사용된다.

해외사례에서 일본 삿포로는 태평양 뮤직페스티벌, 삿포로 국제디자인전, 눈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 이미 제창출과 지역정체성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독일 베를린은 매년여름 전세계150만명의 젊은이가 참가하는 '야의 테크노 음악축제' 개최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은 인력거를 타고 전통가옥을 돌며 중국서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후퉁 투어'를 개발하여 2001년 30만명 유치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디킨슨 더 스트랜드'축제는 빅토리아시대의 역사적인 상업지역으로 이들 건축물들을 보존하여 관광상품화에 성공한 사례이다.

국내사례에서 함평군은 인구4만2천여명의 시골 소읍으로 "나비"를 테마로한 이벤트 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 유치로 직·간접적인 수익이 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나비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차별화되고 일관성 있는 테마선정을 들 수 있으며, 전국에 수 많은 축제가 있지만 '나비'라는 테마는 함평에서만 찾을 수 있다.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나비의 특성이 나비축제라는 이벤트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나비축제의 성공으로 나비전시관, 나비생태관 같은 관람시설을 만들고 나비브랜드와 233종의 디자인상품을 개발하였으며, 한가지 소재로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usel)'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지방이경쟁력이다, '04. 7. www.jangilbo.com) 그외, 부산국제영화제, 광주비엔날레, 춘천인형극제 등 수많은 지역축제들도 해를 거듭할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장소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이미지를 전환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사례로 미분터모어시는 햇황구자리에 '이너하버(In-ner Harbor)'라는 관광지가 조성하고 시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그 중심부에 '하버플레이스(Harbor Place)'건물에 수심까지의 바다계 요리 전문음식점을 개설하였다. 시에서는 바다계를 상품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바다

제를 캐릭터로 한 기념품 판매점을 기획하고 바다게 모양의 인형, 장난감, 엽서, 열쇠고리, 캐릭터 등을 판매한다. 해수욕장으로만 알려져 있던 보령시는 100만명 규모의 갯벌에 산재해 있는 “진흙”을 채취, 가공하여 머드를 상품화하였다. 보령시는 해마다 머드축제를 개최하여 '98년 31만명에서 '04년 140만명이 축제에 참가하고 있으며, 머드관련 축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300억 정도에 이른다. 머드탕, 머드마사지실, 해수탕, 머드체험랜드운영 등 머드관련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과 관광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의 화산암반수는 지하암반에 매장량이 풍부하고 품질이 뛰어난 화산암반수를 퍼올려 히트상품으로 기록되었으며, 읍시 '98년 제품을 시장에 선보인지 6개월만에 국내 먹는 샘물 제트병 분야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295억원으로 순수익 98억원을 기록했다.

“물”자원을 상품화한 성공사례와 생산공정의 견학을 위해 매년 6만명 정도 방문하고 있다. 또한, 생수공장과 주변지역을 “물”을 주제로 한 생태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 샘다수”생수브랜드의 확장효과로 청정 제주이미지와 겹쳐져 제주도의 대표상품 브랜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지역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제주 샘다수는 행정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최대한 활용,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역의 장기비전과 경제성 수립을 통한 도시마케팅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재창출하고, 활용방법의 하나로 도시 이미지를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해외의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문화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범 국가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세계화, 지방화, 개방화의 동시적 진행속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성과 비교우위를 가진 지역문화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와 개방화의 압력에 대응하는 한편, 역으로 세계 수출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선진국들은 하드웨어적인 상품개발보다는 기존 자원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일상생활에 유용한 상품을 개발 함으로서 문화산업의 특수한 영역이 아니라 생활과 관련된 특화산업영역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하게 되며, 산업의 연관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박혜자,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논리와 전략, 2000,한국도시행정학회, 제13권)

국 가	상품명	주요내용
독 일	뉘른베르크 문화의 거리	· 중세의 고건축물 거리보존지역에 미술과 박물관 추가1마일의 문화거리 조성
	맥주박물관	· 전통맥주를 상품화하여 박물관과축제 개최 · 맥주관 소재 상품개발
스웨덴	스모란드 유리조형단지	· 크리스탈류의 독특한 장식품과 생활용품 단지를 주변국가와 연계, 문화관광상품 단지화
일 본	오이타현의 吉西六製品	· 민간실화의 창작오페라화 · 6개 품목으로된 지역특산물 개발 · 吉西六랜드 건설
	카고시마의 카고시마 브랜드	· 전통차(茶) 생산지의차 관련 문화상품 개발 · 9개 농산품과 공예품의 카고시마 공동브랜드화 · 브랜드지명점 설치
	후쿠오카시의 博多人形	· 전통적 제작방식 고수 및 전통장인 육성 · 문화제 보호, 홍보차원의 육성, 수출
스페인	꽃 도자기	· 전통공예품을 야드로라는 브랜드화하여 고가 상품으로 개발
싱가폴	황금계란	· 거위, 닭, 메추리를 한 쌍으로 순도금한 상품 · 다국적 문화국가의 성격을 표현한문화관광상품
말레이시아	PEWTER	· 주석을 현대디자인과 R&D를 결합 · 장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다양화
캐나다	아이스와인	· 유럽전통문화와 캐나다 지리적 기후이전을 결합한 다국적 문화 국가의 대표상품으로 개발

표 2) 해외도시마케팅을 위한 문화상품개발 사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유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의 유입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사회, 경제적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각 지역들은 이를 위하여 장소 즉, 고장을 상품화하고, 소비, 홍보, 판매될 수 있는 마케팅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하는 다양한 경제, 문화 활동이 지역의 정체성확립과 지역발전의 출발점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장소, 혹은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외지 방문객 유치, 지역투자 유치, 외지로 부터의 인구유입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지역을 마케팅하는 궁극적 목적이 되고, 도시브랜드가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아름다운 환경은 인간에게 필요한 근본 조건이며, 인간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는 취지 에서 도시브랜드를 제정했다. 1970년대초 범죄와 경제불황으로 허덕이던 뉴욕시의 이미지를 뉴욕지역의 사래의 풍성한 이미지를 모티브로 활용하였다. 뉴욕이란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로 연결되므로 수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뉴욕’의 이미지들이 각종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낡은 것도 보호하며, 갖고 닦아 결국에는 뉴욕이란 도시의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는 시민 모두의 참여에 의해 형성되었다.

3.4 도시마케팅 전략

지역특화를 위한 도시마케팅 전략이 도시문화의 활성화와 그를 통한 도시전반의 삶의 질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역활성과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지역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다.

문화의 산업화라는 직접적이고 좁은 의미의 문화산업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의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식기반산업의 고도화가 수반할 거시적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차별화의 전략차원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폭넓은 접근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박해자,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논리와 전략, 2000, 한국도시행정학보, 제13권) 지역 특성화를 위한 도시마케팅 전략은 주민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합의를 통해 그 구체적인 과정과 추진방안을 도출해내고 실천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공간을 디자인해 나가는 자발적 지역개발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민·관 파트너십 조직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마케팅은 '도시(지역)'를 마케팅하는 것이므로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그 중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주체들(지역주민, 지역단체, 지역전문가)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연구기관의 기획력, 창의력, 경영능력이 결합된 전문마케팅 조직의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관련부서들을 서로 긴밀히 연계시키면서 마케팅 전략 전반을 기획, 조정, 추진하는 가칭 '지역특화를 위한 마케팅 기획단'과 같은 전문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이무용, 2002, 도시마케팅 전략에 대한 문화적 재고찰, 한국공간학회)

민간차원에서는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지역문화단체와 문화시설 및 공간, 문화인력 등이 네트워킹 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단일광구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성숙되어야만 민·관 파트너십이 가능하다.

3.5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브랜드 역할

지식 및 여가시대가 전개 되면서 지역 이미지를 담은 도시브랜드 자체가 인제와 관광자를 유인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잘 구축된 도시 브랜드는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외부인에게는 도시에 대한 신뢰성, 방문하고 싶어하는 열망, 해당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구매동기를 일으키게 한다. 도시브랜드 자체가 기업브랜드처럼 어떤 무형의 자산인 것이다. 지역브랜드는 도시에 대한 안전, 공생, 문화, 복지, 개방성 등의 개념과 연결되어 수익성 확보, 기업과 인제의 유치 등의 목적으로 귀결된다. 도시브랜드는 그 지역의 특유의 개성 및 특징과 함께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축제 등의 하위브랜드에 의하여 구성되는데, 지역의 문화축제 행사는 그 '도시'라고 하는 상위 브랜드에, 그 '도시'는 문화축제 행사의 하위 브랜드에 의하여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쟁력이 있는 지역은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활기차게 지역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다채로운 사람들이 방문하고 다양한 교류가 활성화되는 지역이다. 이를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산업계, 그리고 지역주민이 협동하여 지역의 세일즈 포인트(sales point)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도시의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시브랜드의 개발은 도시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의 활성화에도 밀접한 연계가 있고, 나아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여 도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형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업개념은 경쟁이고, 이익지향의 효율성, 생산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브랜드를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즈니스 사업개념은 공생이나 복지, 교육 등 생활에 밀접한 것들이다. 향후의 산업경제는 글로벌 브랜드 비즈니스와 지역브랜드 비즈니스로 양극화되어 갈 것이다.

3.6 도시브랜드 추진전략

도시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도시브랜드 추진방안의 핵심적 요소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 지역의 실태분석과 이미지 점검, 지역의 미래 발전방향 및 비전 결립, 도시 아이덴티티 및 도시브랜드 확정, 도시브랜드 경영팀 구성, 도시브랜드 추진전략 마련 등이 있다. 도시브랜드 개발 이란 단순히 도시 홍보차원을 넘어서 있다. 한 기업에 있어서 기업 성장의 전략수행과 브랜드 포지셔닝이 결코 분리될 수 없듯이, 도시브랜드는 도시발전 비전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열원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도시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브랜드 슬로건에 담겨야할 의미는 도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며, 도시가 지향하는 어떤 이상과 희망이 담겨있어야 한다. 또한 용어 자체는 철저히 차별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역으로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고영삼, 2003, 브랜드컨셉으로 보는 울산의 발전전략, 울산발전연구원) 도시브랜드의 개발은 일차적으로 그 지역의 부존자원을 확인하고 그것을 상품화 가능성과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도시이미지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타진하여 가능성이 있을 때, 도시정부와 시민의 주어진 역할에 따라 브랜드를 추진하게 된다.(임경수 외, 2003,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전략, 한국도시행정학보) 이렇게 추진된 도시브랜드 이미지는 어떤 형태로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표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제고하게 되므로 지역경쟁력을 전체적으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브랜드 단계별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기획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이때 자치단체는 좀 더 긴 안목에서 도시브랜드 개발과 육성을 위한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천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시민, 관내 유관기관(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시민의 전 수렴 및 참여추진과 지역내 기업의 도시브랜드 상품개발 지원,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도시브랜드

자산의 지속적 관리 등과 같이 분야별, 시간별, 상세한 계획에 의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평가단계에서는 계획목표와 실제 성취된 것과의 비교를 통해 다음 행사에 대비한 장·단점 분석, 향후전망까지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상이 브랜드 개발과 관련된 단계별 전략이라고 한다면 부문별, 또는 업무담당 주체별 브랜드 개발에 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업무가 지방정부, 주민, 유관기관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으나 시민이 최종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주도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내 자원 조직화, 예산의 확보, 프로그램의 기획·추진, 도시브랜드의 관리·홍보, 장소마케팅 전략 수립, 도시브랜드 관련 산·학·연·관 연계망 구축 등이 지방정부 또는 추진기관이 해야 할 부분이다.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겟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향유하는 브랜드로써의 포지셔닝과 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적 마케팅 활동, 그리고 구체적인 체험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며 지역의 상품이나 서비스, 축제 등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지역이미지 구축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표4) 도시브랜드 형성요소

4.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방향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도시를 브랜드화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제창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전략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생활공간을, 지역주체의 창의적인 의지와 노력에 의해 능동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나간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21세기는 ‘문화 상품화’의 시대이다 따라서 도시마케팅은 앞으로 도시개발의 주요한 방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삶과 연결된 문화와 상품화를 추구할 때, 진정으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할 수 있는 문화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 마케팅에 있어서 도시는 하나의 상품이다. 정부는 경쟁시장에 도시라는 상품을 갖고 참여한다. 도시정부는 질 좋은 상품을 구성해 시장에 내놓고 고객들의 선택을 촉진해야 하는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Ashworth & Voogd, 1995: 28). 도시마케팅에 있어 상품개념은 기존 행정에 대해 경쟁적 비교우위의 시각과 더불어 고객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관심과 의무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도시마케팅 전략은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각 도시의 사활을 건 전략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시의 현실에 기반한 전략의 수립이다. 서구의 사례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그 도시의 문화의 정통성을 보존·유지·재현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도시브랜드전략이 필요하다. 도시마케팅이 성공적인 지역발전전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시마케팅의 실질적인 주체가 바로 ‘지역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창조적이고 주체성이 보장되는 문화민주주의를 통해, 그 지역의 살아있는 문화, 다양하고 생생한 문화를 창조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을 때, 도시마케팅의 힘은 발휘될 수 있다.

5. 결론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하는 다양한 경제, 문화 활동이 지역의정체성확립과 지역발전의 출발점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발견과 디자인을 통한 적극적인 개발의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레이놀즈(H. Reynolds)의 ‘레저혁명’에서 “지역이 방문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이 일하기 좋은 곳, 살기좋은 곳으로 개발되었음을 의미한다”. 라고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성장이 다른 모든 산업이나 사업의 성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대다수의 지역들이 문화관련 축제나 프로그램을 개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연간 수백권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마다 같은 테마의중복과 보편적이며, 평이한 내용 구성으로 인해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각지역에서는 자신들만의 차별화될 수 있는 독특한 문화컨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회적인 무형적 부문에 편향되기보다는 가시적으로 표현되며, 기간

적으로 제약받지않는 유형적 부문으로서 테마문화시설, 가로환경디자인 등에 대한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새롭고 참신한 지역 상징적 테마의 발굴이 필수적임은 물론, 테마의 시각적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독창적이며 차별화된 이미지창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 또는 지역 아이덴티티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인식, “차별화된 고장에 살고 있다” 라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욕구를 살려나가고 제창조할 때, 그곳만의 아이덴티티 즉, 지역정체성은 상승되어 좋은 이미지를 낳게 된다. 가치가 높은 것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서로 연계시켜 다른 곳에 사는 사람과 차별화를 시키게 되며, 이런 지역의아이덴티티를 느끼게 하는 매체가 이미지이다. 지역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면 외도적이고 전략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으며, 획일화된 지역공간에 표정을 부여하려면 지역 이미지베이킹에 대한 외도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의 역사, 문화와 특산물 소재를 적극 활용한 문화상품디자인을 개발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해외수출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며 문화공동체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 박혜경, 김정재, 2003, 장소마케팅을 위한 지역 상징적 테마와 이미지 표현기법 연구, 디자인학 연구
- 이무용, 2002, 도시마케팅 전략에 대한 문화적 재고찰, 한국공간학회
- 이충훈, 2002, CI(City Identity)에 의한 도시이미지 차별화전략, 한국디자인학회
- 임경수, 한종길, 2003,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 전략, 한국도시행정학보 제16집
- 임경수, 한종길, 2001, 주민인식에 기초한 지역브랜드 개발전략에 대한 연구
- 고영삼, 2003, 브랜드컨셉으로 보는 울산의 발전전략, 울산발전연구원
- 지방이 경쟁력이다, '04. 7 www.jangilbo.com
- 두산 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 윤일주, 1988, Tim McGinty, 기문당

- 김일룡, 1999, 일본의 테마파크 주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라벌대
- 박홍식, 2000, 도시마케팅의 전략과 의미, 한국행정학회
- 유재훈, 2001, 도시문화산업과 도시마케팅, 국토
- 박혜자, 2000,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논리와 전략
한국도시행정학보, 제13권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 전략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연구부 : 박철희

- 목 차 -

I. 문화와 지역 활성화	2
II. 기존 문화공간의 한계와 새로운 문화공간	4
III. 문화공간 개발유형과 사례	9
IV.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 전략	22
V. 향후추진계획	26
□ 참고문헌	27

I. 문화와 지역 활성화

21세기 ‘문화의 세기’의 도래와 문화관련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영화, 방송, 도서관·박물관 등을 포괄하는 문화산업의 증가율이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증가율을 능가하는 현상이 하나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문화공간은 주민들의 문화생활 및 삶을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문화공간이 부재한 지역은 이제 인구유출, 지역 성장잠재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 또는 시설공급적 접근에 의한 공급자 위주의 문화공간 조성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문화와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함께 지역개발에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활용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한 문화유산자원의 정비가 아닌 지역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역의 활성화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역사유산이라는 점에 주목
- 문화연상 이미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위 역사유산, 2위 대중문화, 3, 4위는 현대예술과 전통예술 등으로 파악¹⁾
-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문화유산자원은 문화산업의 소재이자 콘텐츠 역할 수행

이에 본 연구는 지역 활성화와 삶의 질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공간에 있어서 기존에 추진되었던 문화공간 조성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바람직한 문화공간 조성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매일경제 2001.05.13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II. 기존 문화공간의 한계와 새로운 문화공간

1. 기존 문화공간 조성의 한계

문화는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공적²⁾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즉 수단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는 자기 정체성과 동질성 확보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그 문화적 특성과 이미지가 경쟁력의 요체가 되고 있다.

기존 정부주도하에 조성되었던 문화공간을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접근³⁾되고 있다.

- 첫째, 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전통적인 접근
- 둘째, 문화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시설의 공급적 접근
- 셋째, 문화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여 미디어 및 콘텐츠 문화산업 중심의 산업정책적 접근

그러나, 이러한 정책접근은 전략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문화의 도구화’와 ‘정부주도형 문화정책’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문화를 수단화하여 본래 문화의 본질이나 가치를 상실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문화가 지역주민 또는 대상층의 정서와 욕구로부터 표출되는 것이라고 볼 때 현재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문화공간의 조성은 지역 문화진흥 및 활성화에는 미흡하다.

2) 문화는 공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증가치(bequest value), 위광가치(prestige value), 교육가치(education value) 등이다.

3) 국토연구원, 도시문화산업의 육성방안-도시마케팅적 접근을 중심으로, 2000.12.30, pp24-32

기존 문화공간 조성의 비교와 문제점

구 분	전통적인 접근	시설공급적 접근	산업적 접근
정책 주대상	전통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복지, 생활문화	문화산업
문화의 활용	정치적 수단	물적 수단	산업·경제적 수단
전략목표	사회통합 주체성 및 정체성 확립	도시의 물적 재생 도시환경의 질 제고	경제, 산업 재구조화에 대응
연계정책	문화정책	문화정책과 도시정책	문화정책과 산업정책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문화재원형 보수, 고도문화권의 개발, 고궁복원 - 세종문화회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등 대규모 전시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면, 동 단위 문화의 집 설치 - 생활권별, 시·군·구 단위별 도서관, 문예회관, 공연장, 문화원, 전시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거리 - 문화의 관광산업화, 문화관광루트개발, 문화예술이벤트 및 축제 활성화와 관광자원화 - 문화와 지역산업의 연계
문화공간 조성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홍보성 문화사업 추진으로 지역 문화자원 및 도시공간과의 연계부족 - 일부 특권층 전유물로서 고급문화예술위주 육성 - 문화관련 사업을 위한 주변문화공간조성 투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 정부 중심의 문화시설 공급 - 문화시설 위주의 공급으로 주변 문화자원 및 도시자원과의 연계개발 미흡 - 문화적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등 질에 대한 고려 결여 - 제한적인 문화투자재원으로 실적위주의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주도 문화산업정책으로 문화산업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가속 - 지방정부의 지역축제 등 문화의 지나친 상업주의 야기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수준 향상 미흡

주: 유재윤 외2인, 도시문화산업의 육성방안, pp24~33의 내용을 재정리

2. 지역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역의 고품격 문화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의 조성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이미지가 결합된 강력한 거점 문화공간이 핵심이며,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첫째, 공급자 위주의 문화공간에서 수요자 위주의 문화공간

공급자 위주의 문화시설은 조성 후 시설의 활용 미흡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관리부담을 증가시켜 재정악화와 성장 잠재력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수요자의 구심성 확보의 미흡으로 지역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적 매력과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위주의 문화공간 조성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확대로 주민참여형⁴⁾ 문화공간 조성은 수요자 위주의 문화공간 조성에 주요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단순 문화공간에서 기능복합형 문화공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의 자원화와 함께 접근이 편리한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공원 등이 강력하게 결합된 복합화된 거점 문화공간을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의 거점 문화공간이라 함은 지역주민 또는 방문객들이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는 도심부의 일단의 공간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활성화의 동인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자원과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공간이 통합, 연결 또는 네트워크화된 복합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⁵⁾

4) 개발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주민들에게 자신감과 책임감을 주고,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사회심리적 안정요인 및 당위성을 제공하며, 한편 참여를 통한 학습기회의 제공과 자원의 공동부담 및 향토관리,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효과가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개발계획과정상의 주민참여 확대방향, 1997.6, p16)

문화자원 개발잠재력과 대상

구 분	잠 재 력	대 상
문화자산	활용가치가 있는 문화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의 문화자원 • 무형의 문화자원 • 문화공간과 주변영향권 • 문화산업과 주변단지
문화시설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등 • 거리, 공원 • 공공의 교통인프라 • 쾌적한 자연 및 경관환경
거점 문화공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능이 복합화된 문화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과 결합된 문화공간 • 쇼핑몰과 결합된 문화공간 • 공원, 쇼핑몰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문화 클러스터	동질의 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고, 연구, 소비, 생산, 공급이 유기적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화된 지역문화공간 • VP, SO, SS⁵⁾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셋째, 문화와 문화공간을 마케팅이나 관련산업에 접목

문화공간에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관련산업부문에 파급효과 극대화를 하는 수법으로 문화공간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그 활용하는 방식은 다음의 5가지 유형⁶⁾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5S」유형별로 국내외 대표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관측 : 문화를 광고, 관측수단으로 활용
- 문화지원 : 국가, 자치단체, 기업 홍보 또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문화활동·단체를 지원
- 문화연출 : 문화공간에 서비스, 이벤트를 도입하여 차별화

5) 삼성경제연구소,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2004.2.16

6) 삼성경제연구소, 「문화마케팅」의 부상과 성공전략, 2002.10.30

- 문화도시 : 독특한 문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포지셔닝
- 문화후광 : 국가, 자치단체가 문화와 문화공간의 매력을 후광효과로 향유

문화마케팅 유형별 국내외 적용사례

문화마케팅 유형(5S)	유형별 개념	국내외 사례
문화판촉 (Sales)		- 로마(고건축) - 수원(화성)
문화지원 (Sponsorship)		- 구마모토(아트폴리스) - 전주(한옥마을)
문화연출 (Synthesis)		- LA(디즈니랜드) - 용인(한국민속촌)
문화도시 (Style)		- 교토·나라 - 경주
문화후광 (Spirit)		- 파리(예술의 도시)

Ⅲ. 문화공간의 개발유형과 사례

1. 개발유형

문화공간의 개발유형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의 유무와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에 따라 3가지 개발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문화적인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지역

기존에 역사성과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 고도 또는 역사도시들이 해당된다. 역사 유적지의 보존을 전제로 하여 유적지와 주변지역을 거점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유형으로서 서울, 경주, 부여, 공주, 김해, 수원, 전주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

잠재적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발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유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서 충남에서는 내포문화권의 개발과 기벌포 문화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 개발은 무엇보다 기존의 문헌자료 조사, 지표조사, 발굴 등을 통하여 지역의 유산을 발굴·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핵심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문화이미지의 창출이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문화환경과는 상반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산업화과정, 공해오염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곳이나 관련 산업의 침체로 도시활력이 저하된 지역으로서 국내외사례 도시로서는 부천, 일본 구마모토, 스페인 빌바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문화환경과 상반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문화컨텐츠의 적극적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

2. 개발사례

1) 문화적인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지역 - 가야의 고도 김해

김해시는 가야의 발상지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중심지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적을 활용한 문화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은 가야사 관련유적의 발굴·정비를 통하여 가야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랜드플랜으로서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으로 중심사적지구 발굴정비에 총1,297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시가지 정비 및 도로정비 사업에 373억원을 연계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극대화하고 있다.

-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 사업

- 1단계(1999~2003) 중심사적지구 발굴정비
- 2단계(2004~2008) 권역별 역사문화재현지구 조성(생철, 장유, 진례)
- 3단계(2009~2016) 역사문화환경정비 및 관련부대시설 조성 등 단계적으로 추진



특히, 시가지 주요도로 조성 사업은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김해시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도로변 도심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구도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별로 거점문화시설, 유적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하면서 문화의 거리를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꾀하고 있으며, 문화의 거리는 해반천과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신시가지의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자연과 문화공간을 접하게 함으로서 시설 - 시설을 연결하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 역사공간 - 문화공간, 역사공간 - 역사공간, 정주공간 - 자연공간 - 역사문화공간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구 도심과 도심을 연계하는 거점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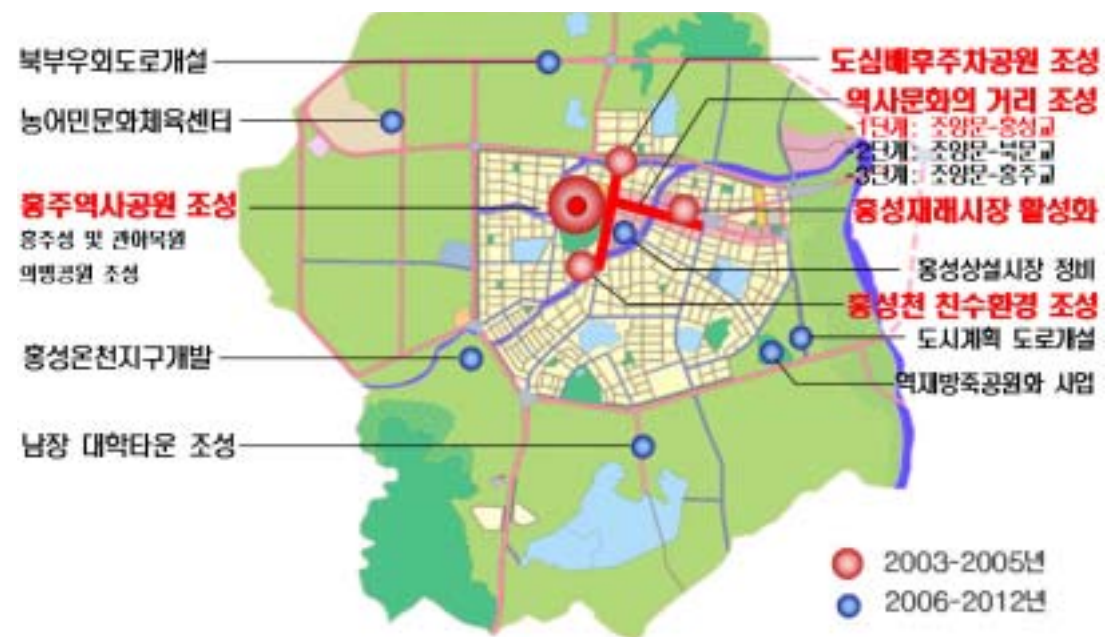


2) 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 - 내포의 행정중심지, 홍주

홍성은 과거 충청 우도의 중심도시로서 신라 말부터 20세기까지 주변지역의 거점역할을 수행한 고을이었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서의 배제 및 해로에서 육로로 교통수단의 변화로 인하여 군세가 약해졌으며 특히, 기존 홍성 중심시가지 주변 및 외곽으로의 개발 확산은 중심상권(재래·상설시장, 중심상가 등)의 쇠퇴를 불러왔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중심지에 위치한 역사문화자산(홍주성, 관아 등)들을 활용하여 도심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재가 주민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3년 홍성을 종합육성계획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수립과 행정자치부 지원 소도읍으로 선정됨으로서 사업추진기반 확보하였으며, 총 10개년 사업 중에서 초기 3개년에 총205억원을 역사문화공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함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홍주성을 복원하고 주변 중심상권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변신을 추진하고 있다.

7) 홍성군, 홍성읍 종합육성계획, 2003.4, p139~p140

초기 3개년 간 육성사업계획(2003-2005)

(단위: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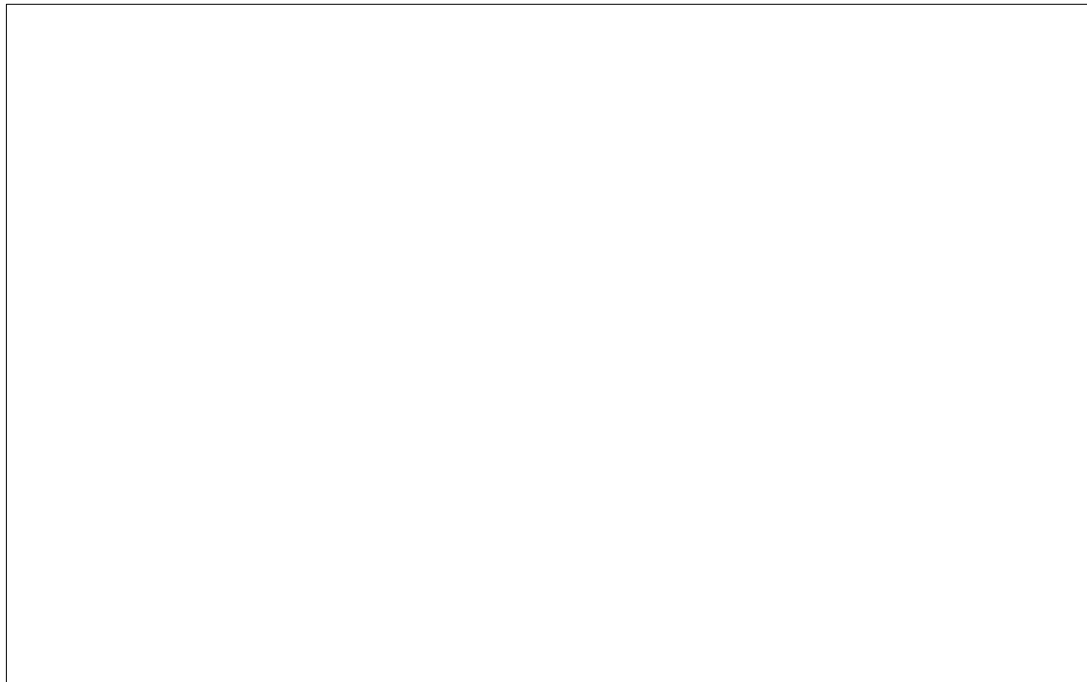
원)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홍주역사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주성 복원사업계획 • 홍주역사공원, 주차장 조성 • 성내가로조성, 방문자 센터 	68억원
역사문화의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시설물 정비, 식재 • 전선 지중화 사업 • 도로 및 인도 확충 및 포장 	30억원
도심배후 주차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및 근린공원조성 • 친수공간 정비 • 교량설치 등 	44억원
홍성천 친수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수변공간 조성 • 가로 정비 	25억원
홍성 재래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육개선사업 - 간판, 아케이드 등 • 어시장 바닥 정비 • 진입 및 소방 도로개설 • 보부상 및 특산물 판매전시장 설치 	38억원

자료: 홍성군, 홍성을 종합육성계획, 2003.4

특히, 역사문화의 거리와 친수환경의 조성은 외부관광객을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을 홍주역사공원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문화공간의 연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홍성 중심시가지의 역사문화공간과 상업공간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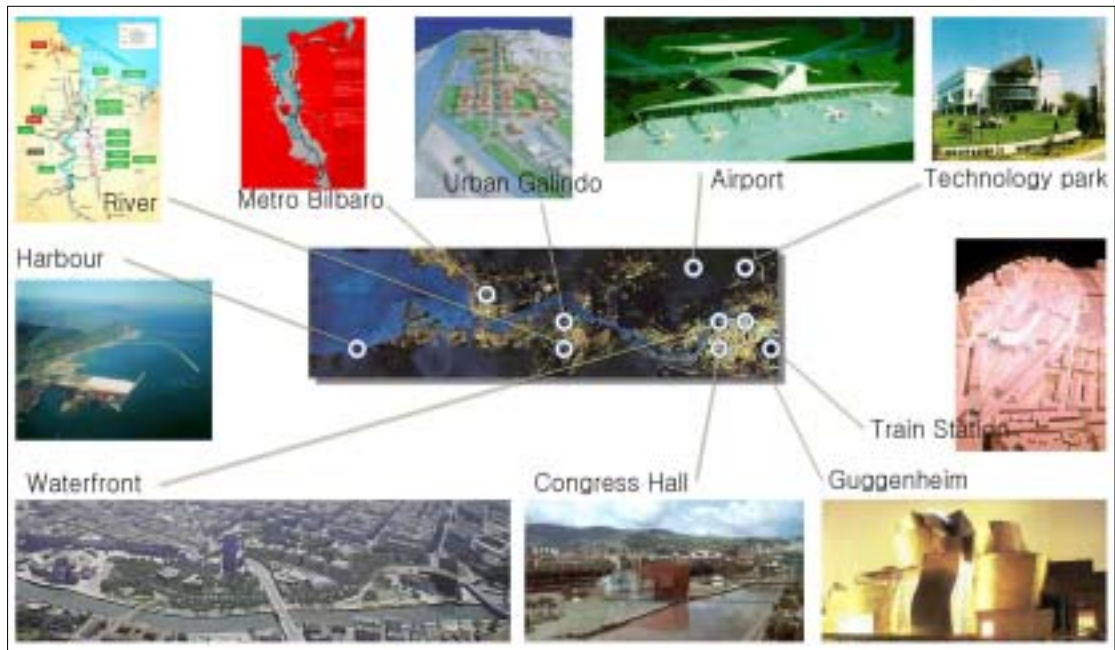
3) 문화환경과는 상반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 스페인의 빌바오

스페인의 빌바오는 15세기 이래 풍부한 철광석을 배경으로 제철, 철강, 조선업이 발달한 전형적인 공업도시였으나, 80년대 철강, 제철산업의 사양으로 급격한 쇠퇴와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의 테러 고통으로 도시는 더욱 침체되었다.

이에, 1991년 바스크 정부는 도시를 회생시키기 위한 빌바오 2010. 전략(Bilbao 2010. The Strategy)을 수립하고 10개의 핵심프로젝트 추진하여 문화도시로서 변신함으로써 일약 유럽문화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 목표 : “빌바오를 문화적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이며, 공동의 이익과 환경이 보존되는 도시”
- 10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
- 특히, 옛 조선산업이 빠져나간 공간과 콘테이너 하치장으로 쓰이던 네르비온 강가의 땅에 현대미술관, 공연장, 비즈니스센터 등 문화시설을 유치하여 문화도시로의 재생을 추진

빌바오 재생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특히, 핵심프로젝트 중 구겐하임 미술관의 유치는 도시재생의 선도적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도시적 측면에서의 입지선정과 세계적인 건축가의 새롭고 파격적인 미술관 디자인 선정을 통한 문화명소화에 성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였다.

-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재단에서는 재단 소장품의 전시, 운영, 관리, 전시회 개최 등을 담당
- 바스크 정부에서는 옛 조선소 부지 7,280평을 제공, 건축비로 1억5천만달러(약1,800억원)를 투자하여 1997년에 완공
- 건설시작부터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으며, 97년에는 최우수디자인상을 수상하며 20세기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음
- 미술관측 자료에 따르면 개관 후 1년간 136만명이 방문하였으며, 92년 추산 관람객은 82만5000명,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광객 들이 먹고, 자고, 물건을 사서 쓰는 비용은 약 310억 페스타(한화 약2,300억원)에 이름
- 구겐하임과 관련된 소비들이 바스크 지역경제에 1년간 1억6천만달러(1,600억원)의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



IV.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 전략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군 차원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의 거점 문화공간은 지역의 정체성 확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며, 단계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에 대한 세밀한 현황조사와 진단을 통하여 개발의 유형을 설정하고 문화공간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전략의 핵심인 ‘문화자원 만들기’, ‘문화공간의 조성’, ‘공간의 복합화’, ‘공간의 브랜드화’를 통한 거점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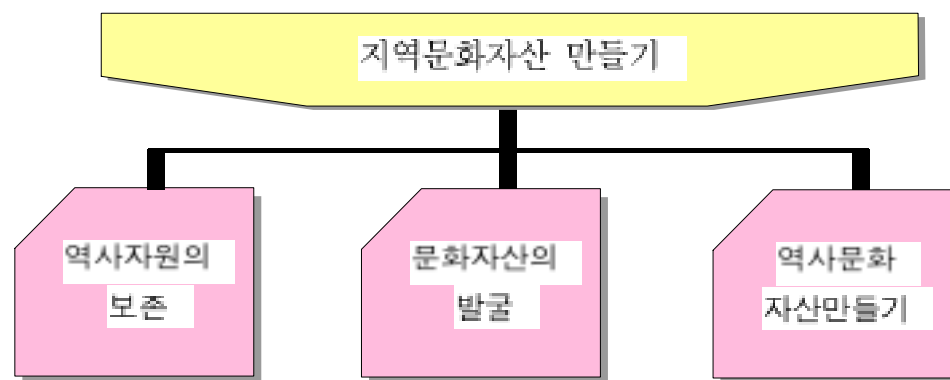
1) 도시·건축적 측면에서 지역 문화자산 만들기

지역 문화자산 만들기는 역사자원의 보존, 문화자산의 발굴, 역사문화자산 만들기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역사문화자산은 선조들의 흔적이며 후세들을 위한 자산임을 인식하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과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활성화를 위한 잠재력 있는 유·무형 역사·문화자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무리 우수한 문화자원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관심이 없는 자원은 소멸하며, 가치는 뛰어나지 않아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에 의해 유·무형의 자원은 재창조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한 역사자산의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지역별 문화유적분포지도는 평면적, 서술적인 접근으로 역사자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순한 건축적, 위치적인 측면이 아닌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시대별로 분류표를 작성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다.



2) 도시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담는 문화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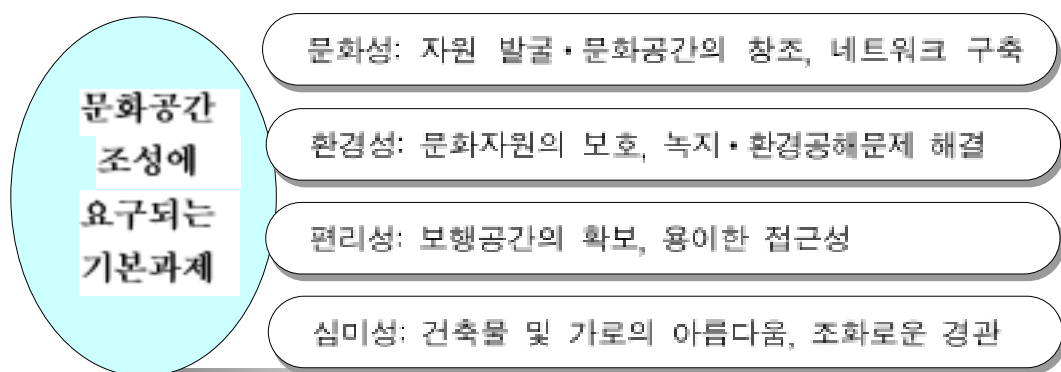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친밀감 있는 문화공간의 조성하여 문화자원의 보전과 문화공간으로의 합목적성 확보하여야 한다.

주민이 거주하는 곳,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입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환경 조성은 그 혜택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으며, 도심 내의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입지한 문화유적의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존을 원칙으로 한 유·무형 문화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계획의 수립되어야 한다. 잠재력이 높은 유·무형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의 거리 및 문화공원 조성하고, 교류 및 지역축제의 장으로서 역사광장의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및 공간계획의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공간에 보행환경의 조성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확보를 통하여 문화공간의 지역사회화 추진하며,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공간 내에는 보행우선지구 등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에 맞는 새로운 계획수법 및 참신하며 심미적인 디자인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역사공간의 성격상 과거 디자인에 얽매이다 보면 자칫 공간의 흥미를 떨어뜨림, 전통을 계승하며 이미지가 반영된 참신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도입을 요구된다.



3) 도심기능과 문화공간의 복합화 추구

역사·문화공간과 기존 도심에 입지한 교육, 상업, 산업, 관광, 체육기능의 복합화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복합화는 인위적인 기능 복합화 보다는 기존의 환경을 정비하는 수법을 통하는 방법이 도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전통마을, 한옥마을은 인위적으로 정형화된 민속촌이나 다른 한옥촌에서 느낄 수 없는 생동감·현장감이 있어 활용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분 도심 내에 입지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도

심의 상업, 교육, 관광기능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개발 방안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시설의 입지는 많은 투자비용과 문화자원에 대한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공원 등의 자연녹지를 확보하여 연계를 할 경우, 생태적 녹지 어메니티 공간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공간과 연계시 시너지 효과가 크다.

4) 지역문화공간의 브랜드화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화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문화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강력한 지역 문화공간 브랜드는 관광수요의 창출, 인구유입 등 도심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의 애착심 증대, 이미지향상, 상품의 부가가치 증대 등 다양한 효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 및 인터넷의 발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정보, 접근, 체험 등의 서비스가 비슷한 수준으로 도달할수록 브랜드화 된 문화공간은 더욱 경쟁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똑같은 수준의 설비를 가진 테마파크라면 ‘디즈니’라는 브랜드 하나가 그곳을 더욱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 줄 것이다.⁸⁾

전통적 마케팅과 문화마케팅의 차이

마케팅 전략(4P)	전통적 마케팅	문화마케팅
Product(제품)	편익과 기능을 강조	이미지, 환타지, 느낌강조
Price(가격)	합리적인 가격 또는 할인가 적용	문화 프리미엄 부가
Place(장소)	대형, 전문 유통 매장	문화공간 등의 탈유통
Promotion(홍보)	미디어 광고, 입소문 등	문화이벤트, 직접체험 등

주: 삼성경제연구소, 문화마케팅의 부상과 성공전략, 2002.10.30, pp3

또한, 문화마케팅의 수단으로서 역사문화공간, 자연공간, 산업공간 등의 공동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Co-Branding, 문화공간과 도시공간 간의 브랜드화하는 Ingredient Branding, 문화공간의 장소성과 상품을 연계한 공동마케팅인 Co-Marketing의 전략적 도입추진 요망된다.

8) <http://advert.pe.kr/brand>

□ 참고문헌

- 이정식·김용웅, “세계화와 지역발전”, 도서출판 한울, 2001.12.3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제는 지역이다 - 지역혁신 성공사례를 찾아서”, 디자인 모브, 2004.1.29
- 박용남지음, “꿈의도시 꾸리찌바”, 이후, 2003
- 이해준,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2001.5.20
- 김원, “문화가 지역을 살리네”, 한국자치개발연구원, 2001.3.8
- 김문환, “문화경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11.15
- 大河直躬編, 都市の歴史とまちづくり, 學藝出版社, 1997.6.20
- 삼성경제연구소,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2004.2.16
- 안양시, “안양아트시티21 기본계획”, 2003.12
- 광주광역시·국토연구원, “광주광역시 도심활성화 방안 연구 - 도심문화산업 육성방안”, 2003
- 삼성경제연구소, “도시 어메니티의 개선과 기업의 대응”, 2003.2.11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2003
- 삼성경제연구소, “문화마케팅의 부상과 성공전략”, 2002.10.30
- 산업연구원,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2001.12
- 국토연구원,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2001.12.30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의 역사문화형 테마파크 개발방향”, 서인원, 2001.12
- 충남발전연구원, “구마모토의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및 경관행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정연, 2001.5
- 국토연구원, “도시문화산업의 육성방안 - 도시마케팅적 접근을 중심으로-”, 2000.12.30

- 부산발전연구원, “개발계획과정상의 주민참여 확대방향”, 황영우, 이광국, 김홍관, 정선철, 1997.6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수법 개발”, 구자훈 외2인, 1996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민참여형 상업지 정비수법 개발”, 정희윤, 김도년, 1996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도시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1992.3
- The Revitalization of Bilbao from Infrastructures to Values, Alfonso Martinez(Spain)
- <http://www.new-museum.go.kr/>
- <http://architectsonline.com/publications/bilbao>
- http://www.unesco.org/courier/1998_09/uk/signes/txt1.htm - Bilbao : the Guggenheim effect
- <http://www.theatlantic.com/issues>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을 위해서는 충청권을 자립적 지역경제권역으로서 세계도시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충청권을 행정도시 광역권, 서해안권 및 내륙권으로 구분해 행정도시 광역권은 정치·행정 및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서해안권 및 내륙권은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19일 오후2시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있었던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숍에서 공주대 최원희 교수가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충청권 지역구조 변화와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또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춘용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이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행정도시만이 아닌 주변도시와 네트워크 차원에서 교통계획시설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을 토대로 역할 분담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종찬교수(고려대)는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한 충남 지역산업·경제의 발전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충남 산업발전의 효율성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거점과 중소클러스터 연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지역산업 및 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교수(한밭대) 등 6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각각의 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을 주최한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은 "행정도시가 충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장미빛만은 아니다"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청권의 발전전략

최원희 | 공주대 교수

충청권이 I자형 도시축의 광역도시권과 그 주변의 서해안권 및 내륙권이 균형발전될 때, 비로소 충청권이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권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성장거점전략, 네트워크 도시체계 전략, 개성화전략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거점 형성 전략은 행정중심도시, 대전, 청주, 천안 등의 도시로 이루어진 행정중심도시 광역권의 일방적인 흡인력에 대응하여 서해안권과 내륙권의 일정지역에 성장거점도시 내지 성장거점도시권을 육성하고, 기존 중소도시의 재활성화를 통해서 중심성을 확보하며, 신활력도시 등 다양한 신개발방식을 도입한다. 네트워크 도시체계 전략은 산업적 측면에서 소중역, 광역 및 초광역의 지역혁신체계 형성, 격자형 고속 교통망 구축, IC 연접부 개발 등 새로운 활력거점의 창조 등을 포함하며, 상호연계를 통한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개성화 전략은 지역문화권 육성, 특화관광자원 개발, 농산어촌 신자원 활용 등을 포함하며, 이는 충청권의 자연, 인문, 사회적 특성을 최

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성장거점개발 전략, 네트워크 도시체계 전략 및 개성화전략에 의거하여 충청권의 균형발전전략을 설정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충청권을 행정중심도시 광역권, 서해안권 및 내륙권으로 구분하고, 행정중심도시 광역권은 정치, 행정 및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체계화 하고, 행정중심도시 광역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서해안권 및 내륙권은 각각 특정 성장거점도시나 성장거점도시권, 공공기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육성과 기존도시 특화, 기성시가지 활성화 등의 단계를 거쳐서 네트워크 도시체계화 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중심도시권, 서해안권 및 내륙권을 상호간의 기능적 보완성에 기초하여 하나의 통합적 네트워크 도시체계로 연계시켜서, 충청권을 자율적 경제권역으로서의 세계도시지역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

행정도시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

이춘용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개별 신도시 건설 또는 단일 기능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자족적이며 국토공간구조를 다원화하는 행정도시이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환경친화적이며 삶의 질이 향상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생활양식이 전개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행정도시만이 아닌 주변 도시와 네트워크 차원에서 교통시설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사통팔달의 신속한 접근이 가능한 간선교통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행정도시뿐만 아니라 국토의 거점이 되는 충청권의 연계 발전도 가능한 간선교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을 토대로 역할 분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광역교통체계를 완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 그리고 인접 시·도간 충분한 협의와 협력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교통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관련 재원의 축소 및 한시적인 교통세 운용

기간 등 악조건 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원운용은 중앙과 지방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부문간·부문내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은 특정지역의 논리보다는 충청권과 도시 네트워크 형성 차원에서 우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수립될 광역도시계획에서 이용자 중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 연계한 충남 지역산업 발전방향과 전략

박종찬 | 고려대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한 충남 지역산업 및 경제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산업발전의 효율성과 지역내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거점과 중소클러스터 연계, 인접 시·도간 거점 클러스터 연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충남이 취약한 지식기반 인프라를 대덕연구단지를 활용해 확충하여 충남의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권역내 허브 클러스터(오창, 대덕)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및 해외 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포괄하는 혁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충남의 전략산업은 산업의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조정기라는 4단계의 제품주기를 고려하여 진입기 내지는 성장기의 산업을 선정하고 시장성이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 이들 전략산업은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즉, 전략산업이 지역 내의 전통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데 기여해 지역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의 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남의 전략산업 육성을 활용해 충남의 지역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 의료 및 교육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 천안은 혁신거점, 창출거점, 지원거점 기능이 종합된 중핵적인 과학혁신거점화한다.
- 천안과 아산을 잇는 전자·정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과학기술집적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아산, 서산, 보령, 서천을 잇는 정밀기기, 자동차관련 과학기술집적네트워크 구축한다. 아산은 기술창출형과 산업진흥형으로 과학기술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

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을 강화하고 모기업의 중앙연구소와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 천안, 공주, 연기를 잇는 영상애니메이션 과학 기술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 논산, 금산을 중심으로 한 BT(특히 인삼을 중심으로 한 생약개발) 과학혁신 거점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기회로 충남의 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충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경기안정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한국 전체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안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선진국형 산업구조의 건설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통주력 제조업의 만으로 는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증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 한국의 1992~2003 년 고용증감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기간 중 313 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농림어업 △72 만, 제조업 △78 만, 광업 △4 만 명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454 만 명이 증가하여 고용증가가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다.
- 첨단기술산업은 고용창출 없는 성장의 속성으

로 부가가치는 창출하지만 고용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충남의 경우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를 활용해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창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토론 내용

1. 행정중심도시는 **충남지역의 서비스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R&D 발전의 계기**가 되어,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교통망, 사회간접자본, 정보통신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등의 서비스 산업 육성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활용하여, 행정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을 포함해 충남의 서비스업을 비중을 높여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박종찬 고려대 교수)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기회로 충남의 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충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한국 전체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박종찬 고려대 교수)
- 충남 서북부지역의 제조업 기반 구축과 함께 충남의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함으로써 충남의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충남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함(박종찬 고려대 교수)
- 행정도시는 충남 지역경제가 지닌 취약한 지식기반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강현수 중부대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결과

2. 행정중심도시와 지역발전과의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도시의 기능도 약화됨

문제점

- 주변지역을 흡수하고, 대전·청주간 연담화 가능성이 있음(최영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행정중심도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주변지역을 공동화시킬 우려가 있음(강현수 중부대 교수)
- 행정도시로의 수도권 인구유입보다 주변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이 많을 것임(강현수 중부대 교수)

대책

- 행정중심도시를 계기로 발전기반이 취약한 주변도시도 행정중심도시와의 기능적 연계를 통하여 공동 발전될 수 있어야 함(최원희 공주대 교수)
- 주변지역의 도시기반이 확충·정비되어야 하고, 중앙정부가 행정도시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도시 정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함(최원희 공주대 교수)
- 행정도시의 이질적 문화는 지역문화와 충돌할 가능성 있음. 주변지역의 지역 자긍심과 지역문화를 특화 육성하는 조치가 필요(최영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서해안은 관광·레저시설, 충남내륙지방은 복합적 재개발(레저, 생산, 주거, 문화, 여가, 연구개발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함(신동호 한남대 교수)

3. 주변 도시·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주변 국내교통망, 국제교통망(청주국제공항 및 당진항 개발)이 첨단형 교통체계로 구축되어야 함

- 행정중심도시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청주국제공항과 당진항도 국제기능을 확보하여야 함(권영종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행정중심도시의 급행연결망, 경전철 등 첨단형, 친환경 대중교통체계가 갖춰져야 함(김황배 남서울대 교수)
- 향후 수립될 광역도시계획에서 이용자 중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이춘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주변 도시·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교통체계를 先 (광역)교통계획 後 토지이용계획·도시개발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함(김황배 남서울대 교수)

4. 지역불균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시책에서 충청지역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부문·공간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문제점

-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라 충청권 지역구조가 경부축 중심의 I자형 도시축으로 재편되어, 서해안권과 내륙권 중소도시들은 상대적인 저성장을 면하지 못할 것임. 서해안권과 내륙권 중소도시들의 쇠퇴는 배후지역의 쇠퇴를 동반하여, 결국 서해안권과 내륙권 전체의 쇠퇴를 유발할 것임(최원희 공주대 교수)
- I자형 도시축은 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가능성보다는 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인구와 기능을 일방적으로 흡수해서 거대도시권 기능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음(최원희 공주대 교수)

대 책

- 충청권의 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에 경부축 거대도시권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각각의 도시권이 형성되어, 중국에는 서해안도시권, 경부축도시권 및 내륙도시권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된 통합 도시권이 형성될 때, 충청권내의 균형발전을 물론 충청권이 비로소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음(최원희 공주대 교수)
- 충청권을 행정중심도시 광역권, 서해안권 및 내륙권으로 구분하고, 행정중심도시 광역권은 정치, 행정 및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체계화하고, 행정중심도시 광역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서해안권 및 내륙권은 각각 특정 성장거점도시나 성장거점도시권, 공공기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육성과 기존도시 특화, 기성시가지 활성화 등의 단계를 거쳐서 네트워크 도시체계화 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중심도시권, 서해안권 및 내륙권을 상호간의 기능적 보완성에 기초하여 하나의 통합적 네트워크 도시체계로 연계시켜서, 충청권을 자율적 경제권역으로서의 세계도시지역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최원희 공주대 교수)
- 충청지역내 불균형을 예방하고 행정도시건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남 서해안권 및 내륙권이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역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강현수 중부대 교수)
- 서해안, 충남 내륙지역의 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특성(관광, 역사, 문화 등)에 맞는 발전방안과 대규모 생산·물류(농축산 Bio, 첨단산업) 기능확충이 필요하며, 이는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청됨(최영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충남 노인인적자원 개발의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백남훈)와 금강대학교(총장 김유혁)은 5월26일 오후2시 논산시 상월면 금강대학교 사이버강의실에서 「충남 노인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과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지역노인, 충남지역 해당공무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대표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기조발제에는 교수현 학부장(금강대 사회학부)이 '충남노인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에 대해, 문진수 부장(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이 '충남노인의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 전략'에 대해, 이원식 교수(금강대 사회학부)이 '충남노인의 일자리사업 실태와 활성화 전략'에 대해 각각 주제논문 발표가 있었다.

또 이날 지정토론에는 강병연 강사(금강대 사회학부)와 김혜경 교수(나사렛대)와 류진상기자(서울신문)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한편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앞으로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충남교육청,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상공회의소, NGO, 충남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위 기관별로 이루어지던 인적자원개발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충남노인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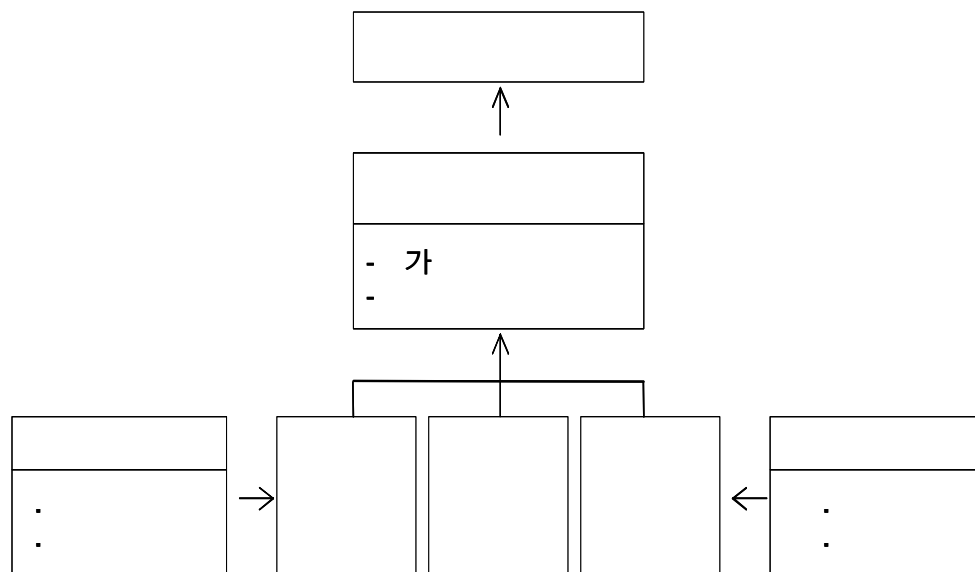
고 수 현

(금강대학교 사회과학부 학부장)

1. 요약

1)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접근

우선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한 각 부문별 방안 제시에 앞서 본 발제에서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한 활성화방안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근본적으로는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이 개선되도록 하는 기본모형을 재정리하면 (그림Ⅳ-1)에서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Ⅳ-1) 노인인적자원개발 개선방안 모형

주) 노년사회복지이론에는 노년학과 사회복지학이 중첩되는 이론으로 구성되며, 노인복지학으로 통칭됨.

2) 노인인적자원개발의 정책과제

(1) 노인 평생교육부문

노인 평생교육부문은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인프라에 해

당한다. 2002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처음으로 부산, 광주, 충북 3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2002.10~2003.9)하였지만 노인 평생교육부문은 간과된 측면이 많다. 이는 그간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프라가 미약하였던 관계로 그 정책을 추진할 조직과 인력체계에서도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데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처럼 노인인적자원을 배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 단계에 해당하는 노인 평생교육방안으로는 제도적 정책모델과 잔여적 정책모델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의 제도적 모델로는 고령자 직업교육프로그램, 고령자 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준·고령자 직업상담프로그램개발, 준·고령자 평생교육전문기관 설립운영 등의 대안을 제시한 후 지역학습관과 국·공립대학의 평생교육강화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잔여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평생교육모델로는 기업 및 사립대학의 평생교육지원, 준·고령자직업상담지원, 직장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전체적으로는 평생교육을 통한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시도하였다.

(2) 노인 취업촉진부문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은 현재 정부의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독자성이나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일자리창출의 성격에 따라 통합·전문화가 요구된다. 즉 노인일자리창출은 크게 취업부문과 사회참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부문으로 재편성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취업촉진 활성화를 방안으로는 제도적 모델로서 직업재훈련 및 재교육,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및 지도, 고령자 적합직종 기업의 고용의무화와 육성, 퇴직공무원·공사직원의 재고용, 지역별 노인공동작업장과 고령자사업단 운영, 고령자 고용전문기관 설립 운영 등의 기존의 일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노인취업촉진을 위한 잔여적 모델로는 기업정년퇴직직원의 재고용지원,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 지원, 노인에 맞는 근로환경조성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3) 노인 자원봉사부문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한 노인들이 아닌 중산층 이상의 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으로는 사회봉사 내지는 자원봉사부문이 있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사회발전을 위한 영역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소요되는 실비나 교통비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간여적으로는 행정적 편의제공이 있어야 한다.

노인 자원봉사활성화의 제도적 모델로서 공공복리형 자원봉사지원, 시설복지형 자원봉사지원, 재가복지형 자원봉사, 전통문화교육형, 전통문화계승형 자원봉사지원, 고학력자 및 교육전문직봉사회 운영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간여적인 모델로서의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방안으로서도 골목길 지킴이형 자원봉사지원, 가정의레지도형 자원봉사지원, 농촌 일손돕기형 자원봉사지원 등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2. 제언

1) 충청·대전지역중심의 노인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1) 가칭 충청·대전지역노인 인적개발원 설립

지역의 노인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단계는 노인인적자원을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하고 그들을 배분·활용할 학습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인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단계이다.

현행 교육체계를 보면 아동시기에서부터 대학생 단계의 성인초기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은 완비되어 있지만 평생교육시설은 그 인프라가 극히 미약하다.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적 구색만 갖춘 정도 일 뿐 노인이나 준·고령자들을 전문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보다는 고령화사회대책차원에서도 별도의 전문성 있는 기구와 인력을 조직화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타의 정책에서처럼 각 시·도별로 1개소씩의 일률적인 설립은 바람직

한 방법이 되질 못한다. 마치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치적 환경에 따라 전국에 많은 대학을 인가를 하고 설립케 하여 오늘날 학령인구감소로 통폐합의 단계에 있는 만큼 대전·충청권을 1개 권역으로 하여 가칭 ‘충청·대전(지역)노인인적개발원’을 설립하는 제언을 한다.

(2)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촌형 학습모델 구축

학습모델(Learning Model)은 학습지역(Learning Region) 조성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이는 학문적으로는 학습경제론(Learning Economy)에 토대로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을 교실단위에서 벗어나 지역(도시·농촌)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많거나 교육열이 높은 도시를 ‘교육도시(Educating Cities)’라고 칭하고 있지만 이제는 고령화사회인만큼 ‘학습도시(Learning Cities)’⁷⁾가 되도록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학습도시는 대도시형·중소도시형, 농촌(도시)형으로 구분하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대학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상관없이 학습과정을 설치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교실위주의 학습환경에 맞는 것이며 활동력이 있는 청년층에 맞춘 것이라면 노인은 신체적으로 기동성이 떨어지므로 해당 거주지역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거주하는 지역환경이 농촌인가 혹은 도시인가를 비롯한 기존의 인프라를 고려한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2) 충남지역중심의 노인인적자원 활용체제 구축

(1) 가칭 충남지역 노인인적자원활용센터 설립

첫 번째의 제언이 노인인적자원개발의 기초단계로서 교육부문의 인프라의 필요성에 착안한 것이라면 노인인적자원 활용체제 구축은 교육된 노인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수행에 요구되는 인프라를 말한다. 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의 인적자원이 사회발전에 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기존의 노인복지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설치된 노인취업지원센터, 노

⁷⁾ 학습도시의 시초는 1979년에 일본의 가케가와(Kakegawa)시에서 ‘학습도시’를 선언한 이후 유럽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모델이다.

인인력지원기관(시니어클럽),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인프라로서는 노인인적자원개발이라는 경제학적인 이념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부처에서도 부처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도록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현재도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부처사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협의는 거치고 있으나 실제로 지역에서 그 정책이 실천되는 과정에서는 혼용되거나 개별적으로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렇다면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축차원에서도 비효율성을 제기하고 통합운영을 통하여 활성화가 요구된다. 가칭 '충남(지역) 노인인적자원활용센터'를 설립하여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혁신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언한다. 그리고 이 기구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시·도별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취업부문과 자원봉사부문의 2원화 체제 구축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및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인적자원개발체제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은 법제나 정책에 근거해야 하는 한계성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법,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프로그램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인적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슬로건을 내놓게 되고 각 부처는 그 일자리의 성격이 취업부문에 속하는지 자원봉사부문에 속하는지의 구분도 명확히 되질 않는 프로그램을 양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도 당장 불만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선언적 전시행정용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단 지역별로 노인인적자원활용센터가 구축된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자체의 성격을 취업부문과 자원봉사부문으로 2원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취업형 일자리에선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거나 부족분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으로 채우고 자원봉사형 일자리에선 적절한 실비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활성화가 가능하다.

3) 노인인적자원 활용의 시민의식 개선

(1) 노인인적자원 활용 주체의 의식 개선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은 노인인적자원에 대한 교육과 배분·활용과정으로 이루어지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내부적인 수행과정 이외에도 대국민 홍보정책이 도시에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산업화과정에서 청·장년층의 실업문제도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고령사회를 걱정해야 하는 압축적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인인적자원을 활용하게 되는 사용주체(기업·사회단체)가 노인의 근로능력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현재는 상관이 없지만 잠재적으로 노인산업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노인인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들이 사고하는 인식체계는 인간현상이나 사회현상을 통해서도 재정립될 수도 있지만 국가나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언론 등의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도 변화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에서는 노인층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부담층으로만 작용하거나 사회복지의 대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전국민적인 인식체계 변화를 정부나 지방정부차원에서 주도하여야 함을 제언한다.

(2) 노인과 젊은 세대의 의식 개선

노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정책의 주체는 정부나 기업·기관·단체뿐만 아니라 노인 자신을 포함한 개인의 책임성도 있다. 즉 노인인적자원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은 어느 한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3자간의 공통적인 기능에서 창출될 수 있다는 의식이 함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정작 노인의 적극적 태도가 구비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책수행의 효과성이 떨어져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다.

아울러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은 그 초기 단계에서는 세대간의 갈등과 충돌현상이 예견된다. 당장 일자리를 나누어야 하고(Job Sharing), 임금체계에서도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한정된 노동시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노인층에게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준다면 양자간에는 경쟁관계가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갈등은 고령사회에 대응한 기본적 맥락에서는 해결해야 할 부문이

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노인인적자원개발 전략이 고령사회에 다가서고 있는 충남지역의 미래사회에 대응한 성장 동력이 강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초발제에 갈음하고자 한다.

충남노인의 평생교육실태와 활성화 전략

문진수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사무국장)

1. 충남 노인평생교육의 문제점

1) 노인평생교육 정책 미비

노인평생교육을 보건복지부(충청남도)는 복지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충청남도 교육청)는 교육사업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여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된 법에서도 개념이 상이하여 체계적인 노인평생교육정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의 노인평생교육도 정책추진체계의 미비로 인한 비효율성, 비연계성, 비전문성이 심화되어 있다.

2) 노인평생교육 예산 취약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노인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일자리 제공, 자원봉사, 노인여가선용확대 및 노인 건강관리 등 노인복지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노인평생교육에는 노인정보화교육과 금빛평생교육봉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에 일부분이 있을 뿐이다.

3) 교육시스템의 취약

노인평생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과 노인교육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노인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노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고 단순 여가오락 프로그램 중심의 노인교육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과 지원을 전담하는 행정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도청, 도교육청, 충청체신청, 대학평생교육원 등 각 기관간의 연계가 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평생교육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노인평생교육 여건

평생교육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 욕구에 비하여 실제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다. 충남 지역 평생교육 기초조사 연구에 따르면 충남의 60세 이상 노인들의 6.7%만이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구체적을 알고 있고, 59.6%가 평생교육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85.9%가 평생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무관심도 있겠지만 노인평생교육기관의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2. 충남 노인교육의 활성화 전략

1)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

노인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의 일부분인 동시에 노인복지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법, 평생교육법 등 노인과 관련된 법의 정비와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과 노인교육지원사업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연계할 수 있는 제구성이 필요하다.

지역수준에서 살펴보면 평생교육은 충남교육청에서 노인복지사업은 충남도청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노인과 관련된 서로간의 정책적인 연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협의회 구

성이 필요하며, 그 협의회는 기존의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를 <표 V-1>과 같이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며,⁸⁾ 더불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노인평생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은 우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노인평생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노인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국에 가칭 ‘평생교육과’를 두고 평생교육과에 가칭 ‘평생교육정책담당, 노인평생교육담당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참조

<표 V-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개편(안)

구분	현 행	개 편 (안)
명칭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	충청남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p>※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부교육감 ○ 부위원장(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국장 - 공무원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12인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관리국장 - 평생교육체육과장 - 도지사 추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1명 -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충청남도부교육감 ○ 부위원장(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 복지환경국장 -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12인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 도청 복지정책과장 -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장 - 평생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관련사회단체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회의	<p>○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p>○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한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행·재정지원체계 구축은 (그림 V-1)과 같은 모형으로서 도단위에서는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도청, 도교육청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군지역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시·군청 및 지역교육청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협력과 지원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

(그림 V-1) 노인평생교육 행·재정지원체계도

2) 유희 및 노인복지여가시설 활용

부족한 노인전담 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부족한 시설을 대신하여 유희시설이나 노인복지여가시설을 활용하여 노인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 학교시설을 활용한 노인평생교육

고령 사회와 아울러 저출산률(2002년 현재1.17명)은 학생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유희 학교시설이 늘어날 전망이다. 즉, 그 지역의 학교시설 유희화 비율은 해당 지역의 고령화 비율과 비례하므로 학교시설의 전용 또는 활용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특히 교육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일수록 학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교육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잠재력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별로 <표 V-1>과 같이 중점 노인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2> 학교별 중점 노인교육 프로그램

학교별	대상	교육내용	방법	지역단위
초·중학교	저학력노인	성인기초	문해교육기관과 연계	생활권
	일반 노인	여가, 취미교육	일반 노인대학	
실업고	취업희망노인	직업교육	주문식 교육, 산학협력 도모	지역 권역

(2) 노인복지여가시설을 활용한 노인평생교육

현재 노인복지여가시설들이 대부분 공간만 마련되어 있을 뿐, 담당 인력의 부족,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등으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에 비례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비율이 저조한 원인 중에 하나인 노인평생교육기관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여가시설을 이용한 노인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즉,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보건소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등을 활용하여 재정적·지역적으로 소외된 경로당 등에 강사를 순회 파견 운영하는 무료 풀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충남에는 19개의 평생학습관과 4,961개의 경로당을 비롯한 5,012개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다.

3) 명예학생제도의 확산

명예학생제도는 대학에서 노인과 대학생이 함께 학습하는 청강생제도의 일종이며, 소정의 교육기간에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 명예졸업생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명예학생제도의 취지는 일반교양과 전문성을 갖춘 노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학습자에게는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에는 필요한 노인전문인력을 배양할 수 있는 명예학생제도를 모든 대학으로 확산시켜 운영하는 것이다.

4) 노인평생교육 분위기 확산

현재 충남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노인학습자들의 학습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1) 지역 평생학습축제 참여

2001년 제1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천안에서 개최하였고, 그 이후 홍성, 공주, 논산에서 충남지역평생학습축제를 순회 개최하면서 평생학습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월에 보령에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이 평생학습축제를 통하여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시키며,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평생학습축제에 노인들에게도 즐겁고 흥겨운 한마당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미하여 노인들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평생학습 참여도를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학습동아리 발표회(실버댄스스포츠, 실버합창 등),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연회(노인건강강좌 등), 사이버 경진대회(실버 인터넷 경진대회 등), 평생학습 결과물 전시회 등이다.

(2) '배워서 남주기'운동 전개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에 부가하여 평생교육을 통하여 얻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배워서 남주기'운동을 전개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노인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충남교육청(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금빛평생교육 봉사단, 충남도청에 관리 운영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 충청제신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보화교육강사 그리고 기타 평생교육프로그램강사(문해교육, 한자교육, 예절교육 등)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충남노인의 자원봉사실태와 활성화 전략

박 종 팔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강사)

1. 노인 자원봉사의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1) 노인 자원봉사의 참여 실태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자원봉사와 관련된 주관부처가 나누어져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관련단체가 산재 되어 있어 자원봉사자의 수나 비율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설사 통계가 파악된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그 주된 이유는 정부의 지원체계 미비와 예산지원의 미흡, 노인들의 삶의 지혜와 경륜 등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 노인들의 권위주의적 특성, 봉사단체의 관리 미숙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대부분 TV나 라디오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극히 미흡하다. 변선희(1998)의 논문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가율이 4.3%이며, 조사대상자의 47.8%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 않고, 16.0%만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는 노인들도 16.0%로 자원 봉사자의 참여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조사대상 노인의 0.4%만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건강(34.2%), 노래와 춤(20.5%)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전체 노인의 약 37%가 자원봉사를 할 의사가 있거나 적어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믿는 잠재적 자원봉사자로 나타났다(Hrubetz, 1992). 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에 있어서 노인들이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로는 대한노인회, 한국 노년자원봉사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노인복지회, 한국노인의 전화,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대한노인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한국노년자원봉사회 그리고 충청남도 노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노인회의 활동이다. 대한노인회는 70년 4월 19일 문화공보부(현재 문화관광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주요사업 목적은 노인여가시설운영, 노인취업알선센터운영, 경로효친사상 선양운동,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다. 약 160만명 노인봉사자들이 교통봉사, 방법순찰, 청소년 지도, 자연보호 캠페인, 환경정화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대한노인회, 2004) 그리고 지방조직은 시·도 단위연합회 16개소, 시·군·구 단위지회 242개소, 리·동 단위분회 1927개소 있다. 회원총수는 약 210만명(노인총수 약 430만명)이다. 여기서 회원총수는 210만 명인데 그 중 160만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봉사활동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의 자원봉사활동은 중앙회 및 정부의 지침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또는 선전이나 홍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 면이 강하며,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과 지회 또는 노인정 회장의 능력에 따라 노인봉사활동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이가옥, 1996).

둘째,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활동이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는 2000년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주요사업목표는 지역 센터 간 정부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활동이다. 60대 이상 노인 약 17만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전국 250개 센터에 약 199만 3천명의 회원이 있다(한국노인자원봉사센터협의회, 2005).

셋째, 한국노년자원봉사회 활동이다. 한국노년자원봉사회는 1997년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경기도, 전라북도 등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만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약 50%인 5000여명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노년자원봉사회, 2005).

넷째, 충청남도 노인자원봉사 활동이다. 충청남도의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각 시·군청 단위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재가노인사업의 일환으로 무급 및 유급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있다. 치매·중풍·와상노인 등 허약한 노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실시된 가정도우미(유급봉사원) 서비스는 충청남도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는 현재 342명(유급 18명, 무급 324명)의 가정도우미가 노인은 물론 장애인을 위하여 무상 또는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충남도청, 2005). 충청남도는 또한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충청남도를 만든다는 취지 하에서 노인들에게 교통봉사, 환경감시, 자율방법, 방법순찰, 청소년 지도, 자연보호 캠페인, 공원관리, 골목청소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인력의 활용이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한 여가활동이나 문화 복지 차원이 있는 반면 노인들에게 적은 액수이지만 봉사활동의 대가로 생계비나 용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향도 있다.

2) 노인 자원봉사의 문제점

노인자원봉사활동은 노인 자신의 자아성취 활동이나 사회통합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에 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실제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은 소극적이고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희생자'로 보거나, 봉사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된다. 자원봉사활동이 제공하는 보람, 가치, 흥미, 자기실현, 사회적·물질적 보상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질 기회가 없었거나, 일방적으로 봉사자들의 자기희생적인 모습들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후의 여가를 재미있고 보람 있게 보내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 봉사자의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이 흥미와는 무관한 사회활동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봉사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이 매우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경제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우리 노인들의 대다수는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살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무관심으로 가족의 이기주의적 성향, 은둔형의 퍼스널리티, 유급직종에 대한 집착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봉사활동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이다. 즉 노인들은 봉사활동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자신가족의 일만이 중요하고 남을 위한 일에는 인색한 가족 이기주의적 성향은 당연히 봉사활동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자신만의 생활공간에서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줄여 나감으로서 사회적 참여를 기피하는 은둔형의 퍼스널리티도 봉사활동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 일에 몰두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봉사활동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금룡, 1999).

넷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부족이다. 노인들이 자신의 친구나 친지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노인학교와 같은 기관이나 단체 등의 권유를 통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가 아직 비공식적인 통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고 봉사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이다. 대부분 노인들이 봉사활동에 접근하지 못하는 원인은 홍보 및 정보부족으로 봉사활동에 노출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단지 '알지 못해서'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금룡, 1999).

여섯째, 사회적 지원체계 및 제도적 장치의 미비이다.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프로그램에 노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노인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력인정, 상해보험제도, 자기시간 정립제 등이 극히 일부는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우선 필요한 것은 노인의식의 개혁이다. 가용한 자원이 부족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개인적 관심사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영역만을 지키려는 동물과 다를 바 없다. 노인들이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의 지역사회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세상과 연결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웃과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치체계를 점검하게 되며 세상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좀 더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애기하려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며, 그렇게 될 때 인간의 삶은 조화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는 우리가 처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노인이 갖고 있는 시간, 경험, 경륜, 지식, 지혜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귀한 자원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가시간을 개인적 취미나 오락으로 보내는 경향이 높다. 노인회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노인단체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향은 아직 낮은 편이다. 봉사활동이라고 해봐야 교통정리나 거리청소, 또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위세도가 낮은 활동에 기력이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도다.

이제는 좀 더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에, 건강과 지식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는 노인들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을 계획해서 참여해야 하겠다. 자원봉사를 통한 헌신과 나눔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장수하는 삶을 보상으로 준다. 자원봉사는 때로 직업이 줄 수 없었던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며, 생산적이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통해 타인과 세상을 수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제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닫힌’ 노인에서 ‘열린’ 노인으로, ‘받는’ 노인에서 ‘주는’ 노인으로 변화해야 하겠다.

우리나라 같이 민간 모금의 실적이 저조하며 정부의 노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본다.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노인자원봉사를 위한 조직의 운영비, 인건비, 연구비 등의 소요 경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자원봉사 활동 지원법” 만들어 노인자원봉사조직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인력활용 및 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관련 법률 등을 통하여 노인자원봉사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인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체계로는 노인자원봉사자 상해보험제도 도입, 노인자원봉사자의 포상, 봉사은행 저축제도, 봉사자 정기점검, 노인자원봉사 시범실시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노인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할 때,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제도의 실시는 중요한 일이다.

둘째, 노인자원봉사자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봉사활동을 실천한 사람들을 선정

하여 정기적으로 포상하는 것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하는 연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노인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패나 선물을 주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부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셋째, 노인들의 자원봉사 실적을 통장에 축적하도록 하고, 후에 노인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저축 심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충남노인의 일자리사업실태와 활성화 전략

이 원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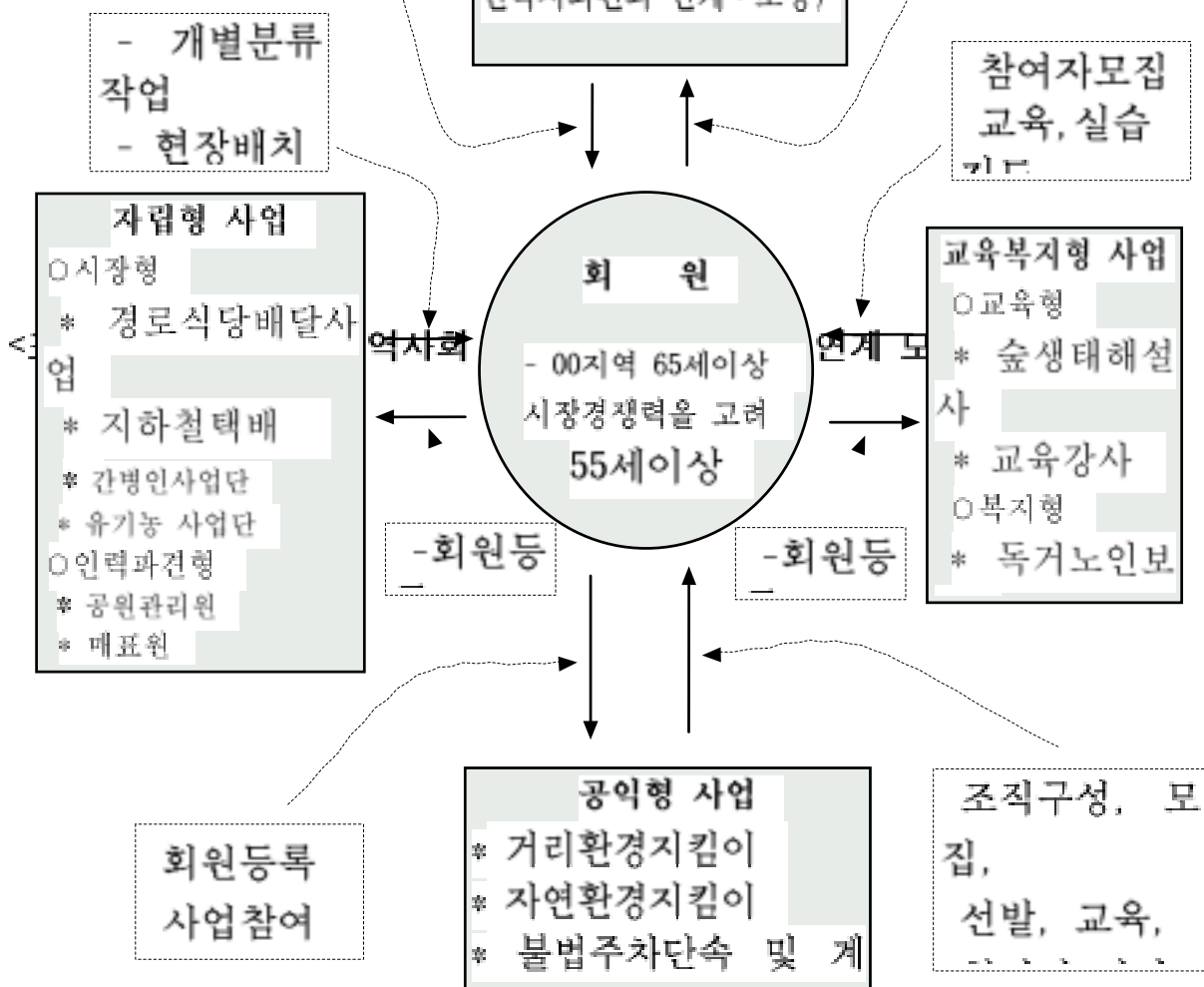
(금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충남 일자리창출사업의 활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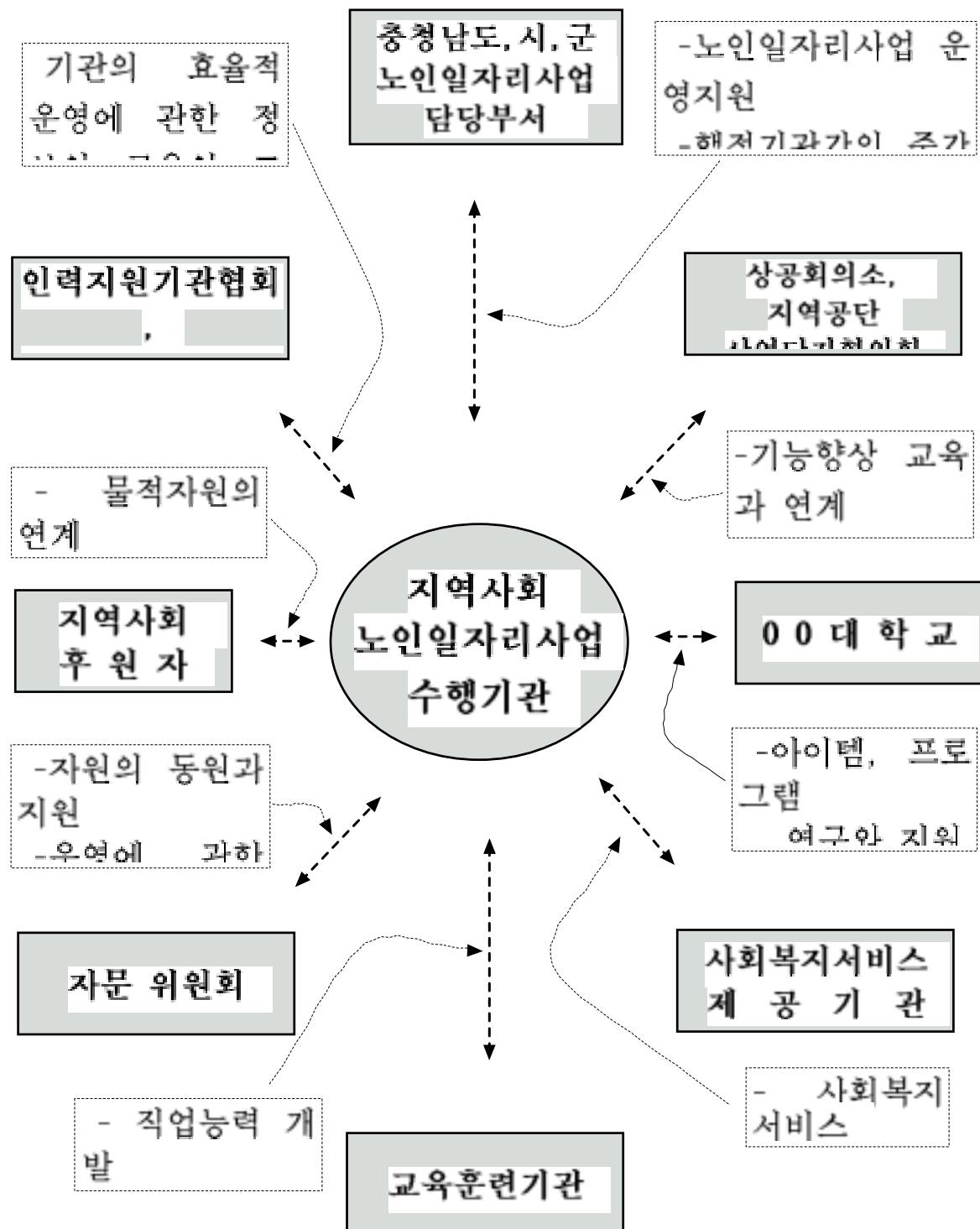
1) 노인일자리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의 주요과제는 기초 단위에서의 서비스 연계 체계의 구축과 통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사례관리체계의 마련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조직(사회복지사무소 혹은 사회복지과)을 중심으로 민간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기관은 물론이고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포함한 지역 노인일자리 서비스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 담당공무원과의 초기상담과 노인일자리 서비스연계체계 내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자를 통해 필요한 일자리지원기관(사회복지사무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을 소개받게 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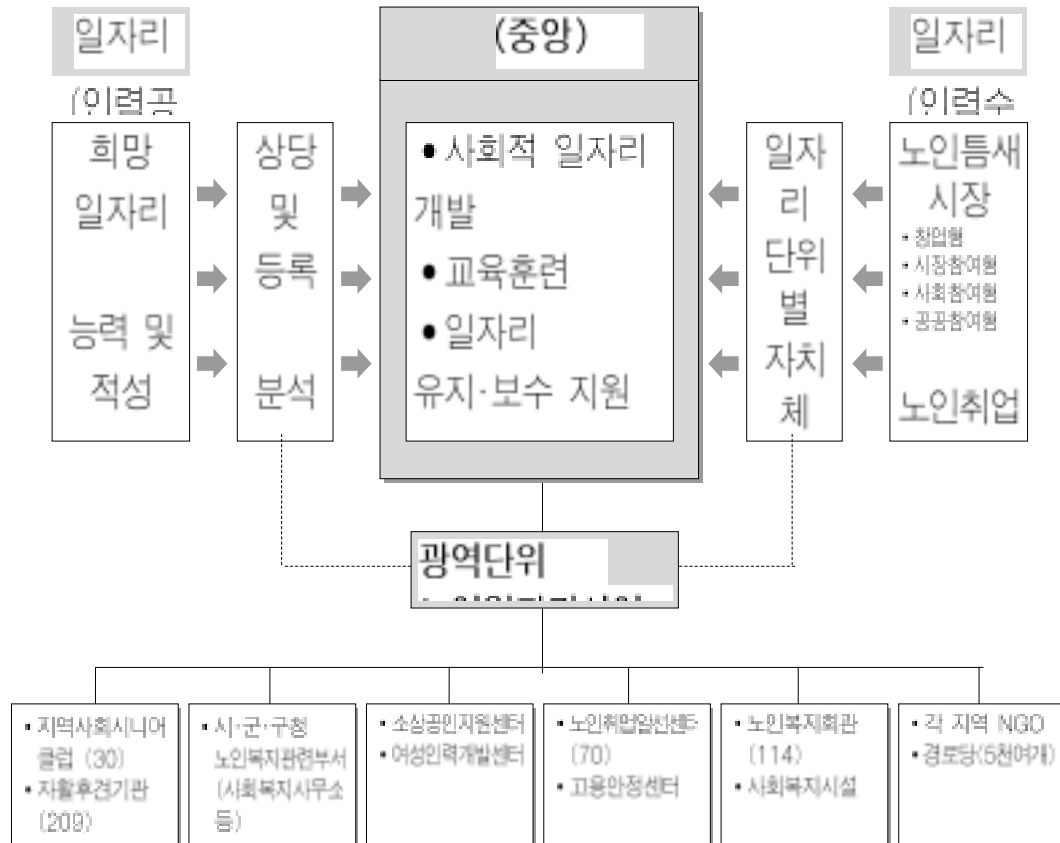


<표 V-2> 충청남도 지역사회 일자리사업수행기관의 운영 연계망(예시)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Network

<표 V-3>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Network



1)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조직 강화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조직을 강화조직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이 요구된다. 첫째, 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과 사업 영역별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중심의 직무교육, 관련지식과 이론교육 등을 통해 센터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공과 민간의 수평적 관계 유지를 위해 조직을 유연화해야 한다.

넷째, 광역 시·도에 거점 센터를 설립한다.

2)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사업역량 강화

첫째, 지속가능한 수요처 및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노인일자리종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센터 개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연계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노동부 고용통합정보망(Work-net)과의 전략적 연계방안 및 독자개발 영역에 대한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수행기관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실무자 직무교육, 강사 풀, 교재, 교육과정 등 현장 적합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해야 하고 취업 및 창업관련 정보 제공 등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인큐베이팅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전략적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의 필요성, 내용, 기대효과 등에 관한 홍보를 체계화하고 언론, 방송, 광고매체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즉 관련 제도와 법령 개정을 위한 연구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노인인력 활용의 실태 및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하고 사업모니터링, 수급동향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제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해외사례연구를 통해 장기적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3) 충청남도 지역사회 일자리사업 활성화 전략

(1) 광역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도표 21, 22참조)

시, 도 단위 지원체계 개선방안의 핵심은 중앙 노인인력운영센터와 마찬가지로 광역단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기획하고,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기초단위의 노인일자리 실시기관을 지원하는 광역단위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광역단위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주요 과제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의 일자리사업 수행을 지원하며 정보제공, 전문경영지도, 사업개발, 종사자 교육훈련 등이 될 수 있다.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보완 및 역할 강화

기초단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의 역할 정립과 조직 보강 등이 요구된다. 특히 자립지원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할 시니어클럽이 전국에 30개 기관에 불과하고 충남에는 부여군 1곳뿐이다. 일차적으로는 충남도 차원에서 시니어클럽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기관의 설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활후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형, 교육복지형 일자리의 경우도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의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핵심 기관은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이며, 이들의 역할은 일자리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역특성 및 노인의 능력, 경험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며, 대상자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제반 일자리 사업 일반을 민간 일선기관들이 수행해야 한다. 또한 검증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서해안시대의 중심, “해양 웰빙시티” 태안군

조봉운 / 도시지역연구부 책임연구원

태안의 첫느낌



과거, 태안군을 알게 된 것은 충남의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갖추기 위해서 충남의 행정 지도를 컴퓨터를 이용해 그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이다.

충남의 북서부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꼬불꼬불한 해안선이 길어 유난히도 그리기가 힘든 지역이었다. 후에 안 것이지만, 그 긴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이만큼 ‘태안’하면 누구나 서해안의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붐비는 해수욕장을 연상하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생각에는 찾아가기 힘든 곳,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태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 2002년 국제꽃 박람회 개최이후 태안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으며, 찾아오는 관광객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떠올리는 이미지도 바다, 해수욕장에서 꽃, 소나무(해송) 등 자연에 대한 이미지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복의 그림같이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태안군이 가장 깨끗하고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태안군의 심벌마크 마스코드 표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심벌마크는 태안의 아름다운 낙조와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붉은색타원 태안의 청정관광지를 상징하는 녹색 타원 장대한 리아스식 해안을 상징하는 청색의 라인은 태안의 한글 첫 자인 ‘ㅌ’과 ‘ㅇ’을 모티브로 하여 태안군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마스코트인 ‘태돌이’는 태안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꽃게를 형상화하였는데, 태는 태평성대(太平聖代), 국태민안(國泰民安)으로 복된 태안을, 돌이는 도리로 목표와 방향 바른 길을 의미한다.

태안의 일반현황

태안군의 연혁을 살펴보면, 백제시대에 성대해현이라 칭하였고, 신라 경덕왕조에 소태라 개칭하여 현이 되었다가 충렬왕조에 태안으로 개칭되었다. 그후 지방제도 개정시 조선 고종 32년에 태안군으로 정하고 군수를 두었다.

1914년 태안군과 서산군이 통합되었다가 1989년 서산군으로부터 복군되어 2읍 6면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태안군은 인구 6만4647명(2003)의 면적이 503.57㎢인 충청남도 북서단에 위치한 군으로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반도이며, 광주산맥이 침강하였다가 다시 융기하여 생긴 백화산·지령산이 있고, 팔봉산을 경계로 서산시와 접하고 있다.

해안선은 리아스식해안으로 그 길이만도 531km나 되고, 그 형태도 복잡하여 가로림만에서 시작하여 이북반도, 남반도 그리고 천수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태안은 동쪽만 서산과 연결되어 있을 뿐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서 해안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이 118개에 이르고 있다.

태안의 진산(鎭山)인 백화산은 태안읍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맥(支脈)이 사방으로 뻗어내려 마치 낙지발처럼 분포되어 있다. 주요산으로는 백화산(白華山), 칠마산(鐵馬山), 이화산(梨花山), 도기산(倒旗山), 가재산(鰲大山), 군관산(軍官山), 건지미산(乾芝味山), 후망봉(候望峰), 묵송산(墨松山), 봉황산(鳳凰山) 등이 있다. 이로 인하여 평야는 적은 편이나 간척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풍수로 본 태안군은 금닭이 알 품은 모양(金鷄抱卵形), 닭 둥지 모양(鷄巢形), 우는 닭 모양(鷄鳴形), 닭뿔 모양 등의 형국이다.

태안에는 지형상 남북으로 긴형태로 강(江)이 없다. 단 몇 개의 하천(河川)이 있는데, 남창포천(南倉浦川), 여우내(如意川), 무우내(無雨川), 용요천(龍腰川), 풍천(楓川) 등이 있다.

기후는 바다와 접하고 있어 해양성 기후이지만,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동해안보다 오히려 춥다.

연평균기온은 11.8℃, 가장 추울 때인 1월의 평균기온은 -2.7℃, 가장 더울 때인 8월 평균기온은 25.6℃를 나타내며, 연평균강수량은 50%가량이 7~9월에 집중되어 내린다.

교통여건을 보면, 서산에서 태안으로 이어지는 국도32호선만이 유일한 접근로로서 가장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는데, 천수만에 서산 A·B지구가 간척되면서, 이를 따라 태안군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국지도 96호가 건설되어 보다 원활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안군은 지리적인 여건 및 계절적인 특성으로 다양한 식물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 천연기념물(제138호)로 지정되어 있는 모감주나무 군락지를 비롯한 굴거리나무, 서울제비꽃, 새우난초, 동백나무군락, 사철나무, 줄사철나무, 굴거리나무, 순기비나무 등은 특이할 만한 것이며, 특히, 태안읍을 중심으로 북부지역에서 소나무림과 잣나무인공림, 안면읍지역에 소나무림이 분포하고 있다.

태안에는 무역항 1곳(태안항), 국가어항 2곳(안흥항, 모항항), 지방어항 12곳(백사장, 몽대포 등), 어촌정주항 7곳(만대 등)의 어항이 있다.

태안~천안간 동서산업철도 건설을 통한 서해안권 물류 유통망 형성을 통한 서해안권과 내륙권과의 연계성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은 충남의 유일한 지역으로서 접근이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서해안고속도로의 해미·홍성IC에서 30km 이내로 수도권과 2시간대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안면~보령간 연육교가 건설되면, 내륙과도 광역적인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접근성의 불편함으로 인해 현재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접근로가 태안읍을 통과하여 각 읍·면으로 진입하게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태안읍이 태안군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삼지창과 같이 북부, 서부, 남부로 향하는 도로망이 형성되어 통합·분산의 결절지로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산 A·B지구로 진입하는 도로가 잘 형성되어 안면도로의 접근은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활권이 양분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산업적 측면을 보면, 경지면적이 약 1만7천ha로 전체

면적의 34.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논이 63%, 밭이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논외 저산성 구릉지의 산간곡지에, 밭은 완경사면에 발달하였다.

임야는 전체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밤·버섯·호두·잣·대추·도토리·은행 등의 각종 임산물들이 생산된다. 이 가운데 약초·산수유 등의 약용식물도 생산된다.

지역특산물로는 옥쪽마늘·안면도고추·느타리버섯·까나리약젓·돌김·혜옥 등이 있다.

2003년 현재 62개의 향구(鎭區)가 있는데, 비금속광으로 규사석이 산출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화훼단지 중에서 남면의 화훼단지가 규모와 재배농가수에서 가장 크고, 인접한 백합시험장과 연계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개최되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꽃축제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서해안 관광의 거점도시 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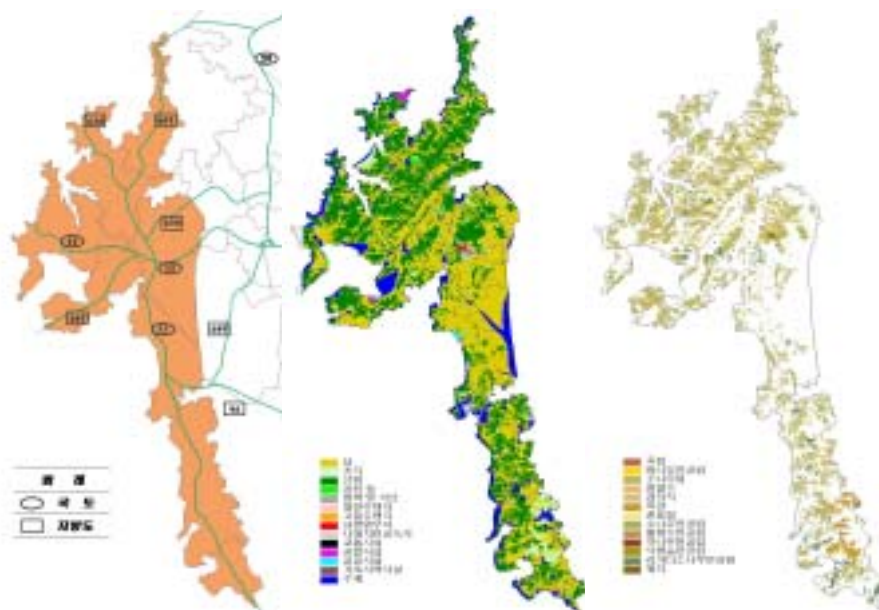
태안군의 서측 해안이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만리포·연포·몽산포·방포·영목·꽃지·삼봉 등 30여 개의 해수욕장이 줄지어 있고, 해수욕장과 더불어 천리포수목원·안면도자연휴양림·안흥항·신진도·안흥성지·경이정·태안향교·백화산성 등이 주요한 관광자

원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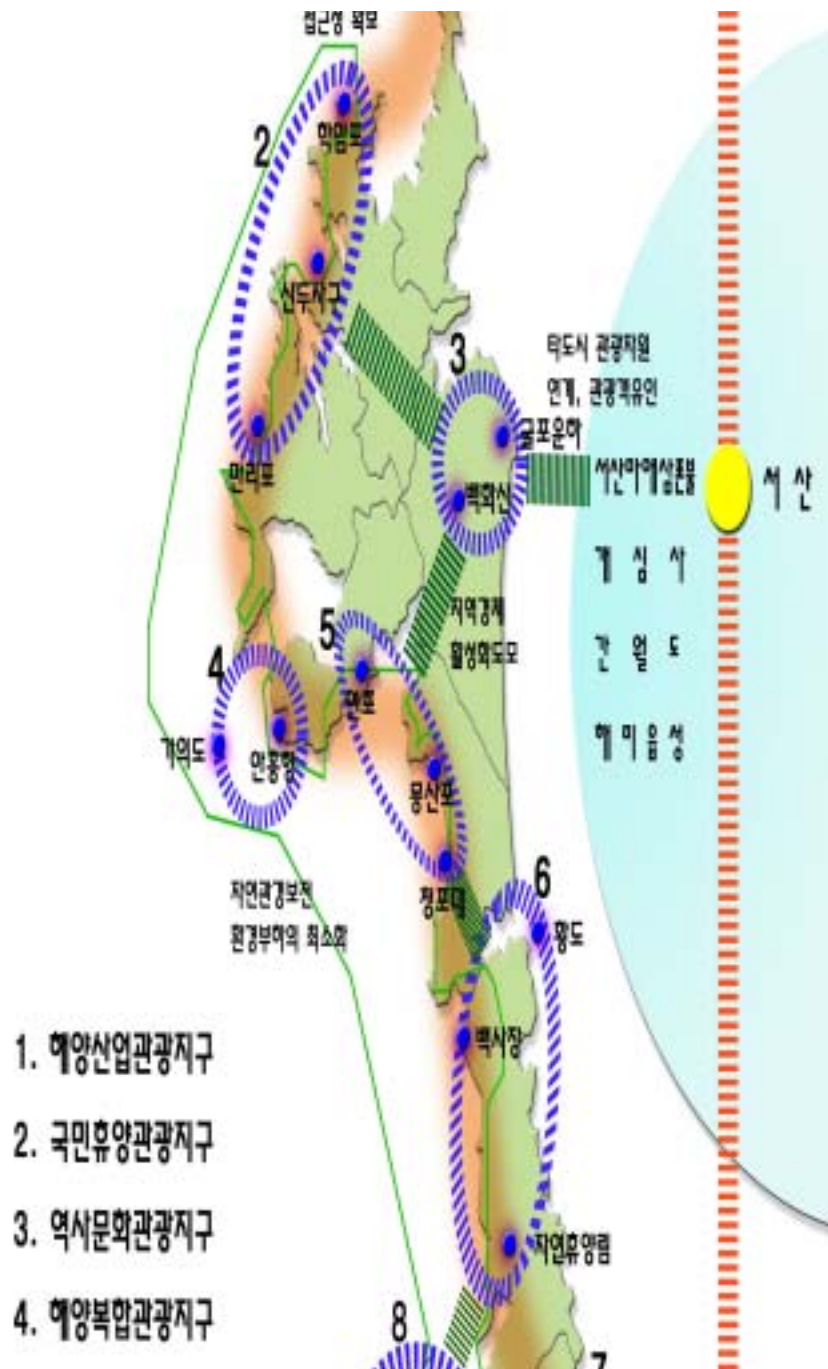
문화제는 2003년 현재 보물 1점, 천연기념물 3점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5점, 무형문화재 2점, 기념물 6점, 민속자료 1점, 문화재자료 4점의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특히, 문화재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굴포운하 등 수운의 개발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시대에 조곡의 운반을 위해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연결하는 운하건설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지역의 암반으로 인해 파나마운하와 같이 계단식 운하로 건설되어 활용되었으나, 이용상의 문제로 현재의 안면읍과 남면을 가르는 운하를 건설하게 되어, 결국 안면읍과 고남면이 섬으로 변하여 국내 6대 도서인 안면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운하 건설을 볼 때, 우리나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문화행사로는 태안군민의 날 축제, 황도봉기 풍어제, 안면도 예술축제, 수산물 축제 및 바다낚시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태안군 도로망 현황도 토지이용 인상분포도
출처 : 태안군, 태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충남발전연구원, 2004.



1. 해양산업관광지구
2. 국민휴양관광지구
3. 역사문화관광지구
4. 해양복합관광지구

출처 : 태안군, 태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충남발전연구원, 2004.

“해양 웰빙시티” 선포

2005년 5월 1일, 제5회 군민의 날 행사에서 태안 「해양 웰빙시티」 선포식이 있었다. 선포문에서는 첫째, 태안반도의 주인인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기본권의 존중과 권익을 보호받으며,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둘째,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전통적 기본질서와 문화적 토양을 튼튼히 함으로써 여유로운 마음과 기풍을 확산하며, 셋째, 군민과 함께 태안군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함 사 را을 베풀어 편안하고 기분 좋은 감도를 제공하고, 넷째,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여 군민 누구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며, 마지막으로 태안군이 천우녀과 천삼백리 해안절경이 어우러진 가장 편안한 고장으로서는 정당한 자연생태와 주변 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고 가꾸어 누구나 찾고 싶은, 살고 싶은 「태안해양웰빙시티」를 군민과 함께 건설해 갈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결의문에서는 첫째, 관광시설확충 및 관광문화 선지화에 전력투구, 둘째, 농특산물을 고품질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 셋째, 풍요로운 태안을 위하여 주민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 넷째, 맑은 물, 푸른 숲 등 친환경 시책을 적극 추진, 다섯째, 품격 높은 문화예술 전용시책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꿈의 도시 태안”을 소망하였다.

이러한 지역의 외지 표명은 앞으로 태안이 희망하는 도시로 성장해 가는데,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추진력있는 성장의 기제가 될 것이다.

3개 축과 허니포트형 거점도시의 육성이 필요

태안군민의 꿈인 서해안의 중심 태안으로 만들어 가려면, 현재 갖추고 있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3개 축의 개발과 허니포트형 거점도시의 육성을 제안해 본다.

여기서 3개축이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륙의 양호한 산림자원 그리고 천수만과 가로림만의 갯벌 등 생태자원의 축을 말하며, 이들 연결하고 지원하는 거점도시로서 태안읍의 육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축

서해안에 위치한 태안해안국립공원은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천혜의 해수욕장과 울창한 송림군락,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해안풍경이 절경이고 다양한 해양·해안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그 보전 가치가 대단히 높은 곳으로서, 1978년 10월 20일, 우리나라의 13번째 국

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년간 100만명이 넘는 탐방객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성황을 이루고, 타계절에 방문하게 되면, 자연자원이 잘 보존·보호된 쾌적한 탐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탐방코스를 개발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권역별로는 북부권(학암포, 만리포), 중부권(연포, 동산포), 남부권(안면도)으로 구분하여 탐방하고, 유람선을 이용한 해상탐방, 자연해설프로그램을 통한 생태탐방, 태안해안 지역의 문화축제를 통한 지역문화탐방을 마련하고 있다.

녹색산림 축

백화산을 비롯한 주요산과 천리포수목원 및 안면도휴양림으로 연결되는 녹색 축은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또 다른 볼거리와 체험공간이 될 수 있다. 특히 백화산의 경우, 다른 산과는 달리 암반이 노출되어 있는 산으로 보이는 그대로 백화산이라 불리우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기암괴석이 산재하고 있어 등산로를 따라 태안마애삼존불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천리포 수목원과 안면도휴양림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으로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송으로 둘러싸인 휴양림을 건노라면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자연에 흠뻑 심취해 볼 수 있는 곳이다.

그 밖의 북측의 산림은 바다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절경을 소유한 산으로서 산행의 좋은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수만과 가로림만 축

원수만과 가로림만은 서측의 해수욕장과는 또다른 이미지를 전달하는 곳으로서 어촌의 모습과 생태체험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곳으로서 바다와 함께한 삶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바다생태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많은 펜션이 자리잡고 있는 무질서한 개발보다는 지역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허니포트형 거점도시 태안읍 육성

이곳을 거쳐 타지역으로 출입하는 형태로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중심지로 성장한 태안읍을 타 읍·면이 관광 및 생활서비스외에 도시행정 및 지원서비스 등을 담당하면서 생활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자부의 지원과 함께 소도읍육성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10개년을 목표로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 결과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보다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삶이 보다 풍성해 질 것이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두서없이 태안이라는 지역을 현황과 희망 그리고 성장의 중심축을 소개하였다. 이 글을 쓰면서 처음 가졌던 태안에 대한 인상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또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태안군의 77번 도로를 한 낮에 차로 달리면서 간혹 사람들과 차량의 소리가 들렸지만 무엇보다 나를 감동시킨 것은 한없이 깊어만 가는 고요의 시간이었다. 그것은 바로 편안함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나로 하여금 모든 시름을 잊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해 주었다.

지역순환형 생태농업을 향해 가는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연합회

유병연 | 대전충남녹색연합



5월14일 토요일 아침 일찍 길을 나서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푸른들 영농조합, 한살림 천안아산이 함께하는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한살림 아산 매장을 개장 하는 날이다. 오전10시쯤 풍물을 앞세워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축문을 읽고, 유기농 가게가 변성 하도록 돼지머리에 지폐를 꽃아 문전성시를 기원 하였다. 매장에는 이 고장에서 생산된 오이, 토마토, 깻잎, 두부, 잡곡 등 원산지가 아산인 것이 많아 이곳이 유기농 생산지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유기농 생산지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생각에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사무실에 들러 생산지 현장을 보여 달라고 재촉 했다. 매장 개장 행사는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인사를 나누고, 준비된 음식

도 나누어 먹는 등 분주했다. 웬지 계속 재촉하기에는 미안했다. 시간은 오후1시가 넘어 가고 있을 때 실무자가 가자고 말했다. 아산시 온양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사무실과 매장을 뒤로하고 이제 생산지 현장으로 차를 몰았다.



아산시를 벗어나자마자 국가하천 곡교천의 은행나무와 시원한 하천을 보면서 이곳 수질의 깨끗함에 대해 물어 보았다. 예전에는 4급수에 가까웠으나, 지금은 2내지 3급수라고 한다. 곡교천은 천안의 명산 광덕산을 발원지로 흘러내려 이곳 아산을 거쳐 삼교천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제일 먼저 간 곳은 음봉면 봉계리에 있는 밀밭이다. 무려 20만평에 밭에는 봄밀을 생산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콩을 생산하고 있다 한다. 여기서 생산되는 것 중 밀은 농협을 통해 판매되고, 콩은 푸른들영농조합에서 만든 푸른들 식품가공공장에서 매입하여 우리 콩 부두를 만들어 전량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두유까지 생산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아산시 음봉면 신희리 왕우렁를 이용한 유기농 쌀 생산지를 방문 하였다. 이곳은 신희저수지 아래로 금방 보아도 쌀 생산지임을 알 수 있었고, 시원한 바람과 햇빛으로 예전부터 농약을 덜 사용 하였다는데 한살림과 결합 하면서 유기농 쌀 생산 단지로 전환 되었다 한다.



는 옆에 비닐하우스에서 유기농 깻잎 수확이 한창 이었다. 농민들은 깻잎의 크기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공장처럼 일정하게 물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맞게 생산하여 포장하다 보니 생산 시기를 지나 웃자라는 것은 조금 클 수밖에 없는데 상품 가치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도시의 소비자가 조금만 이해 해주면 되는데, 아쉬움만 뒤로 한 채 세 번째 방문지인 푸른들 식품 가공공장으로 향했다.



푸른들 식품가공공장은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에 있다. 푸른들 식품가공공장은 푸른들영농조합이 만들었고, 푸른들영농조합은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에서 만들었다. 이처럼 아산의 환경 농업은 다른 곳에 비하여 독특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는 지금부터 30년 전 1975년부터 유기농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어 시도를 하였는데 생산은 1980년부터 시작되어 도시의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생산과 소비를 하다가 1987년부터 한살림에 공급을 시작 하면서 본격적인 체계를 만들어 1996년에 생산농민 60여명으로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를 정식 출범시켜 현재는 전체회원이 약400명으로 확대 되었으며, 생산물로서는 80여만평에서 쌀을 생산하고, 50만평에서 밀과 채소, 과일을 생산하고, 이밖에도 유정란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로써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는 이제까지 농민들이 생산, 유통, 소비 등 전반적인 것을 각자 책임져야 했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가 중앙 한살림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생산계획, 생산계약, 생산과 출하시기 조정, 생산기술 교육, 작목의 선택, 친환경 인증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생산자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제 생산에만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생산자가 증가되어 이

제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까지 확대되었다.



이것이 푸른들영농조합이고 2000년 10여명의 조합원이 1000만원씩 출자해서 만든 것이 현재 400여명의 조합원에 출자한 총액만도 6억원 규모이며, 친환경 농업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2004년도에 100억원, 올해에 150억원을 예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면서도 경영에는 독특한 철학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는 대량생산을 하여 낮은 가격에 파는데 비하여 푸른들 식품가공공장의 두부 생산의 경우 하루 1만모를 생산할 능력은 있으나, 소비자의 주문량만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격도 일반 두부보다 2배의 가격을 받고 있다. 공장의 운영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 이렇게 해야 신선한 부두를 오래두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푸른들 영농조합물류센터에서는 미곡을 소포장하는 자동기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파를 비롯한 채소도 이곳에서 소포장을 하여 한살림 중앙으로 운송을 하고 있다.



네 번째 방문지로 신봉리에 있는 토마토 비닐하우스를 방문 하였다. 비닐하우스의 주인은 아산시 한살림 매장 개장식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익어가는 토마토와 건강한 토마토 나무줄기를 보면서 먹음직스런 토마토 하나를 한 입 깨물어 넣고, 달고 상큼한 맛을 느꼈다. 다른 한편으로 나아닌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다. 네 번째 방문지를 보고 다시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2시간30분 정도 소요 되었다. 이번 방문에서 아산시가 이렇게 넓은 지역인지 새삼 느꼈다. 우리는 흔히 아산 하면 현충사, 온양온천을 쉽게 떠올리며, 지나는 길에서 천안에 붙은 작은 도시로 생각되었는데 이번 방문이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었다. 충남 홍성에 주형로 대표가 있었다면 이곳 아산에는 이호열 대표가 있다. 두 분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 성장과정, 학력, 리더십, 추진력, 환경에 대한 생각 등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고 느껴진다. 사회의 변화가 개인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이 처럼 개인이 사회를 변화 시키는 경우도 있

다. 아산. 홍성이 바로 그런 경우라 생각한다.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이호열 대표를 만나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질문을 드렸다.



첫 번째 최근 아산시는 농림부 산업클러스터에서 3년간 60억원을 지원 받는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지역순환형농업을 다지는데 사용한다고 보아도 됩니다. ①유기축산에 관한 사업(유기축산농가와 경종농업농가 부산물 교류에 따른 연구 및 실용화) 연암대학교와 협력 ②농민교육지원사업 ③지역 검사 시스템(생산물, 토양 등) ④지역특성화 연구사업(작목, 브랜드 등)⑤도농 교류센터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아산시가 도농복합 도시로 농업과 공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개발이 다른 곳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 자체를 일반농업지역과 친환경농업단지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경관보존지역 등에는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점차 확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자체의 확대와 공장 등의 무분별한 확대는 친환경 농업에 결

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일해 왔다고 봅니다.

세 번째 현재 푸른들식품가공공장, 푸른들영농조합물류센터, 사무실 등이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나, 물류, 의사소통, 인원의 효율적 사용 등은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하나하나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 순환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떠합니까?

하나로 모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나로 모으는 일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아산하면 지역순환형 농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역순환의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농 축산,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사료공장, 유기농 축산분의 퇴비화 공장, 농업생산 및 가공공장의 폐기물 처리 등이 순환적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 유기축산을 하기 위해 농업 부산물과 두부 가공공장의 비지 등을 이용한 사료화 연구를 연암대학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료의 영양분석 등 진행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전용 RPC(미곡처리장)를 만들어 친환경 미곡에서 나온 쌀겨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또는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친환경 농업에 더 많은 농민이 참여하여 잉여 농산물을 만들고, 그것이 소비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소비에 맞게 계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대기 하는데 이 문제가 직거래의 한계입니다.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협, 아산시, 농민 등이 잘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 가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잘 진행해 왔다고 봅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은 생태적 지역농업 될 수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국산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수입된 에너지(유류 등)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자체 에너지원으로 순환 할 수 없을까 고민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안에너지는 농민들이 자본이 없어 어렵습니다. 물의 재활용 순환시스템, 태양광, 태양력, 풍력 등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사무실을 나서면서 지역의 물질순환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 까지 환경 오염원으로부터 분리하여 순환한다는 점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는 이호열 대표의 말씀처럼 우리 농업이 가야 하는 방향이다. 화학영농으로 대표되는 시절 농업이 농업폐기물과 화학비료, 화학농약 등 많은 부분의 환경을 훼손시켰고 대표적으로 하천의 수질은 인, 질소의 과다에 따른 하천의 부영양화 등 많은 환경피해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농업이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나

그 피해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농업이 강조되고, 웰빙의 사회적 흐름에서 확대되어 유기농 농가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농산물 유기농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투입되는 물질순환 연결 고리를 지역 사회에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의 친환경 농산물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아산의 자원 순환형 모델은 우리의 농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간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 동네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을 집단으로 하는데 비하여 여기 아산시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지역 순환형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에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가와 관행 농가 사이에 커다란 시각차가 벌어지는데 아산이나 홍성의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극복하고 친환경 단지화 되어 간다는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요즈음 녹색농촌 마을을 방문하다보면 군데군데 인삼밭이 있고, 그 옆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여러 곳을 볼 수 있으나, 차마 그곳의 명칭을 밝히는 건 어렵다. 일반적으로 인삼밭 주변에서는 유기농 인증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집단화된 단지가 필요하다. 보다 많은 곳에서 친환경 생산 집단 단지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의 발전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며, 우리 시대의 희망이 될 것이다.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주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141

전화 041-542-1720

FAX 041-541-1725

이호열

주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141

전화 041-542-1720

핸드폰 017-421-1601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장

푸른들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기업도시의 성공조건

金容雄(충남발전연구원장)

지역균형발전과 기업 친화적 토지공급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충남 태안군을 비롯하여 전남의 무안, 영암·해남, 전북 무주, 충북 충주, 강원 원주, 경남의 사천, 경남 하동군·전남 광양군 등 8곳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했다. 이중에서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도시개발의 사업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도시(company town)란 원래 주민의 취업이나 소득 등 경제기반이 특정기업에 의존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기업도시는 특정기업이 도시경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구조가 단순한 것이 취약한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는 도시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도시를 지칭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기업도시는 단순히 민간개발업자가 건설하는 도시와는 차별화된다.

기업도시 건설제도는 몇 가지 뚜렷한 정책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업도시 건설은 수요자 주도의 도시개발을 통하여 공급자 중심의 토지개발과 공급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기업 친화적 토지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기업이 필요한 토지는 산업단지 형태로 정부와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됐다. 그러나 이 같은 토지공급형태는 생산기능과 연구개발, 교육 및 문화기능의 융합된 경제활동이 요구되는 기술혁신과 정보화시대의 토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기업도시 건설은 도시개발에 있어 민간부문의 창의와 자본을 유치하여 도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도시개발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영역이었다. 기업도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도시기반과 시설의 혁신과 공공 투자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기업도시 건설은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에게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전용, 인허가 및 토지취득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기업은 그동안 민간부문의 투자가 부진했던 지역에 산업투자와 도시개발을 추진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업도시의 건설은 시행주체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의한 생산 및 여가 등 경제적 투자의 증대와 함께 지역의 도시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이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 기업도시의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도시가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사전적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주체인 기업이 산업 및 경제투자의 핵심주체가 돼야 한다. 민간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낙후지역 내 도시경제를 선도할 산업투자 의무이행 없는 도시개발은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투기유발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시행주체의 최저 토지공급비율이 7-4%정도에 불과하나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최저 토지공급비율을 20-30%정도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점화가 방지되어야 한다. 토지용도 변경 자체가 지가를 결정하는 현실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사점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대추구형의 도시개발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비효율적 토지이용을 초래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분양 한도제, 분양된 토지의 전매금지와 분양토지의 개발 의무제의 적용방안에 세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업도시 건설이익과 경제 활성화의 혜택이 지역과 주민에게도 함께 주어질 수 있는 도시개발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기업도시 건설 투자에 있어 지역주민과 지방기업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기업은 기업도시 내 유치될 생산 및 기업 활동

에 참여 또는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기업도시 건설이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으면 한다.

지역경쟁력과 장소마케팅

金容雄(충남발전연구원장)

지역경쟁력이 국가 경제성장과 발전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세계화의 진전이 국가간 생산성의 비교우위 격차를 축소시킨 반면, 도시와 지역의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 혁신계획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의 내생적 발전역량과 경쟁력을 갖추어나가는 것은 남에게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과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노력에서는 세계화와 시장주도의 지식기반경제체제의 특성을 이해하여 여기에 맞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와 지역마다 특성적 매력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화시대에는 주민의 삶과 경제활동 공간단위로서 모든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역이 지닌 특장부분만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과 경관과 환경적 특성 및 역사적으로 축적된 산업 및 경제기반을 고려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차별성을 지니는 부문의 발견이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뉴욕 시 주변의 일부 지역은 편리한 접근성과 쾌적한 경관과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전국적 명성을 지닌 고급주거지로 육성하고 있다.

둘째, 주민생활의 만족과 문화적 활력의 촉진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화시대에는 지역경쟁력이란 산업생산의 증대와 생산비용 절감을 의미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도로, 상하수도, 항만 공항, 산업단지와 도시기반 확대와 노동력 확보 등 생산기반 조성이었다. 그러나 소득과

교육수준의 증대에 따라 지역경쟁력은 산업생산의 확대 보다는 지식기반경제를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의 유치 및 확보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문 인력은 삶의 질과 문화적 욕구실현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셋째, 첨단기술개발과 혁신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지식기반 경제체제 하에서 지역경쟁력이란 지역 내 경제 주체의 생산성과 제품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의미한다. 이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창출과 수용 능력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혁신기반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반듯이 첨단기술이나 제품의 생산에만 치중할 필요가 없다. 지역 내 기존의 생산 및 경제활동에 새로운 지식, 정보 및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경쟁력의 강화에서 중요한 것이 장소 마케팅이다. 장소 마케팅이란 지역의 특성적 매력과 발전 잠재력을 상품화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지역내부의 역량과 조건의 개선만 가지고는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역 브랜드의 개발이다. 지역 브랜드는 지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지명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지역 브랜드는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특성을 상징하거나 지역의 대표적 시설 또는 제품의 특성을 대변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지역의 경관과 환경적 자원도 장소 마케팅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데 상징적 도시 건축물, 도시색채, 도시설계와 경관조성이 그 좋은 예이다.

장소 마케팅 전략과 관련하여 도시와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특성적 매력과 주민의 발전 열망을 담은 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지역이 상품으로서 판촉의 대상이 되는 극심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거대한 사업이나 투자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주민의 창의와 선도 그리고 참여와 관심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대효과

- 명 칭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 2006 World Ginseng EXPO, Geumsan, Korea
- 기 간 : 2006. 9. 22(금) ~ 10. 15(일), 24일간
- 장 소 :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인삼유통센터 일원
- 주 제 : 생명의 뿌리, 인삼(Ginseng, Root of Life) - 부 제 : 인삼, 그 가치의 세발걸
- 회 장 구 모 : 129천평(인삼약초시장 포함)
- 예상 관람객 : 660천명(내국인 647천명, 외국인 13천명)
- 총 사 업 비 : 361억원(직접사업비130억, 지원사업비 231억)
- 주 자 공 간 : 53천평(대형 1만평, 소형 4만평, 학술회의 3천평)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개장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이며 예상 관람객 66만명(내국인은 647,000, 외국인은 13,000)이 엑스포를 관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엑스포장의 접근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 진입이 가능하고, 행사장 인근의 추부IC, 금산IC 연결도로 확포장등과 대형주차장 2만평, 소형주차장 3만평 확충회의 전용주차장 3천평을 마련 하고 소형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는 전용버스를 운행하여 관람객에 편의를 제공 하겠으며, 관람객의 숙박 대책으로는 금산군 지역내 1,161개의 객실과 인근 대전,논산,옥천,대둔산,영동,무주등의 모텔,펜션,유스호스텔,호텔을 당락하여 모두 11,368 개의 객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등급별, 유형별 관리 카드화하여 편리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엑스포장주변의 먹거리 금산의 맛은 특별하다 담백하고 깔끔한 음식맛 으로 자연에서 얻은 무공해 자료를 이용하여 사람몸을 자연에 가깝게 인도하는 건강식으로 금산이 아니면 맛을 볼 수 없는 특이한 요리들이 대부분으로 인삼 한정식과 인삼

의 본고장에서 맛 볼수있는 전통 삼계탕의 진미와 용강등 금강상류에서 어부들이 직접잡은 재료를 이용하는 얼큰한 이죽에 깔끔한 민물매운탕, 민물고기를 고추장에 조린 도리뱅뱅이와 민물고기 튀김도 그맛이 특별하고, 추부면 마천리 일대와 금산읍일원의 자연산 미꾸라지를 사용한 저래식 추이탕의 진수와 미꾸라지 튀김, 숙회, 조림등의 메뉴가 다양하고 지대한 음식 맛을 볼수 있을 것이다.

세제초으로 개최되는 금산인삼엑스포의 주제관(800평)에서는 인삼 인체 각 부분에 미치는 효능연구, 인삼의 발전과 비전, 인삼이 인류에주는 영양 데세지 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관(600평)에는 인삼제품 및 신기술 개발소개등 다양하게 구성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인삼전시관(1,018평)에서는 2천여년의 역사를지닌 인삼재배의 변천사와 유종, 인삼산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다양한 볼거리가 전시된 예정이며, 인삼교역관(300평)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등을 활용, 인삼생산 및 주요소비국 14개국 20개업체 100여명의 Buyer를 유치 투자상담을 실행하고,

국내의 100여개 업체 200여명의 생산·제조·유통 관계자에게 상품의 구매·상담·판매할 예정이며, EXPO가 끝난 이후에도 국내외의 Buyer들이 자유롭게 활용 하도록하여 실질적으로 고려인삼의 국제교역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엑스포행사장인 인삼약초시장 43천평(국제인삼시장, 수삼전다, 인삼전통시장, 인삼약방시장, 인삼종합소매센터)에 1,200여개의 점포에서 인삼과 관련된 갖가지 약초 판매도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금산 인삼엑스포시장은 서울의 경동시장·대구의 약령시장과 더불어 전국의 3대 약령시장의 하나이다.

인삼엑스포의 주요과제인 국제인삼학술회의 예시는 세계의 저명한 인삼관련 학자인 영국의 Northumbria대 Keneedy박사를 비롯하여, 일본의 도야마대 사이기박사, 미국 콜롬비아대 Scott Small·김태현박사, 경희대 유종훈교수, 고려대 서성욱박사, 서울대 양현욱박사, 울산대 조영길교수 등 8명은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세계적인 상품가치 창출에 기여 할 것이며, 이때 국내외 지명한 학자 800여명

이 참여하여 고려인삼의 신비로 자리 매김할 젊은 층의 과제와 노년층의 과제·인류건강 공동과제를 토대로 연구한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한 전기합을 구명, 과학적으로 이론을 정립하여 고려인삼과 타국인삼의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국제인삼학술회의에서는 중점적으로 인삼의 효능중 「기억력증진 효과」, 「노인성치매 효과」, 「항암 효과」, 「황에이즈 효과」등을 고려인삼의 세계화 브랜드화 추진의 호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엑스포기간의 이벤트 행사는 관광객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마당놀이 강쳐사”를 주제공연으로 인삼캐기, 인삼떡 만들기, 인삼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세계민속공연, 다악페스티벌, 관람객 참여부대놀이 있으며, 공식행사로 개막식, 폐막식, 국가의날, 시·도의날 등이 일리한한편 한가위 큰마당등의 상설행사가 매일 매일알려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는 물론 잊지못할 추억을 남겨갈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한 것이다.

이를위하여 지난해에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기반 체제구축, 조직위원 위촉(36명), 표상물

개발 및 등록, 홈페이지 구축, 전시연출 제안경쟁 공모와 10개분야 63개 단위 사업에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에는 4월중에 완공하는 인삼유통센터와 행사장 주변 순환 외곽도로(국도 37호) 개설등 총 18건 3,200억원의 SOC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전시연출 대행업체를 3월중에 선정하고, 행사장 시설공사를 6월중에 착수하는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내년도에는 국내외 80여개 업체 (국내65, 국외15)를 대상으로 전시참가를 유도하여 외국인삼과 고려인삼을 직접비교함으로써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 인삼중추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한편 인삼산업 제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양한 수익사업(31억원)에는 입장권 판매와 휘장사업의 공식후원자, 공급자, 상품화권자, 식음 및 판매시설에 대한 임대사업자등을 조기에 선정하고 대기업등을 방문하여 협찬사업자를 선정하는등 금산세 계인삼엑스포 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참여업체에게 기업이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제엑스포를 성취 하는데도 주력하게된다.

인삼엑스포 개최를 계기로한 지역경제 창출은 약 805 억원(직접수입 31 억원, 관광등기타수입 774 억원)으로 예상되는데 금산을 중심으로한 충남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시참가 유치활동 전개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여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으로 여전하는데 충청남도과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 그리고 금산군이 삼위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충남도의회-충발연 의정발전 워크숍 도의회-연구원간 협력파트너십 구축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종화)와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14일 오후4시 충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의정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환기 충청남도 의정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시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 전원과 다른 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대거 참여, 충남도의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행정자치부 자치인력개발원 이주희 교수는 "분권화시대의 지방의정 활성화방안"에 대해, 충청남도의회 최민기 의원(행정하마시)은 "충청남도 의회의 책임과 역할"이란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이어 도의원과 충남발 연구진간의 지역현안사업과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주고받는 등 도의회와 연구원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날 토론에서 정종화 행정자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충남발과 도의회 간의 업무협조 및 상호 정책연구가 비효율적이었지만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지역문제에 대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워크숍을 마친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앞으로 크고 작은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도의회와 공동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의견교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브랜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 충발연 산업디자인팀 주최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팀이 주최한 「도시브랜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 4월6일 오후3시30분 안면도 롯데 오션캐슬 세미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옥선 교수(호서대)가 '도시개발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유기준 교수(공주대)가 '하산의 문화관광을 활용한 문화마케팅 전략도시개발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남택영 교수(대덕대)가 '표정있는 도시만들기'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가졌다.

또 이충훈 팀장(충발연 산업디자인팀장)이 '도시브랜드 개발전략'이라는 주제로, 윤홍렬 교수(남서울대)가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가치창출'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가진 후 자유토론이 있었다.

이날 워크숍은 도시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자료 및 의견이 소개되어 도시브랜드의 개발 및 이미지 전략이 제시되는 등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연구원10주년 기념사업 연구원10년사 · 충남지역연구 발간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원 개원1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으로 '충남발전연구원 10년사'와 '충남지역연구'를 출간했다. (사진)

'충남발전연구원 10년사'는 중발연 10년의 역사를 기록, 정리한 것으로 이 책에는 연혁, 연구원의 변천과 현황, 연구사업 실적, 회고와 전망 순으로 되어 있다.

또 '충남지역연구'는 충남지역과 관련된 논문집으로 지역개발,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생태, 사회행정 순으로 되어 있으며 총 23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충남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백남훈)이 주최한 충남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4월28일 공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관련 연구자, 학생, 여성농업인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여성인적자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남미에 교수(대전대)가 '충남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현황과 인적자원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신욱 관장(청주 시니어클럽 관장)이 '여성 노인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재사회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김정미 연구관(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연구관)이 '여성농업인의 인적자원 실태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어 이제완 교수(공주대), 황창연 팀장(충남여성정책개발원 교육팀), 최영선 사무국장(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사무국장)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백남훈 센터장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여성인적자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충남여성인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혁신협의회 분과 포럼 개최 스웨덴 고텐부르크 박상철 교수 강연



충남지역혁신협의회 문화관광분과와 인적자원개발분과는 5월 25일 스웨덴 고텐부르크 대학의 박상철 교수를 강사로 「덴마크의 지역혁신과 지역개발 전략」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열린 토론이 있었다.

이날 포럼에서 박교수의 강의내용은 '투입된 노력에 비하여 충분한 구체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와 '덴마크의 혁신체제와 비교하여 문제점은 없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명강연이었다.

박상철 교수는 "한국에선 혁신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혁신이 반드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이테크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IT, BT, NT 등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역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산업에 혁신의 대상임을 지적"했다. 또한 세계화 전략의 하나로써, '세계 최고'를 추구하는 전략과 함께 '세계 유일'이라는 전략이 유효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토론에 나선 이영훈 인적자원개발분과위원장은 정부의 대학교육 관련 정책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인력양성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열린충남 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 은
충남 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www.cdi.re.kr

보내실 곳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138-42 충남발전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 (042)820-1123 · 1120 팩스 (042)820-1129